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797-10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정문수 | 연구 총괄, 점검·평가팀 운영
김민석 | 점검·평가단 서면평가 지원
민경찬 | 정책사례 모니터링
이 진 | 평가결과 분석

연구보고 E20-2022-2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 례

제1장.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주요 결과

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방법 ····· 1
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분석 ····· 6

제2장.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 17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 35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 50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 72

제3장.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1. 정책사례 모니터링 개요 ····· 87
2. 결과①: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 89
3. 결과②: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102
4. 결과③: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공공형버스) ····· 120

제4장. 결론

1. 점검·평가 결과 요약 ····· 135
2. 삶의 질 4대 전략별 평가 종합 및 개선 방향 ····· 136

[부록1] 2022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목록 ····· 145

[부록2] 세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151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190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221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286

표 차례

제1장

〈표 1-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 5
〈표 1-2〉 점검·평가 제외 과제 목록 ····· 6
〈표 1-3〉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 9

제2장

〈표 2-1〉 보건·복지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18
〈표 2-2〉 보건·복지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20
〈표 2-3〉 보건·복지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22
〈표 2-4〉 보건·복지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23
〈표 2-5〉 보건·복지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25
〈표 2-6〉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34
〈표 2-7〉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35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37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38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39
〈표 2-11〉 교육·문화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40
〈표 2-12〉 교육·문화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49
〈표 2-13〉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51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52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53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54
〈표 2-17〉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56
〈표 2-18〉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57
〈표 2-19〉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71

〈표 2-20〉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72
〈표 2-2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74
〈표 2-2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75
〈표 2-23〉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76
〈표 2-2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77
〈표 2-25〉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 78
〈표 2-26〉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86

제3장

〈표 3-1〉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사업 ····· 88
〈표 3-2〉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 평가 점수 ····· 90
〈표 3-3〉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현황 (2021년) ····· 94
〈표 3-4〉 해남교육지원청 세부 프로그램 추진 사항 ····· 96
〈표 3-5〉 해남교육지원청 사업 성과지표 이행 실적 ····· 96
〈표 3-6〉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평가 점수 ····· 103
〈표 3-7〉 2021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진행 기관 ····· 106
〈표 3-8〉 2021년 고려청자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프로그램 ····· 110
〈표 3-9〉 한독의약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일지 ····· 114
〈표 3-10〉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사업 평가 점수 ····· 121
〈표 3-11〉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주체별 유형 ····· 123
〈표 3-12〉 남원시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 126
〈표 3-13〉 공주시 공공형버스(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운행계획 ····· 128
〈표 3-14〉 공주시 공공형버스(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운행계획 ····· 12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천(제1~4차) ····· 3
〈그림 1-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 4
〈그림 1-3〉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수행도-영향력 분포 ····· 7
〈그림 1-4〉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기초로 한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분포 ····· 13
〈그림 1-5〉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경과 ····· 15

제3장

〈그림 3-1〉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92
〈그림 3-2〉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추진 절차 ····· 106
〈그림 3-3〉 2021년 운행된 전시 버스 전경과 내부 ····· 107
〈그림 3-4〉 자기 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 사진 ····· 111
〈그림 3-5〉 한독의약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활동 사진 ····· 113
〈그림 3-6〉 남원시 공공형버스 운행 노선(안) 사례 ····· 127
〈그림 3-7〉 공주시 공공형버스 운행 노선(안) 사례 ····· 129
〈그림 3-8〉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개선 전/후 예시 ····· 132
〈그림 3-9〉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관리모델 개념(충남 사례) ····· 133
〈그림 3-10〉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분석(충남 사례) ····· 134

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주요 결과

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방법

1.1.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삶의 질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실행과정과 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의무, 해당 실행 절차 등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계획을 3월 말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같은 해 6월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 제42조).

❍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제4차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의 운영 방안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방법으로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책환류 절차에서는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개선 의견 및 재원 배분 방향이 제시되면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수행하는 지역평가는 지역과 현장 차원에서 수행되는 삶의질 정책 실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절차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정책사례 모니터링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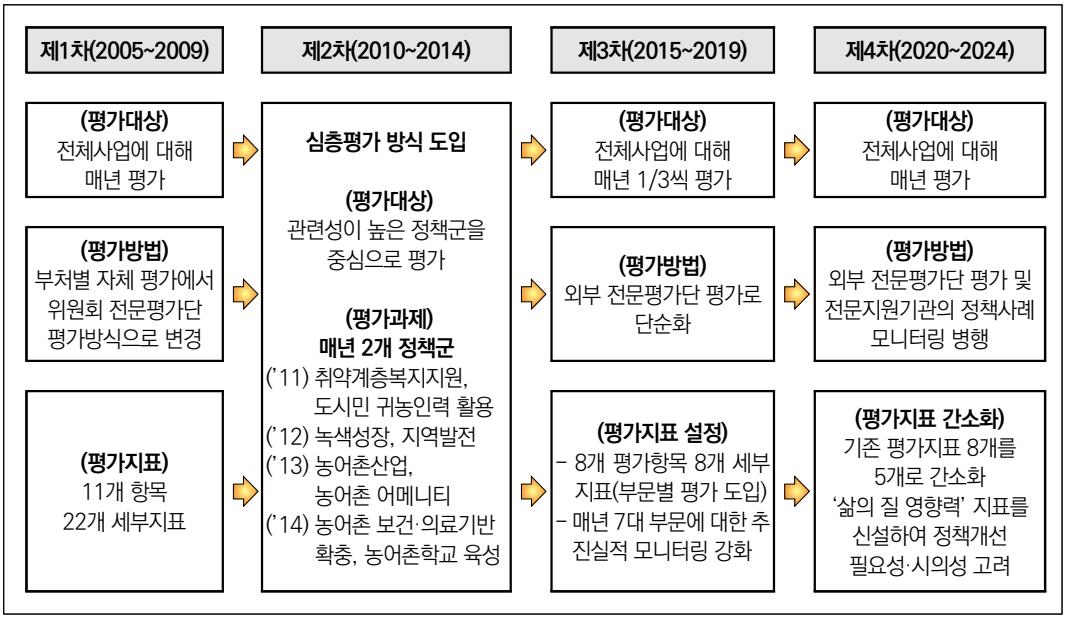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일자리의 4대 전략별 과제 전체 178개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6개와 지방으로 이양된 1개 과제를 제외하고 1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1)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평가절차에 대해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개별 정책의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천(제1~4차)



1.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방법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크게 서면평가와 정책사례 모니터링 절차로 구성된다.

- 서면평가는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른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별도 정책별로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서면평가)** 서면평가에서는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이 과제별 그룹평가를 실시하였다.

- 점검·평가단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분야별 교수와 연구자,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추천위원 중 삶의 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43인을 위촉하였으며, 삶의 질 4대 전략 부문별로 분과(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를 구성하였다.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실적에 대해, 한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였고, 과제별로 평균 점수를 도출하였다.

  * 평가위원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해 평가과제를 배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별 평가위원은 비공개하였다.

- 서면평가는 정책 수행도(100점 만점)와 삶의 질 영향력(1~5등급)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정책 수행도: 부처에서 제출한 전년도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정책 실행 수준을 평가한다.
  *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반영 여부,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의 규모·범위 확대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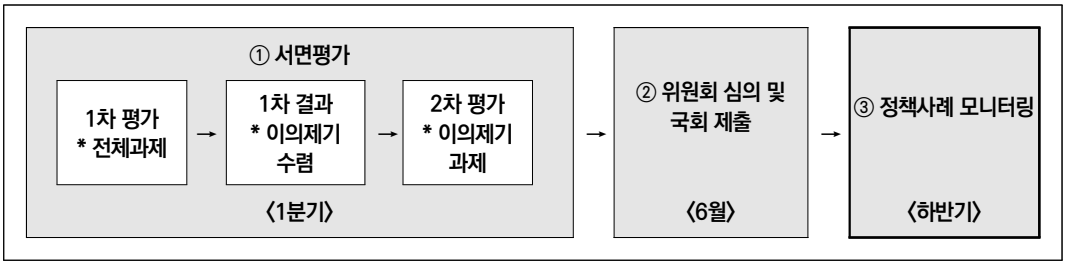
- 점검·평가단의 분과장은 과제별 평가 결과와 전문지원기관이 제시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내용을 보완하고, 4대 전략별로 종합평가 의견과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앞서 실시한 서면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다.

- 서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가 미흡한 과제, 혹은 점검·평가단에서 정책 시의성이 높아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서면평가의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국회 제출 등이 이루어진 이후인 매년 하반기에 진행한다.

〈그림 1-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1.3.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는 1. 계획·집행, 2. 정책 성과, 3. 정책 환류, 4. 삶의 질 영향력의 4가지 부문으로 총 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 '1. 계획·집행' 부문은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1-2.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로 구성되며, 평가하는 과제의 사업 목적과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 예산의 집행 비율 및 추진 일정 준수 수준이 각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된다.
- '2. 정책 성과' 부문은 '2-1. 사업 실적'과 '2-2. 사업 효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대비 달성 수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도출한다.
- '3. 정책 환류' 부문은 '3. 정책 개선 노력'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 환류를 통한 제도 개선, 정책 수요 반영, 사업 성과 제고 등의 노력을 평가한다.
- '4. 삶의 질 영향력' 평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미치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를 5개 등급으로 제시한다.

〈표 1-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사업 목적 및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실행방식·추진체계 구축 수준	20점 (기본 12점)
		1-2.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수준 사업 일정 준수 정도	20점 (기본 12점)
	2. 정책 성과	2-1. 사업 실적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수준 사업 성과지표 설정 정도	30점 (기본 20점)
		2-2. 사업 효과	삶의 질 개선 효과 창출 정도 정책 효과 검증 객관성 정책 우수사례 도출	20점 (기본 10점)
	3. 정책 환류	3. 정책 개선 노력	제도 개선 노력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참여 수준 사업 범위·규모 확대 노력 정책 홍보 노력	10점 (기본 6점)
	점수 총계			100점 (기본 60점)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필수서비스 전달 관련성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개선 사업실행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 제고 가능성	5점 척도

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분석

2.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주요 결과

2.1.1.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주요 특성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총 178개 중에서, 아래 〈표1-2〉에 제시된 과제를 제외하고 171개에 대해 수행하였다.

〈표 1-2〉 점검·평가 제외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 제목	사유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사업 종료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3-1-1-6	내항 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4-3-1-1	농업법인 취업 지원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지방 이양으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지표별 점수)**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세부 과제별 정책 수행도의 평균 점수는 90.0점(최고 99.3, 최저 73.3)이며,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은 평균 4.1등급(최고 5.0, 최저 2.3)으로, 2021년 점검·평가 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정책 수행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의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는 90.0점으로, 전년인 2021년도 점수(89.3점) 대비 0.7점 상승하였다.

* 정책 수행도 평균(100점 만점): ('20) 90.3점 → ('21) 89.3 → ('22)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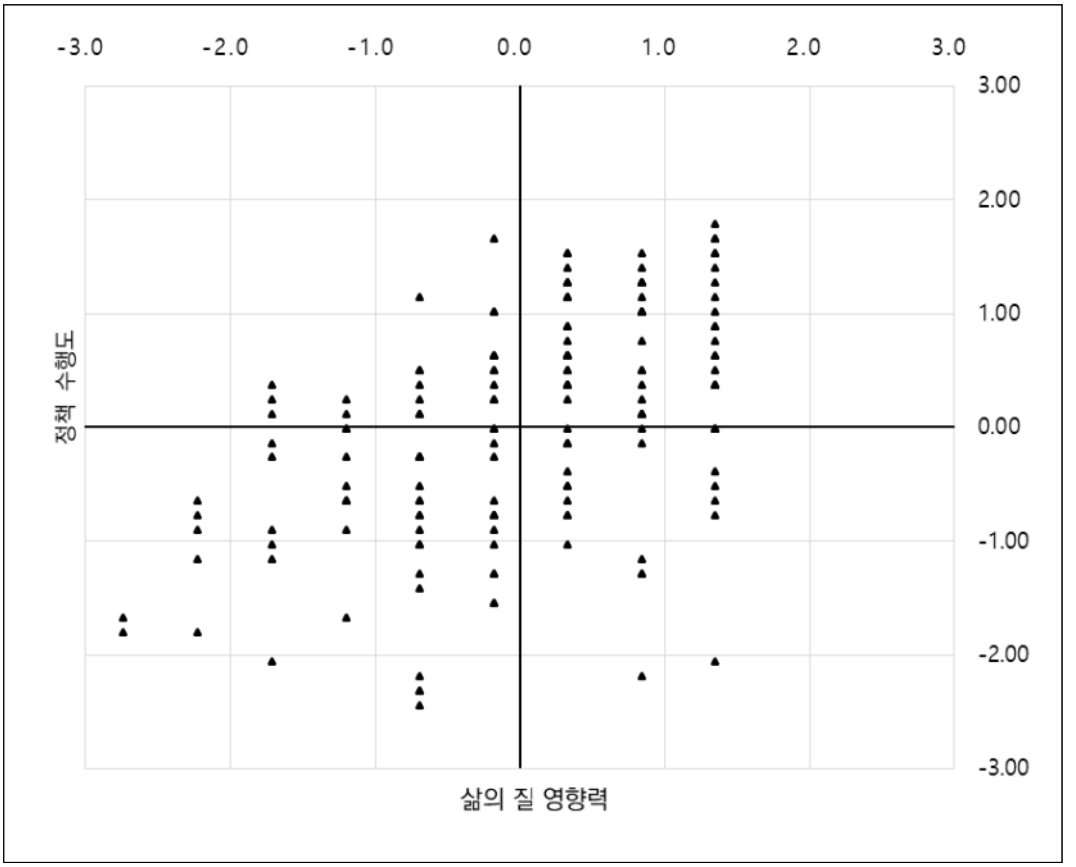
❍ **(삶의 질 영향력)**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세부 과제의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4.1등급으로 전년인 2021년에 비해 0.1등급 상승하였다.

- 점검·평가 대상 과제 전체 중에서 4등급 이상인 과제가 118개(69.0%)로, 전반적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 삶의 질 영향력 등급(5등급): ('20) 4.3등급 → ('21) 4.0 → ('22) 4.1

〈그림 1-3〉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수행도-영향력 분포



2.1.2. 삶의 질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 보건·복지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전략에 해당) 과제들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수준이 타 전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양호하다.

- 보건·복지 전략 39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평균 90.0점으로 전체 과제의 평균 점수와 동일하며,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4등급으로 타 전략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전략) 과제들의 정책 수행도는 시행계획 전체 과제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 교육·문화 전략 31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평균 91.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2등급으로 전체 과제에 비해 정책 성과와 중요도 모두 약간 높다.

  * 제4차 기본계획상 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과제는 총 35개이지만, 교육부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 이양 등의 이유로 4개 과제가 종료되어, 총 31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전략)의 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공히 전체 과제 평균에 못 미친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 64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평균 88.8점으로, 2021년도 점수(89.1점)에 비해 0.3점 하락하였으며,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9등급으로, 삶의 질 전체 과제에 비해 정책 성과와 중요도 모두 약간 낮다.

  * 제4차 기본계획의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 과제는 총 66개로, 이중에서 2개 과제가 종료되어, 총 64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 경제·일자리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전략) 과제들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수준이 전체 과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경제·일자리 부문 37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평균 91.3점으로, 작년 평가 점수(89.5점)에 비해 1.8점 향상하여, 4대 전략 부문 중에서도 정책 수행도 향상 폭이 가장 크다.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제4차 기본계획의 경제·일자리 전략 부문 과제는 총 38개로, 이 중에서 1개 과제가 종료되어, 총 37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1-3〉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4대 전략 부문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등급(등급)
보건·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39	90.0	4.4
교육·문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31	91.1	4.2
정주생활기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64	88.8	3.9
경제·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37	91.3	4.1
삶의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171	90.0	4.1

주: 1) 정책 수행도 점수: 100점 만점, 2) 삶의 질 영향력 등급: 5등급 척도 기준.

2.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과제의 분포 특성 및 유형화

❑ 시행계획 점검·평가 과제별 특성 분포 및 유형화 방법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에 따른 점수 분포를 파악하여 과제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 전체의 상대적 분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수행도 점수와 영향력 등급을 z점수(z-score)로 표준화하였다.

- 이 중에서 z점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과제는 점수 분포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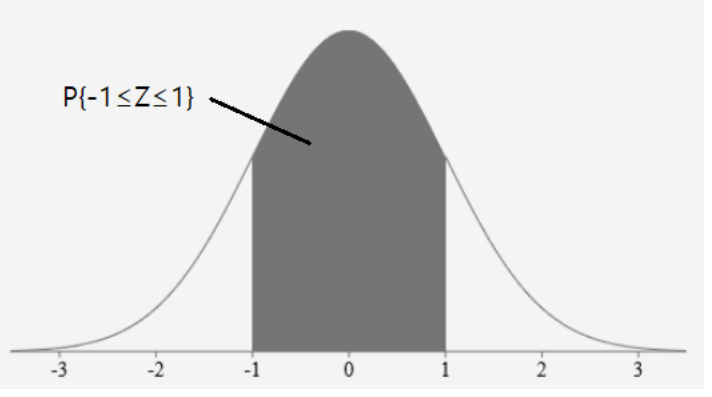
  * 전체 과제의 z점수 분포 중에서 z점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과제들은 대부분 과제의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표준화(z-score)를 통한 과제별 유형화 방법〉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171개 과제의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과제를 우선 분류해 낸 다음, 과제별 특성이 보다 명확한 과제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 과제별 분포 특성은 '삶의 질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의 z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점검·평가의 두 가지 지표인 '삶의 질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의 점수가 평균에 가까운 경우, 다시 말해 z점수의 절대값이 1 미만일 때 과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과제로 간주한다.
- 평가 지표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z점수(z-score) 기준으로 과제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확률($P\{-1 \le Z \le 1\}$)은 0.683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도와 영향력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두 평가지표가 모두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확률은 0.466이다.

〈표준정규분표의 확률밀도곡선과 표준편차 절대값 1이하의 확률〉



- 2022년 시행계획 171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는 75개, '특성이 명확한 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96개였다.
- '특성이 명확한 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수행도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성과 확산형', '중점 개선형', '장기 개선형', '지속 유지형'으로,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는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성과 확산형

❍ 성과 확산형은 z점수 기준으로,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0보다 큰 과제 가운데,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0부터 1 사이에 있는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2022년도 점검·평가 결과, 전체 171개 과제 중에서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38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5.9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7등급이다.

- 성과 확산형은 과제별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해당 정책 과제를 이슈화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정책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성과 확산형은 삶의 질 정책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동시에 정책의 성과 또한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들이다.
- 성과 확산형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과 취지가 설정된 과정, 타 정책 운영 사례와 구별된 사업 수행 방식, 정책 추진의 혁신 과정,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방식과 추진조직 등 정책 성과가 우수하게 평가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정책 사례에서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점 개선형

❍ 중점 개선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은 0 초과, 정책 수행도는 0 미만인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이 1 미만, 정책 수행도는 -1 초과인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총 13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85.9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8등급으로 분석된다.
- 중점 개선형은 삶의 질 영향력은 높으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유형으로서, 정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삶의 질 정책 전반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 중점 개선형에 포함된 과제들은 소관 부처가 미진한 사업 성과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과제들이 정책 목표와 취지에 대응하여 정책수단이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책 예산 등의 자원 투여 대비 실적 달성 여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정책전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장기 개선형

❍ 장기 개선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가 모두 0보다 작은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가 모두 -1부터 0 사이에 있는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장기 개선형 과제는 총 36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84.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3등급으로 분석된다.
- 장기 개선형은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 점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된 유형에 해당하여, 과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관 부처가 정책 운영 취지와 목적, 정책 실행수단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장기 개선형의 과제들은 유형 특성상 해당 사업의 목적이 삶의 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정책 운영의 목적과 내용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에 계속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점검·평가를 통해 지적된 수정 사항이 정책 소관 부처가 해당 사업의 목표 수정, 성과 달성 수준 등의 개선에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지속 유지형

❍ 지속 유지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은 0 미만이고 정책 수행도는 0 초과인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이 −1 초과, 정책 수행도는 1 미만인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지속 유지형 과제는 총 9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93.4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5등급으로 분석된다.
- 지속 유지형은 삶의 질 영향력은 낮으나, 수행도 점수가 높은 유형으로 정책 성과 달성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촌의 불리한 삶의 질 특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속 유지형의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정책 성과는 우수한 유형이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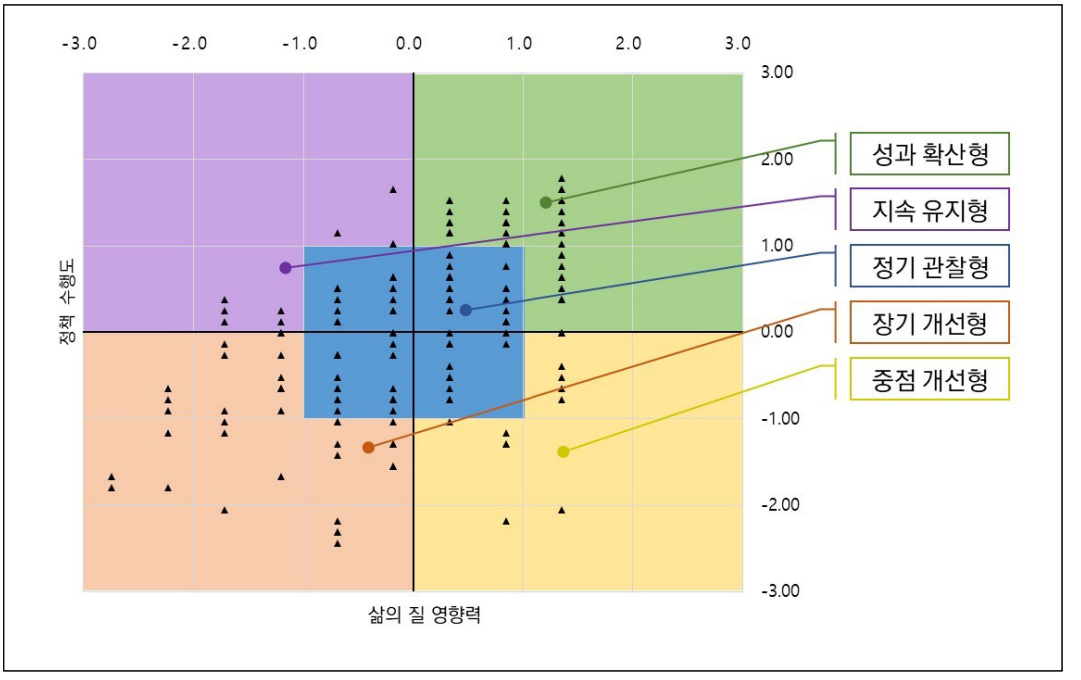
따라 삶의 질 정책의 대상 과제로서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 취지를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정기적 관찰형

○ 정기적 관찰형의 과제들은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로 분류되는 과제들이다.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의 절대값이 모두 1 미만인 과제에 해당한다.

- 정기적 관찰형 과제는 총 75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90.5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2등급으로 분석된다.
- 정기적 관찰형은 삶의 질 정책 과제 중에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2021년 95개에 비해 20개 감소하였다.
- 정기적 관찰형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취지 및 성과 개선을 추진해야 할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4〉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기초로 한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분포



2.3.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 및 위원회 보고 결과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

- 2022년 12월, 위원회 사무국(농식품부 농촌정책과)과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은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평가지침을 각 과제 담당 부처에 전달하였다.
- 2023년 1월 말, 2022년 시행계획 사업 실적 자료 등 점검·평가를 위한 과제별 평가자료를 담당 부처로부터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했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에 보완을 요청하여 3월 중순까지 자료 취합을 완료하였다.
- 2023년 1월 말, 전문지원기관은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1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계획과 방법을 협의하였으며, 2월 초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2주간 점검·평가단은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서면평가를 수행하였다.
- 2023년 3월 초, 전문지원기관은 점검·평가단의 평가의견과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점검·평가 결과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를 보완하였다.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6월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안건에서는 향후 정책 홍보 및 성과 확산이 필요한 과제를 '우수 과제'로, 정책 추진 목적 및 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선 필요 과제'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우수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가 95.0점 이상으로 정책 취지와 내용이 삶의 질 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정책 성과가 우수한 과제로 볼 수 있으며, '개선 필요 과제'는 정책 수행도가 80.0점 미만으로 향후 성과 제고가 필요한 과제다.

〈그림 1-5〉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경과

구 분	세부 내용	완료 일정	비고
평가지침 수립	• 2022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22년 12월	사무국
	• 2022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송부	'22년 12월	사무국 → 각 부처
서면평가 및 위원회 보고	• 2022년 시행계획 사업실적자료(평가근거자료) 제출	'23년 1월 말	각 부처 → 사무국
	• 점검·평가(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요청에 따른 자료 보완	2월 말	점검·평가단
	• 점검·평가 결과(초안) 부처 전달	3월 초	사무국 → 각 부처
	• 부처 이의신청	3월 중	각 부처 → 사무국
	• 부처 의견 반영 및 보완 후 점검·평가 결과 도출	4월 초	점검·평가단
	• 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협의 실시	4월 중 ~ 5월 말	각 부처·사무국
	• 삶의 질 위원회 보고 및 결과 발표	6월	삶의 질 실무·본위원회
정책사례 모니터링	• 서면평가 결과 심층점검이 필요한 과제 대상으로 수행	'23년 하반기	사무국

2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1.1. 평가 결과 개요

❍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4등급이다.

- 총 39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전년도보다 2배로 증가한 12개로, 부문 내에서 30.8%를 차지했다. 반면 장기 개선형과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도 각각 8개씩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으며, 지속 유지형 과제는 없었다.

❍ 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 ‘어업인 특수 건강검진(1-1-3-2)’ 사업은 검진 대상의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여성 어업인의 건강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3-1-1)’ 사업은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산점을 둠으로써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 특히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의 개선과 보조지표 등을 활용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1-1-2-2)',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1-1-2-4)' 사업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에 더해 사업대상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1-4-3-4)' 사업의 경우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령농업인 노후 소득 보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1-4-3-5)'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급여 수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효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보건·복지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12	95.6	4.8
중점 개선형	8	85.3	4.9
장기 개선형	8	85.1	3.2
지속 유지형	0	-	-
정기적 관찰형	11	90.8	4.2
보건·복지전략 전체	39	90.0	4.4

1.2. 보건·복지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1.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12개 과제가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1-2-2-1)'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개선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 전문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현장간담회 등 상향식 의견수렴 방식을 적용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침 등을 마련하였다.

  * 시설개선비 사용기간을 기존 '1~2년차'에서 '2~5년차'로 변경하고, 기관연계 시 비용부담 제한을 삭제함.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1-3-1-2, 1-3-1-3)' 사업은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 수준을 향상하도록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지원 대상을 농촌 지역 소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의 폐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부담이 크고 영유아 수가 적어 연령별 반 편성의 실효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혼합반 기준을 완화함.

-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돌봄 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주말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 돌봄대상: (기존) 만 2세~만 5세 → (확대)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1-4-3-1)' 사업은 가입연령 기준과 담보 농지 요건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 농업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 부족과 자녀 결혼 등 목돈 필요성이 있고, 유사연금인 주택연금의 최소 가입연령이 만 55세인 점을 감안하여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0세로 완화하였다.

- 2022년 신규 가입 건수 및 수신인출금 수요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4.3% 증가한 2,408억 원이 지급되었다.

〈표 2-2〉 보건·복지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1-2-1-1	농촌형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96.0	5.0	• 농촌지역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동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사회적농업 등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조하였고 농촌 통합돌봄의 지역 특성을 강화함.	삶의 질 우수과제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2.0	5.0	• 현장간담회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등 적극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	95.3	4.7	• 적절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촌 보육의 품질을 향상함.	삶의 질 우수과제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6.7	4.7	• 종사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농어촌 보육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함.	삶의 질 우수과제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95.3	4.7	• 물놀이와 부모교육 등을 방문형으로 제공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정책 성과를 제시함. •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함.	삶의 질 우수과제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7.3	5.0	• 다년간 수행해온 사업으로 관계부처 협력, 예산 확대 노력 등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춤.	삶의 질 우수과제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4.7	5.0	• 대상자 확대, 소득금액 인상, 지원료 인상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도 이루어짐.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2.0	5.0	•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존 정책의 개선을 도모함.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96.7	4.7	•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 약관을 개정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을 통폐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삶의 질 우수과제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5.3	4.7	•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 보험 보장 기간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	삶의 질 우수과제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8.0	5.0	• 영세한 선주 및 어선원의 작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선주날인제도 등을 폐지하고, 어선원 질병급여에서도 특례 요율 반영을 제외하는 등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춤.	삶의 질 우수과제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8.0	4.7	• 누적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을 반영한 기금예산 확보로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	삶의 질 우수과제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우수사례 〉

❍ 계룡시 다함께 돌봄센터(충남 계룡시)
- 운영 기간: 총 6개월(5~7월, 9~11월)
- 농업인들의 돌봄방 추가 운영 요청에 따라, 1개월 추가 돌봄방을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돌봄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방 참여를 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증가하였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향상됨.

1.2.2.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고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 8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1-1-2-1, 1-1-2-2)'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각각의 사업 모두 정책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117개 취약지 운영기관에 222억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소방청의 사업은 구급차 확충을 위한 성과지표에 따른 정책 목표를 양적으로는 충분히 달성했지만,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1-4-3-5)' 사업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와 출산급여 지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성과지표가 유일하다. 향후 정책에 출산급여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률 증대를 위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출산급여 지급 수준의 향상 정도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3〉 보건·복지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79.3	5.0	• 성과지표 측정 등 부분에 있어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88.0	5.0	• 구급차 확충 수는 양적 확대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이지만, 서비스 수혜자 측면에서 접근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6.7	5.0	• 소아청소년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현재의 지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대상자의 만족도나 체감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0.0	5.0	• 시범사업에서의 정책 효과 및 개선 과제 등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도 개선 및 실행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78.7	4.7	• 예방과 조기 치료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 어업인안전보험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0.0	5.0	•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마음안심버스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본 사업 수행인력(지자체, 현장실무자 등) 및 수혜자 모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6.0	5.0	•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보육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확충되는지 여부, 시설 이용 아동의 수,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4.0	4.7	• 본 사업은 복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두 개로 상정하거나, 해당 여성들의 출산급여 수급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함.	

1.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 8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1-1-1-1)’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점수로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정책 목표의 달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국고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공공의료 역할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정책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1-4-2-7)' 사업은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은 충실하게 거쳤으나, 일반 농어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자문위원단(리빙랩)을 운영하며 연안활동 장소에 대한 위험도 예측체계 개발 리빙랩 회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나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

〈표 2-4〉 보건·복지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3.3	4.0	•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로 제시되어 있는 현재의 성과지표보다 정책내용을 드러내는 정밀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3.3	4.0	• 해당 사업을 통한 급여개선의 효과가 실제 농촌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88.7	3.0	• 계획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87.3	3.3	• 국고 지원을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4-2-5	어업작업 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0.7	2.7	• 국립수산과학원이 시행 주체로서 어업인의 현장 접근성이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1.3	2.3	• 정책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잘 수렴하였으나 일반 농어촌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9.3	3.0	• 현행 평가지표 측정산식에서 어업인 대상 모든 경미범죄를 포함하지 말고, 소형어선의 생계에 직접 관련된 경미범죄만으로 한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음.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86.7	3.3	• 여성농업인 복지지수 지표는 단순한 근거자료만으로는 측정하기에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복지지수 산정 방식이 더욱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측정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1.2.4.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다.

1.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해당하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11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1-1-2-3)' 사업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개별 시·군 차원에서 분만병원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분만아 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몇몇 지자체를 엮은 권역단위 거점분만병원을 운영하고, 효율적 연계 이송수단 마련, 종합적 산모·태아 일상관리체계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1-2-1-2)'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 대상의 영농도우미 지원' 및 '고령·취약가구 대상의 행복나눔이 서비스 제공'의 세부사업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정책에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 사업별 사업추진체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나눔이 예산과 지원 활동비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다.

  * '22년 최저임금(9,160원/시간) 수준을 반영하여 행복나눔이 1일 2시간 활동비를 4천원('21년 15천원 → '22년 19천원) 인상

❍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1-4-3-4)' 사업의 성과지표는 현재 주민 만족도조사를 통한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정책 달성도를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전율 등의 지표를 병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당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고,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혜자 대상 87.5점의 만족도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5〉 보건·복지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92.7	4.3	• 시장에 맞는 건축단가 조정을 통해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참여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90.7	4.7	•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86.0	4.0	• 센터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의 지역별 파급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4.0	4.7	• 사업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1.3	4.7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의 경우, 영농도우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사업추진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87.3	4.3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1대당 지원 규모는 여러 해 동안 동일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1-4-2-6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91.3	4.0	• 현재 성과지표 외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관련 추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92.7	3.7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 수당을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3.3	4.3	• 고령 농가의 경우 기상재해 대응이 더욱 힘든 여건이므로 가입 독려와 지원비 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93.3	4.3	•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에 관한 성과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86.0	3.7	• 현 성과지표인 보조금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외에, 사업의 성과(고령농업인 노후 소득 보전율 등)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병용할 필요 있음.	

1.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1.3.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사업 목적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으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향후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특성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1-1-1-1)'는 시설과 장비 보강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권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능 특성화'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필요한 기능을 두루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1-1-2-6)' 사업의 목적이 연구조사인지, 어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인지 불분명하여, 정책 취지와 내용을 주민 삶의 질 향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정책군 사업들은 불리한 교통 접근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향후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의 확충 등의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 취약지 해소)(1-1-2-3)' 사업은 농어촌의 분만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의료기관 지정 중심의 정책수단으로는 농어촌 분만 취약지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의료기관에서 일할 산부인과 전문 의료인력 확보,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태아의 일상관리체계 구축, 복수의 지자체·기관 간 이송수단 공동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편이지만, 일부 과제의 성과지표는 소극적이거나, 정책 목적과 맞지 않게 설정되었다. 현실적 필요 수준과 정책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재점검하여, 연차별 목표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부적합한 성과지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된 일부 성과지표는 향후 목표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1-1-2-4)'은 사업 대상 지역을 매년 1개소씩 늘리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향후 목표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성과지표들은 향후 대체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1-1-2-2)'은 사업 성과지표를 단순히 '당해연도 구급차 구매 계획 대비 당해연도 구매 수량 백분율'로 설정하여, 지역별 시급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어업인 특수건강검진(1-1-3-2)' 사업은 성과지표를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수혜율'로 설정하여 정책 수혜자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건강검진 서비스의 체감 효과 제고를 위해 추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1-2-5)'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작업성 질병 조사 연구 실적(건)'으로 설정되어 방문의료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1-1-3-3)'의 성과지표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시·도 수'로 설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업인의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 그러나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및 언론보도 및 홍보를 통한 정책 환류 노력이 미흡했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1-1-1-1)'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1-1-1-2)'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언론보도 노력은 부족했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1-1-2-1)'과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1-1-2-2)'은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과 홍보가 부족했다.
  *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1-1-2-3)'는 정책 개선 및 언론보도 노력이 부족했다.
  * '농업인 특수건강검진(1-1-3-1)'은 검진 현장 모니터링, 정책 수혜자 및 실행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검진 절차를 효율화하고,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형 검진 사업을 추가하였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1-1-2-6)'는 2021년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성과와

평가위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어업인의 신체 부담 작업 등의 노출 정도와 질환과의 상관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질환 예방 방안을 마련하였다.

1.3.2.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통합 돌봄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는 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게 사업 목적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으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정책군 과제들은 돌봄에서 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시범사업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촌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1-2-1-1)'은 농어촌 주민과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전국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 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시·군 단위와 읍·면 단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였으나 부처 간 협력이 부족했다.
  * '농촌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1-2-1-1)'은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협업이 부족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1-2-1-2)'은 영농도우미는 일시적 인력지원 성격의 사업이고, 행복도우미는 방문형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사업의 성격과 대상에 적합한 별도의 추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성과지표는 지표의 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농촌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1-2-1-1)'은 성과지표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자립생활 유지률'로 하였는데, 자립생활 유지의 측정 준거가 '6개월 이상 사례관리 대상자'인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성과지표 개선에서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농업 연계 실적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1-2-2-1)'는 과제 평가가 사업의 양적 확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향후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용자 특성 등에 관한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 농어촌 지역 통합 돌봄 복지 체계 활성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농촌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1-2-1-1)'은 통합돌봄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구체화 및 표준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향후 새로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1-2-1-2)'은 영농도우미 임금 단가와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인상하였으나 이 사업의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통합돌봄 추진'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다. 그리고 도우미 인력이 부족한 인구 과소 면지역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1-2-2-1)'는 현장간담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사업의 효과성은 명확하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향후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게 과제 목적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으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육아 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3-1-1)'은 보육과 교육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농어촌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1-3-1-2)'는 취약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공립 시설로 운영·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도 상당하므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1-3-2-3)'은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마을 방문 서비스 방식을 채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동식 놀이 교실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지침이 없어서 이용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소규모 국공립 돌봄 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미충족 수요를 감안하거나 농어촌의 중장기적 보육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 보육·육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원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수요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1-3-1-2)'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농

번기 아이돌봄방)(1-3-1-3)'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미충족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업의 미충족 수요를 조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의 중장기적 보육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3-1-1)'은 농어촌의 중장기적 보육 수요를 예측하여 '2025년까지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우수하지만,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성과지표는 지표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의 수요를 좀 더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1-3-1-2)'는 공동아이돌봄센터당 영유아 수,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관한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농번기 아이돌봄방)(1-3-1-3)'는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매년 변경되어 성과관리의 의의를 살리기 힘들었다. 그러나 2022년에 성과지표를 수혜자(학부모)의 이용 만족도로 변경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1-3-2-1)'은 현행 성과지표인 '차량운영비 국비 집행률'보다는 국비를 집행해서 몇 곳의 농어촌 어린이집이 차량 지원을 받았는지 혹은 그렇게 차량 지원을 받아서 몇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3-2-2)'은 현행 성과지표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비 지원실적'은 예산집행액만을 단순히 평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농촌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혹은 농촌보육교사의 이직율 등)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정책 개선 사항이나 언론보도, 홍보 관련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3-1-1)'은 국공립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점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지역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 개선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1-3-1-2)'는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지역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시설 확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언론보도나 홍보 관련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농번기 아이돌봄방)(1-3-1-3)'는 정책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예산 및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1-3-2-3)'은 놀이버스가 찾아가는 범위를 확장하였고, 현장점검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잘 수렴하였다.

1.3.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농어업인·농어촌주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작업 안전을 보장하며, 노령·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게 과제 목적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으며, 이 정책군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척 큰 것으로 판단된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지원과 작업 안전 보장을 강화하였고, 노령·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향후 지원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좀 더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1-4-1-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4-1-2)', 그리고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1-4-1-3)'은 향후 농어업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
  *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1-4-3-1)'은 농지기반 연금 지급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목표와 잘 부합한다. 노후 소득 대책이 미흡한 고령 농업인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사업들은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1-4-2-7)'은 국민의 해양 여가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으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평가에 이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1-4-2-9)'는 사업의 목적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와의 부합성이 낮다.

❍ 농어업인의 직업적 특성, 농어촌의 불리한 교통 접근성, 인구 고령화 특성에 따른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

-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1-4-2-1)'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가입률이 낮아졌다. 따라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보험상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업 재해보험 사업 내실화(1-4-3-2)'는 기상자료 분석에 따른 주요 피해 원인과 작목 등을 분석하여 보험 대상 작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농가의 경우 기상재해 대응이 더욱 힘든 여건이므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어선원·어선 재해 보상 보험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1-4-2-2)'은 임의가입 대상인 어선원보험(3톤 미만)의 보험 가입률(2022년 10.8%)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일부 사업은 향후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1-4-3-4)'은 사업(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농지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대체로 당초 달성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 건강·연금보험 지원 관련 과제들은 대부분 당초 설정한 연차별 목표치의 연차별 증가 정도가 미미하여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4-1-2)'은 당초에 설정한 연차별 목표치의 증가 정도가 미미하여, 달성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1-4-3-3)'는 전년도 가입률(29.7%)과 과거 가입률을 감안할 때,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않다.
- 일부 성과지표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게 설정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1-4-2-3)'은 논문 게재 건수, 정책제안 건수 등을 정책 성과 실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대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1-4-2-5)'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호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1-4-2-6)'은 '연근해어선 안전점검 이행율' 이외에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관련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사업규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1-4-2-7)'은 성과지표가 보고서 건수여서 결과지표로서 부적절하다. 향후 연구 결과가 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좀 더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1-4-3-5)'은 성과지표가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목적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출산급여 지급 대상 연령대의 여성농업인에 국한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환경 기반 조성(1-4-3-6)'은 세부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행 성과지표는 농진청 고유의 기능(기술 개발)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 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 서비스 개발 결과가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환경 기반 조성에 얼마나 적용되었는가(예를 들면, 서비스 개발 결과의 시책화 및 제도화 반영 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설문조사, 현장 방문, 간담회, 설명회, 정책토론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일부 사업에서는 언론보도나 홍보 등 정책 성과 확산의 노력이 미흡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1-4-1-1)'은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준소득 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과 같은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4-1-2)'은 지속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연금보험료가 경감되었으나 2022년에는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이 이루지지 않았다.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1-4-1-3)'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즉시 가입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어촌주민의 의견수렴, 언론 보도나 홍보 등의 노력은 미흡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1-4-2-1)'은 보험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확대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1-4-3-1)'은 가입 최소연령 인하, 담보 농지 요건 완화, 장기영농인 및 저소득층 우대상품 출시와 같은 제도개선을 하였다.

1.4. 보건·복지 전략의 개선 방향과 과제

❍ 대체적으로 성과 목표치를 양호하게 달성하였으나, 일부 과제의 성과지표는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부 과제의 성과지표는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대체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으로 설정된 일부 성과지표는 향후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성과지표들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거나 대체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의 일부 과제들은 제4차 기본계획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의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 사업 중에서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시범사업은 전국 사업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정책군 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정책군은 주민의 보육 및 육아 수요에 부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미충족 수요를 감안하거나 농어촌의 중장기적 보육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책군은 향후 지원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좀 더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고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아 사회안전망 정책군의 수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 중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4개 정책군 중에서 정책 수행 달성도는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93.1)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87.2)이 가장 낮았다.
- 4개 정책군 중에서 삶의 질 영향력은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4.9)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책군(4.0)이 가장 낮았다.

〈표 2-6〉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87.2	4.7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93.1	4.9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90.7	4.6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90.9	4.0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2.1. 평가 결과 개요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2등급이다.

- 총 31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6개로, 부문 내에서 19.4%를 차지했다.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없었으며, 장기 개선형 과제는 3개, 지속 유지형 과제는 2개였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주민 주도의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등 도·농 간 문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2-4-1-1)' 사업은 문화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기획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사업은 농어촌의 강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2-1-1-3)',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2-4-2-1)',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2-3-2-3)' 등의 사업은 사업의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 해당 사업들은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상할 필요가 있다.

〈표 2-7〉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6	95.1	4.7
장기 개선형	3	84.2	3.3
지속 유지형	2	93.3	3.7
정기적 관찰형	20	90.7	4.3
교육·문화전략 전체	31	91.1	4.2

2.2. 교육·문화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2.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이다. 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6개이다.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2-1-1-1)' 사업은 통학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등·하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농어촌 통학환경의 현실과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각 시도 교육청별로 주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정책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미래 농어촌 통학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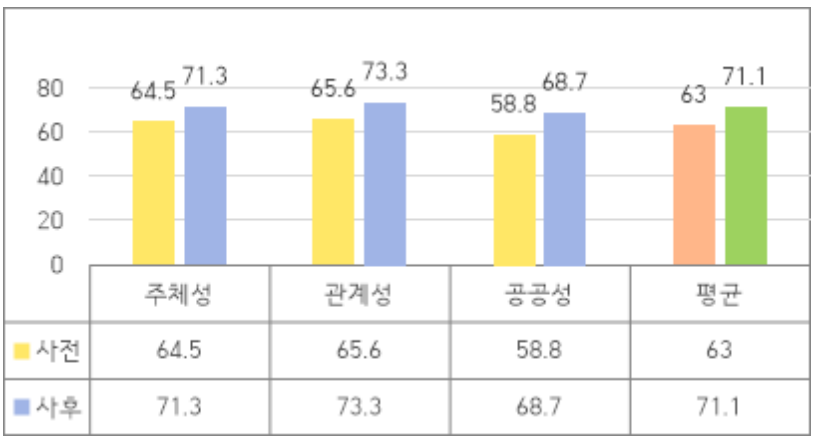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2-2-2-3)' 사업은 농촌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농촌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여성농업인을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농업농촌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운영이 돋보이는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 전문 강사 양성과정 내 교육기관 교육 모니터링, 현장 시연 강의, 강의콘텐츠 개발·보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육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6.0	4.3	• 농어촌 현실 개선을 위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 과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 노력이 돋보임.	삶의 질 우수과제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94.0	5.0	• 농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청년 및 중년 세대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3.3	5.0	• 적극적인 사업 개선을 위해 학부모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의견수렴을 수행하고 지역연계모델을 개발하였음.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92.7	5.0	• 농어촌에 부족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었으며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8.0	4.3	• 단순히 양적인 문화향유 성과가 아니라 참여한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성 회복 등의 성과가 나타남.	삶의 질 우수과제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6.7	4.3	•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삶의 질 우수과제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성 변화〉



2.2.2.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이며 올해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해당하는 과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2.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아 향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써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3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2-1-1-3)' 사업은 농촌 출신 학생들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나 농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 중등교육 개선과 관련한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며,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지역학생의 선발비율이 적절한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년도별 농어촌·지역인재 모집인원 추이 : ('20) 25,853명 → ('21) 26,332명 → ('22) 30,506명 → ('23) 30,884명 → ('24) 33,462명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5.3	3.3	• 현재 농어촌 학생 수가 급감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지역학생 선발 비율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3.3	3.7	• 지역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나 실제 수혜자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4.0	3.0	• 지역문화포털 이용자 수와 이용자 특성 분석, 이용자료 특성, 활용 정도 등에 대한 분석 및 이에 입각한 구체적 정책 활용 방안 도출이 필요함.	

2.2.4.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2개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2-4-2-2)' 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여 특화된 농촌체험 소득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 사업시행주체인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91.3	3.3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정책효과 파악되어야 하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5.2	4.0	• 전통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경관과 로컬자원, 지역자산 및 브랜드 등으로 농경문화자원의 대상 확대가 필요함.	삶의 질 우수과제

2.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20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2-1-1-5)'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 지역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이 대상별 실적, 효과 평가 및 개선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사업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2-2-1-1)' 사업은 비문해 성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기초문해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습자 수 확대와 예산 확대, 지자체 및 참여기관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산출지표에 해당하므로 전체 농촌 지역 문맹율 감소 비율이 결과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2-3-2-4)' 사업은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평가되었다.

-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에서 우수사례 창출이 필요하며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어촌 주민의 수를 향후 성과지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11〉 교육·문화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89.3	4.0	• 다문화가정 거주지 분포 등 농어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실행방식 개선이 필요함.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90.0	4.3	• 단순 교육비 지원을 넘어 사업 수혜 대학생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제고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93.3	4.3	• 장학사업 대상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성과 평가, 정책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내용 개선이 필요함.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6.0	4.3	• 정책 수혜자가 향후 수산계열에 종사할 경우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92.0	4.3	• 교육지구를 설정하여 작은 학교 규모화, 공공복지 공간 통합 설치 운영 등 통합적 기획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1-2-6	농어촌 학교 진로 교육 강화	92.7	4.0	• 온라인 등을 통한 지속적 멘토링이 필요하며, 진로 의식 등 고충을 상담해주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함.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0.7	4.7	• 사업 공모에 응하는 교육청의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1-2-9	농촌유학 지원	92.0	4.3	• 사업 성과의 질적·양적 평가를 위해 유학생 수나 유학생 만족도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2-2-1-1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93.3	4.3	• 농촌 성인 학습자의 규모 추정을 기초로 성과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2-1-2	농어촌 노인문해교육 (문해교육공동체지원)	86.7	4.3	• 성과지표로 수혜자 만족도나 문해력 향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92.0	4.3	• 수혜자 대상 수요 및 만족도 조사 통해 맞춤형 정책사업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1.3	4.3	• 농어촌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농한기에 특화하여 추진되도록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	
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90.0	4.7	•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다목적 기능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토록 유도하여야 함.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86.0	4.3	• 생활체육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사업추진 과정의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함.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89.3	4.3	• 사업 추진과정,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92.0	4.3	• 양성된 전문인력의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3.3	4.3	• 정책 대상의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금 사용 확대를 위한 통합적 홍보마케팅이 마련되어야 함.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85.3	3.7	• 농어촌 주민 및 어린이, 사업수행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4.7	4.3	• 사업시행주체가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2-4-2-3	농촌축제 지원	93.3	4.3	• 사업의 확산과 효과 제고를 위해 개소 당 지원액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 개소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2.3.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전반적으로 제4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사업 목적을 타당하게 설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에 교육 서비스의 이동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개선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향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목적과 내용을 꾸준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2-1-1-1)' 사업은 도시에 비해 통학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보호장구 확대를 사업 내용에 추가하는 등 꾸준히 정책을 개선해오고 있다.
*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2-1-1-2)' 사업은 농어촌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수 재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다.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2-1-1-3)'는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도시의 교육여건과 비교할 때, 격차가 존재함을 전제로 정부의 대학입학 제도 개선을 통하여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2-1-1-4)'은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사업이다.
*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2-1-1-5)'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부합한다.
* '학교시설 안전 강화(2-1-1-7)' 사업은 농어촌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에 일부 부합한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은 농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청년 및 중년세대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 '혁신교육지구 활성화(2-1-2-4)'사업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과 학교 간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대표적인 지역교육 연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2-1-2-5)' 사업은 농어촌의 부족한 사교육 개선을 통해 자녀를 둔 청년 및 중년세대의 정착 및 신규 유입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2-1-2-6)' 사업은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의 다양함,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 '농어촌학교의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2-1-2-7)' 사업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도에 대비하여 농어촌 교육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학생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 '농촌유학 지원(2-1-2-9)'사업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에 유학하여 농어촌 학교를 경험하고,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보강, 원격 교육 및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 향후 지역 주민 및 지자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의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2-1-1-2)'과 관련하여 입국 초기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농어촌의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지원 관점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사업은 현재와 같이 교육지원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교동문 및 기초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2-1-2-5)' 사업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업무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민간 주체, 기초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성과지표를 수혜자 만족도 중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의 만족도를 지표로 제시한 사업은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보조적으로 제시한다면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2-1-1-2)' 은 다문화 멘토링 수혜 학생 및 농어촌 주민(학부모 포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2-1-1-4)' 사업은 성과지표로 수혜자 만족도보다는 농촌 출신 대학생 대비 수혜자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2-1-2-6)' 는 학교 급별로 진로교육 지표를 원격영상멘토링 수업 횟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학생 만족도뿐 아니라 진로 인식도 변화를 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2-1-2-7)'은 성과지표가 사업 참여 교육청수로서 현재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지표이므로, 고교가 소수인 지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선정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후에 학생 만족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발·개설된 교과목수, 참여 학생수 등의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농촌유학지원(2-1-2-9)'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량(29개)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자체적인 정책 평가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학자금/장학금 지원 사업(2-1-1-4/2-1-1-6)'은 수혜대상 추적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게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농촌유학지원(2-1-2-9)' 사업 추진과정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농촌 유학 사업의 성공적인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3.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을 포함한 교육 소외계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에 영향력이 큰 사업이다.

- 농어촌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내 농촌 비중을 명확히 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2-2-1-1)' 사업은 농어촌 저학력 노령층, 외국 이주민이나 결혼이민자들의 문해력 제고에 중요한 사업이다.
  * '농어촌 노인문해 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2-2-1-2)'사업은 농어촌 주민공동체가 지역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초하여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2-2-2-1)'사업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학습자 맞춤형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에 여건에 맞게 전문기능 강화 및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2-2-2)'사업은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노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2-2-2-3)' 사업은 농어촌의 부족한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통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농어촌의 불리한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여전히 농어촌 주민들의 접근성 고려가 부족하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2-2-2)'사업은 농어촌지역 우선지원, 농어촌 지역사업 비중 설정, 농어촌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방식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2-2-2-1)' 과 관련하여 농촌의 노령인구 및 비농업인구의 증가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실제 대부분 인구가 많은 읍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순회형 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한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2-2-2-1)' 사업의 평가지표인 프로그램 이수율만으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나 평생교육기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개설된 강좌 수와 강좌 수당 이수자 수, 수강생의 만족도와 추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2-2-2-3)'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강생 및 위촉된 전문강사들의 성평등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의 측면으로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적절히 개편하고 있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2-2-2)'사업은 전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2.3.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들이 적절히 선정되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도시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제4차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2-3-1-1)' 사업은 해당 시설이 농어촌 지역의 문화와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2-3-1-2)'은 지방 체육시설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체육서비스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 '생활문화센터 조성(2-3-1-3)'사업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에 부합도가 높은 사업이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2-3-1-4)' 사업은 지역별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실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연결·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2-3-2-1)' 사업은 농어촌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 기회를 수월하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2-3-2-2)'은 농촌지역의 정보취득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나 현재 사업은 지역구분 없이 지식정보 취약계층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이 되는 아쉬움이 있다.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2-3-2-3)'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박물관 전시관람 및 체험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문화향유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 자체적인 정책 평가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지만, 일부 사업은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고려가 추가로 필요하다.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2-3-1-2)'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체육 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사업추진 과정의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 비중을 설정하거나 우선지원 등의 사업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추후 지방 이전이 예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2-3-1-2)’ 사업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므로 부처 차원에서 본 사업을 통한 농어촌 지역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생활문화센터 조성(2-3-1-3)’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의 우수사례 창출과 그에 부합하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사업 성과지표를 보다 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농어촌의 불리한 문화·여가 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어촌 지역 사업 비중을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2-3-1-1)’사업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 조사가 추가지표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2-3-1-2)’ 사업은 양적 성과보다 실제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질적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문화센터 조성(2-3-1-3)’ 사업은 초기 생활문화센터와 생활SOC로 조성된 시설 간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향후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활성화 측면의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2-3-1-4)’ 사업은 현재 성과지표인 양성인력 수가 아닌, 양성된 인력이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연차별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2-3-2-1)’ 과 관련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수 가운데 카드발급과 이용이 불가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 사업목표대비 실적 달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88.2%) 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2-3-2-2)’,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2-3-2-3)’의 경우 사업량의 상당수가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농어촌 지역 사업 수혜 비율을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농어촌 관련 성과가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2-3-2-4)’ 사업은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 수가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치가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2.3.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농어촌의 문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량이 적어 대다수 농어촌 지역이 수혜받기에 어려우므로 전체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2-4-1-1)'사업은 단순 관람에서 직접 참여로 활동 수준을 전환하려는 제4차 기본계획에 부합하지만 농어촌 지역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다.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2-4-1-2)'은 단순 문화향유에서 벗어나 동호회를 통해 문화활동의 직접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2-4-2-1)'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다움을 실현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 '농촌축제 지원(2-4-2-3)'사업은 농어촌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마을 단위 축제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의 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향후 사업 성과지표를 양보다 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2-4-2-2)' 사업은 농가소득 및 진로체험 만족도 등 사업성과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 '농촌축제 지원(2-4-2-3)'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촌축제가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귀농·귀촌 등에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문화·여가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 일부 사업은 사업 주체의 사업 관리 및 집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참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2-4-1-1)'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 및 광역지자체의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2-4-2-2)' 사업은 학생·청년 대상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 '농촌축제 지원(2-4-2-3)' 사업은 참여주민의 역량 강화 및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참여 구성원의 정책 수용 능력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고, 민관협력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자체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농어촌 주민의 추진역량, 지역자원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설계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2-4-2-1)' 사업은 현재 DB구축과 단순한 열람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추후에 콘텐츠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2.4. 교육·문화 전략의 개선 방향과 과제

❍ 교육·문화 전략 사업들은 대체로 정책 수행도가 높고, 삶의 질 영향력도 높았다. 다만, 향후 단순 예산 집행 정도, 수혜자 만족도 수준의 사업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사업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질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수혜자의 만족도에 더해 사업의 성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보조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의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교육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산출지표로, 만족도 등 기존의 성과지표를 제시한 사업은 보조지표를 추가로 제시한다면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의 사업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실시되어야 하며,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적절하게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도시 지역과 내용이 혼재된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방이양 추진이 예정된 사업이 지자체 추진과정에서 이전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은 사업 효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국 규모에서 사업의 절대적인 양이 크지 않은 사업은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사업 효과를 양적 지표보다 질적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교육·문화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91.2	4.3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91.2	4.5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89.3	4.2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93.5	4.0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3.1. 평가 결과 개요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8.8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으로 타 전략 부문 대비 정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총 64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12.5%인 8개였다. 중점 개선형 과제가 3개, 장기 개선형 과제는 17개, 지속 유지형 과제가 4개이며,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32개였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에서 특히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경관 보전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3-3-3-1)' 사업은 마을단위 상향식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부합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3-4-4-3)' 사업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효율적인 제도 추진 노력을 기울였다.

❍ 정책 추진 실적 평가가 미진한 일부 과제는 사업이 부진 이행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3-4-1-2)'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저조하고, 형식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진 과정이나 성과 점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13〉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8	96.0	4.6
중점 개선형	3	83.8	4.6
장기 개선형	17	82.7	3.4
지속 유지형	4	94.0	3.5
정기적 관찰형	32	90.1	4.1
정주생활기반 전략 전체	64	88.8	3.9

3.2.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3.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8개이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3-2-2-1)',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3-2-3-1)' 사업 등 주민들의 기초적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정책 수혜자의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두 사업 모두 정책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만족도 점수를 성과지표로 활용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3-1-1-1)'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성과 확산형으로 평가받는 사업인 만큼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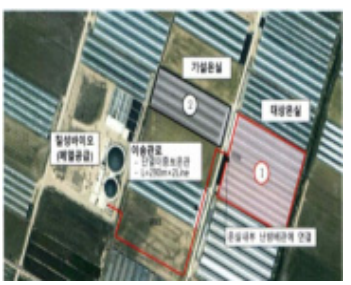
- 2021년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3.3	5.0	• 사회적 조직 등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고 운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모델 발굴 노력이 이루어짐.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5.3	5.0	• 정책 수혜자의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함.	삶의 질 우수과제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96.7	4.3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빈집정비실적을 운용하고 있고,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등을 발굴·홍보하여 빈집 활용에 대한 지자체 인식을 제고함.	삶의 질 우수과제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6.7	4.7	•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으로 생활편의 성과를 도출함.	삶의 질 우수과제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7.3	4.3	• 민간기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우수사례를 도출함.	삶의 질 우수과제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확산	96.0	4.7	• 개별 마을 단위의 상향식 공모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방식과 추진체계가 적절함.	삶의 질 우수과제
3-4-3-5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②	96.0	4.3	•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하였고, 신규 추진을 위해 노력함.	삶의 질 우수과제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6.7	4.7	• 수산 공익 직불제 발전 방향 논의와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삶의 질 우수과제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우수사례〉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발생 폐열 활용 토마토 온실 난방용 공급
- (청양 칠성에너지) 연간 가축분뇨 5만 7천 톤, 음폐수 2만 5천 톤 처리로 전기 연간 약 6,000MW생산 및 폐열 시간당 약 1,031kW 발생 (폐열의 약 60%가 시설하우스에 공급)
- (폐열공급시설) 에너지화 시설-온실(0.6ha)간 290m 온수 공급 관로 설치 (토마토 재배 온실을 12~15℃ 유지하기 위한 난방용으로 이용)
- 폐열을 활용한 토마토 재배를 통해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발생



3.2.2.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 3개 사업이 해당하였다.

❍ '농촌 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3-4-4-1)' 사업은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체계에 관한 정책인 만큼, 운영 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담당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정책 과정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1-7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84.7	4.3	• 여객 수송량이 지속 감소하여 운항결손금 지원액도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83.3	4.7	•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방식 개선이나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이 필요함.	
3-4-4-1	농촌 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3.3	4.7	•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계획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및 상세한 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3.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 17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3-1-2-5)' 사업은 어촌 지역 교통약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3-2-1-1)' 사업은 성과지표 달성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불량주택 정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그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정책 대안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 불량주택 정비율이 62.6%('20년), 56.1%('21년), 53.8%('22년)로 지속 하락 중

○ 농어촌 지역의 환경·경관 분야의 일부 사업은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보조지표를 제시하여 사업의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3-4-1-5)' 사업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해양쓰레기 수거량)로는 정책 성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평가받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보조지표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민 방제대 운영 확대(3-4-1-6)' 사업을 통해 해양오염 방제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3-4-3-10)' 사업을 통해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등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받았다.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2-2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79.3	3.0	•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특성별 고령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과 안전용품의 종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78.0	3.7	• 사업의 목적에 맞게 노후 여객선 비율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성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84.7	3.7	• 최종 수혜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 검토가 필요함.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85.3	3.0	• 제도 개선, 예산 증액 확보, 어업인 대상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함.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2.0	4.0	• 연도별 불량주택 정비율이 지속 저하되는 요인의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3-1-3	어촌뉴딜300	86.7	3.3	• 어촌·어항 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와 어촌 활력 지역변화율 등이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3-3-1-4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86.0	2.7	• 제4차 기본계획의 3·6·5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기초연구이나 사업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미흡함.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82.0	4.0	• 추후 정책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및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73.3	2.7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발생 원인, 대상자가 더 나은 주택으로 입주하지 않으려는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3-4-1-2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77.3	3.7	• 참여도 저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등을 통한 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 (해양폐기물 정화)	90.0	3.3	• 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서 갖추어야 할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3.2.4.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는 4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3-3-2-3)’ 사업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빈번해지는 기상재해로 인한 풍수해에 대응하여 사업의 규모와 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17〉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90.7	3.0	• 풍수해에 대응하여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6.0	3.7	• 사업을 통해 개선된 연안 어장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삶의 질 우수과제
3-4-3-2	친환경 양식 어업육성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	90.7	3.3	• 사업지원을 받은 친환경 양식장의 양식수산물 생산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8.7	4.0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양식어업인의 조건이나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삶의 질 우수과제

3.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는 32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3-1-1-4)’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농복합시 내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성과지표로 제시한 공공형 버스 도입 지자체 수가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다.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3-2-1-3)’ 사업은 지원제도 개선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정책 성과측정 또는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향상 노력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한센인 폐축사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3-2-2-4)’ 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복

지가 취약계층과 농촌 지역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 도출,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나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 '청년 보금자리 조성(3-3-3-1)' 사업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방식을 갖추었으며, 청년에 대한 주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의 접근성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변경으로 초기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①(3-4-3-4)' 사업은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전환의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본 사업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5개소 신·증설 및 개선 지원

〈표 2-18〉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92.7	4.3	• 운행방식만을 주요 과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수요응답형 운행방식의 촉진을 위한 과제 구성이 필요함.	
3-1-1-3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공공형 택시)	90.7	3.7	• 소외지역 해소율 등 구체적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활용이 필요함.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86.0	4.0	• 공모를 통해 신청한 시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별 쿼터 내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토록 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87.3	4.3	•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사업 추진과정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노력이 필요함.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88.7	3.7	• 사업 대상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총 사업 물량이 부족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임.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1-2-3	교통안전 활동	86.7	3.7	• 단순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개발 및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91.3	4.0	• 성과지표를 선박 단말기 보급 척수(누계)보다는 전체 대상 어선의 설치 비율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94.7	4.3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크게 봉사단체(대학생, 일반)와 기관(한국해비타트, 국립공원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어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자체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체계를 이원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88.7	3.7	• 전문기관을 통해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93.3	4.0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심층적인 수요조사·분석을 통한 규모 확대 및 사업 내역의 다각화가 필요함.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88.0	4.3	•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 등에 대한 보완 노력과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88.7	4.0	• 추후 정책효과의 검증과 사업의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추진이 필요함.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3.3	4.3	•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 등에 대한 보완 노력과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90.0	4.0	• 고령인 도서민을 고려하여 생활연료를 주택까지 배송해주는 방안을 찾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90.7	4.7	• 거점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 서비스 향상,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달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9.3	4.3	• 사업성과와 경험 확산을 위한 광역지자체 또는 전체 사업 단위에서의 성과 보고 및 확산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 ①	90.0	4.0	• 사업 추진 절차가 정형화되어 개선여지가 제한되어 있으나 시공 방식의 차이에서 재해 위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 사업 개선이 필요함.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93.3	4.0	• 안전사고 감소율 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표 발굴이 필요함.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 (어항시설 보강)	89.3	4.3	• 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제로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3.3	4.3	• 성과지표를 다소 상향할 필요가 있고 정책 수요자 참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88.7	3.7	• 성과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또는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3-3-2-7	산림보호 지원	87.3	3.7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부실하고 우수사례 도출이 미흡함.	
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92.7	4.7	• 다수의 세부 사업이 기술되어 있으나, 사업별로 실행방식과 체계가 논리정연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92.7	4.0	• 주택 제공만이 아닌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의 접근성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과 추진체계가 필요함.	
3-3-4-2	스마트 타운 조성	89.3	4.7	• 주민, 지역기업의 참여 방식과 추진체계 마련 필요함.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6.0	3.7	• 삶의 질 개선 효과 창출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우수사례 제시가 미흡함.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91.3	3.7	• 사업 추진 절차와 시행 주체가 나열되어 있고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①	92.0	4.7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3-4-3-7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92.0	3.7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건이나 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 해소나 수요조사 과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3-4-3-9	목재팰릿 사용 확대	92.7	3.7	•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화석연료 대체율,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농산촌 연료비 절감율 등을 포괄하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①	86.0	4.0	• 지표의 객관성 확보 및 농업 유산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에 대표적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관광지로 등록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3-4-4-5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②	86.7	4.0	• 어업 유산은 어촌 관광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어촌관광지 방문객 수를 성과지표 설정하는 것은 과다 산정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3.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3.3.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 고령화, 인구 과소화 문제가 심화되는 농어촌에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노인,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주민 일반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정책군에 속한 과제들은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취지에 대체로 부합하고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3-1-1-1)’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3-1-1-2)’, ‘공공형 택시(3-1-1-3)’ 등과 같이 기존 대중교통 수단만으로 충족하기 힘든 주민들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과제들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3-1-2-4)’나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3-1-2-5)’ 같은 과제 등도 어느 곳에 거주하는 국민이든 소외받지 않고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3-1-2-6)’,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3-1-2-7)’ 등의 과제는 농어촌의 교통 접근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거나 수혜 계층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연안 및 도서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농어촌의 불리한 교통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과제들은 대체로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방식 및 추진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과제들의 경우 좀 더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추진 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3-1-1-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3-1-1-3)’ 등의 과제 등과 같이 농어촌을 고유 대상으로 하는 과제들의 경우 농어촌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공공형 택시(3-1-1-3)’의 경우 도농복합시 내 농촌 지역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성과의 증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근거 자료 미제시 등으로 농어촌 여건에 맞추어 실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과제들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3-1-2-1)’,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 연계교통 강화(3-1-1-5)’ 등이 있다.

*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3-1-2-2)’ 과제의 경우도 맞춤형 교육이 농어촌 여건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 ‘교통안전활동(3-1-2-3)’의 경우도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거나 농어촌 특화형 사업 내용,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 대부분 과제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성과지표가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거나 단순 집행 실적 위주 지표를 제시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단,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3-1-1-5)’, ‘교통안전 활동(3-1-2-3)’ 등의 과제들은 일정 준수 여부를 판단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3-1-2-2)’ 과제는 계획한 집행률에 미달하였다.

- 목표 달성도가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평이한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된 경우가 많다(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연안여객선 현대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

  * ‘교통안전 활동(3-1-2-3)’ 등의 과제는 농어촌을 구분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 정책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사업 지침 개정,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진 과제들이 일부 확인된다.

- 반면, 주민을 포함한 정책 수혜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나 적극적인 정책 홍보 사례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3-1-1-1)’,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3-1-1-2)’ 등의 과제들에서 사업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3-1-2-5)’ 과제는 민간 선사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의 개선 실적이 있었다.
  * ‘교통안전 활동(3-1-2-3)’ 과제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확대되었다.
  *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3-1-2-6)’ 과제는 예산 소폭 증가 계획과 함께 해상 원격 의료서비스 시범 추진, 기상 등 바다 속보 제공 등과 바다내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3.3.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본 정책군에 포함된 과제들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정책군 목표에 대부분 부합하며, 제4차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

- 다만,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2-2-5)' 과제는 본 정책군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삶의 질 영향력 면에서는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3-2-2-1)',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3-2-1-2)',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3-2-1-5)' 등과 같이 주민들의 주택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3-2-2-2)',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3-2-2-4)',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3-2-3-1)'과 같이 마을 인프라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사업들도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본 정책군에 속한 과제들은 대체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실행 방식 및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과제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지방이양사업인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3-2-3-1)' 과제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추진 방향 설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이다.
  *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2-2-5)' 과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해상 운송비가 달라질 수 있는바, 개선된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과제들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집행되었으며, 대체로 목표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성과지표 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예산 집행 측면에서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3-2-1-1)' 과제가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3-2-2-2)’ 과제의 경우 예산 항목 가운데 지방비의 집행 수준이 약 77.5%로 비교적 낮으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였다.

- 성과목표치에 미달하는 과제가 있었으며, 성과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극적이거나 평이한 목표치를 설정한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3-2-1-1)’ 과제의 경우 성과목표로 제시한 연도별 불량주택 정비 달성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연도별로 달성도가 계속 저하되는 추세이다.
*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3-2-1-2)’,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3-2-1-3)’,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3-2-1-4)’,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3-2-2-2)’,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2-2-5)’ 등의 과제가 해당된다.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3-2-3-1)’ 과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빈집 정비 등의 지표가 성과목표로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양사업임을 고려해서 지자체별 정비 실적 편차가 반영된 지표 설정이 요구된다.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사업지침 개정, 예산 확대 등의 실적을 나타낸 과제들이 있었다

- 일부 과제에서는 수혜자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정책 홍보 등 정책 환류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3-2-1-2)’ 과제는 수혜자 및 사업 참여자(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봉사단체 및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자 업무협약 추진 등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3-2-1-1)’ 과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량 및 예산 확대가 이루어졌다. 신규 선정지구 대상 설문조사, 부진사업 지구 현장점검 및 의견 수렴 등의 실적도 있었다.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3-2-3-1)’ 과제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 가시적 실적이 있었다. ‘특정빈집 신고제’의 도입 및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고, 빈집 및 유휴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및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정책 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체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과제는 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고,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과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밖에 사업량이나 예산이 확대된 과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3-2-1-5)’,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3-2-2-2)’ 등이 해당된다.

3.3.3.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본 정책군에 속한 과제들은 대체로 제4차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첨단기술 기반의 정주 환경 고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이라는 정책군 방향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과제들이 많다.

- 삶의 질 영향력 측면에서는 본 정책군에서 다음 과제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3-3-1-2)',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3-3-2-4)', '산불 예방 방지 대책(3-3-2-5)',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3-3-2-8)',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3-3-4-1)', '스마트 타운 조성(3-3-4-2)' 등이 해당된다.
- 농어촌 안전과 관련한 과제들은 본 정책군 방향과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영향력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3-3-2-1 및 3-3-2-2)',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3-3-2-3)',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3-3-2-6)', '산림보호 지원(3-3-2-7)' 등이 해당된다.
  * 한편,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3-3-1-4)' 과제의 경우는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특성상 제4차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 해당 정책군에 속한 과제들이 대체로 각각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실행 방식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과제는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고 있지만, 중심지와 기초거점간, 거점(중심과 기초)과 배후마을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지방 이양된 배후마을 지원사업 추진지역이 줄어들었고 사업비가 이원화되면서 사업간 연계효과가 낮아진 점도 지적된다.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3-3-2-6)' 및 '산림보호 지원(3-3-2-7)' 과제의 경우 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3-3-2-4)' 과제는 노후한 어항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은 제외되는 등 수혜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한편, '청년 보금자리 조성(3-3-3-1)'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3-3-3-2)' 과제의 경우 주택 제공만이 아니라 생활서비스 제공, 고령자들에 대한 이동 편의성 제

고 등이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추진체계가 제시되지 않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본 정책군에 속한 과제들 다수가 사업지구 개소수 같은 단순 실적 지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성과지표 자체도 소극적이고 평이한 수준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고,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성과지표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3-3-1-2)', '어촌뉴딜 300(3-3-1-3)' 등과 같이 큰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주민들이 직접적 수혜자인 사업의 경우는 단순히 사업지구 개소수 같은 지표가 아니라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3-3-3-3)' 과제는 제시한 성과지표 대비 달성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 한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3-3-2-3)'의 경우는 2023년 지표로 새롭게 설정한 침수피해방지율 목표가 적절하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예산 집행률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3-3-3-2)' 과제가 계획 대비 예산 집행 실적이 특히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그 밖에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과제도 집행률이 미달하였으나 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3-3-1-2)',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3-3-2-3)' 등의 경우도 집행률이 미달되었지만, 균특회계 세수 부족이나 농특세 납입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사업 자체의 문제라 볼 수는 없다.

❍ 일부 사업은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 및 환기,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책 개선 시도, 예산과 사업량 확대, 정책 홍보 등의 실적이 확인된 과제들이 본 정책군에 포함되어 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3-3-1-1)' 과제의 경우 농식품부 대표 사업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사업설명회·협의회·워크숍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촌협약과 연계 추진되면서 지자체 관심도 높고 관련 보도 실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3-3-1-2)'에서도 사업지구 점검회의, 모니터링 및 중앙계획지원단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3-3-2-1 및 3-3-2-2)' 과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규모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 예산도 확대하였다.
  *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3-3-2-4)' 과제는 정부, 지자체, 민간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 예산도 증대되었다.

* '산불 예방 방지 대책(3-3-2-5)' 과제는 논·밭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ICT기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하여 대피소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제공하였다. 사업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도 이루어졌다.
* '청년 보금자리 조성(3-3-3-1)' 과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변경, 입주대상자 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고, 예산과 지구 수가 확대되었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3-3-3-2)' 과제는 과거 정책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주 자격 완화, 지자체 권한 확대, 추진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3.3.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 가치 증진'이라는 본 정책군 방향에 대체로 부합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정책군 방향과 다소 정합성이 떨어지는 과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3-4-3-2)'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3-4-4-3)'의 경우 환경·경관 보전보다는 어업인 소득 증대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과제라 할 수 있다.
  *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3-4-3-11)' 과제의 경우도 엄밀히는 본 정책군 방향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 삶의 질 영향력 측면에서는 본 정책군에서 다음 과제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3-4-2-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3-4-3-1)',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3-4-3-4 및 3-4-3-5)',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3-4-4-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3-4-4-3)' 등이 해당된다.
  *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3-4-4-6)'은 R&D 과제라는 특성상 정책군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 의견 수렴, 홍보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3-4-1-3 및 3-4-1-4)' 과제는 정책 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3년 예산도 전년 대비 증대되었다.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3-4-2-1)' 과제의 경우 간담회, 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획 보도 등 정책 홍보 노력도 있었다.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3-4-3-3)'은 전문가 회의, 국제포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전년 대비 예산도 증가하였다.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3-4-3-4 및 3-4-3-5)' 과제는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가축분뇨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지침 개정, 예산 확대 등이 성과가 있었다.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3-4-4-1)' 과제는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이 진행되었고, 사업지구 개수 및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 반면, 다음 과제들은 정책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3-4-1-5)'은 홍보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그 밖에는 두드러지는 정책 개선이 없었다.
* 그 밖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3-4-1-2)',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3-4-1-6)', '부산물비료 공급 친환경농업 기반구축(3-4-3-6)', '경관보전직불제(3-4-4-2)' 등의 과제도 소관 부처 차원의 정책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 환경·경관 보전을 추구하는 정책군 특성을 고려하면서 농어촌 여건에도 부합하도록 실행 방식이나 추진체계 측면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

- 사업 절차와 추진 주체만 명시된 사업이 다수 있으며,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도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3-4-1-2)',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3-4-1-5)' 등과 같이 캠페인 성격의 과제들은 현장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3-4-1-6)'와 같이 자율적 조직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도 지속적인 참여 동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3-4-4-1)' 과제의 경우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이 추진체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일부 과제는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다수의 과제가 실적이나 산출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설정하고 있으며, 평이한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그친 과제가 있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3-4-1-3, 3-4-1-4)',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3-4-2-1)' 과제는 성과지표 자체가 적극적이면서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3-4-3-1)' 과제는 예산 계획 대비 실적 집행 수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3-4-1-2)' 과제는 목표로 설정한 캠페인 참여 마을 개수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다.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3-4-3-2)' 과제에서 국내양식수산물생산량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본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지방이양사업인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3-4-3-6)' 과제의 경우 별도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3-4-4-4, 3-4-4-5)'의 성과지표를 방문객 수로 설정한 것은 과제 성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완이 요구된다.

3.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정주생활기반 부문을 구성하는 4대 정책군을 대상으로 삶의 질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 평균값을 집계한 결과 '농어촌 주거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군이 두 가지 모두 타 정책군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정책군에는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등과 같이 개별 주택 정비 및 난방 여건 개선, 마을 주거환경 정비 등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제들이 포함되며, 해당 사업들의 추진 성과도 양호했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정책군이 정책 수행도가 가장 낮았고, 삶의 질 영향력은 농어촌 주거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제외한 세 개 정책군 모두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정책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등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취약지역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 자율 주행,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농어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도서지역은 인구 감소가 극심하여 여객수송량이 더욱 감소할 것인바, 운항 항로에 대한 결손금 등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업 물량 제한 및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교통안전 활동 과제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노인보호구역은 지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

❍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방식의 개선 또는 다양화가 요구되며, 혁신 우수사례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대상 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사업단가 현실화가 요구된다.
- 농어촌 하수도 보급사업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향후에도 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복지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바,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열악한 도서지역 여건을 감안, 중앙부처의 지원율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 물품 종류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 현황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D/B 구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과제는 생활SOC 선정지구 수나 거점 지구 수가 아닌 사업 결과로서 주민 생활 서비스 향상,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도, 전달체계 구축 등의 지표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하드웨어 중심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할 사업에서는 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 과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 대응에도 중요한바,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 산불 예방·방지 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의 과제 역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성과지표 상향, 정책 수요자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청년 보금자리 조성 과제는 고령화된 농어촌에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인바, 향후 지역사회 관계성, 경제활동 연계 등의 보완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 과제는 고령 저소득자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의 경우, 미흡한 사업 실적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정책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과제는 예산이 없어도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체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소관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역시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직접 수행 방식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적용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 차원에서 목표 달성 여부나 사업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정부 차원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삶의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과제의 경우 사업 효과와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산촌 지역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R&D와 연계, 실증사업을 통해 소규모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과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공간계획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를 운영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및 제도 운영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 경관보전 직불제는 작물 재배에 머물지 않고 공동활동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홍보해야 한다.
-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유산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보전,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2-19〉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86.8	3.9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90.4	4.2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88.9	3.9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89.2	3.8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4.1. 평가 결과 개요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총 37개 과제 중 32.4%를 차지하는 12개 과제가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었다. 장기 개선형 과제는 8개, 중점 개선형 과제는 2개였으며, 지속 유지형 과제는 3개 과제가 해당했다.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는 특히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과제들이 우수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4-3-1-4)' 사업은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농가 소득 증대로 청년농의 성공적 정착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 지원(4-3-2-1)' 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지역 탐색과 정착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 산업 거점 조성 관련한 사업은 정책 성과 및 환류에 대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 조성된 거점을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과 충분한 사업참여자 확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2-20〉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12	96.8	4.8
중점 개선형	2	88.7	5.0
장기 개선형	8	84.3	3.2
지속 유지형	3	92.9	3.3
정기적 관찰형	12	90.6	4.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전체	37	91.3	4.1

4.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4.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12개이다.

❍ '푸드플랜 내실화②(4-1-2-2)' 사업은 직매장 확대 및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창출하였다.

- 코로나19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 대응으로 온라인 연계 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농가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 직매장 참여 중소농(0.5ha 미만): ('20) 46,092명 → ('21) 52,587명

❍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4-3-1-5)'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 청년농 권역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을 추진하였다.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4-3-3-7)' 사업은 여성 및 청년의 신규 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청년 대상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청년기업이 해양수산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4-4-1-1)' 사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를 통한 농어촌 여성 취업자가 매년 증가하여, 미설치 군 지역에 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농촌 여성 고용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서비스 전략 마련과 고용 지원 정책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4.7	5.0	• 사업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주기적인 정책 개선 노력과 홍보의 체계성이 우수함.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5.3	4.7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지속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 우수과제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8.0	4.3	•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업인 체감효과가 우수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8.7	5.0	• 사업 참여 경영체의 평균 소득 증대, 30대 이하 청년 유입 증가 등 긍정적인 사업 효과가 발생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9.3	5.0	• 청년 농업인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등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8.7	5.0	• 사업집행 및 일정이 원활히 준수되었고,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함. 귀농귀촌인 다양성 확보 및 활동 기회 제공 등 지역통합을 위한 기반 확대 추진이 필요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2-2	귀어귀촌 활성화	92.0	5.0	•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효과를 창출함.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96.7	4.3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우수하나 체계적, 안정적 경영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지원 연계가 필요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8.0	5.0	• 여성 및 청년의 신규 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 통해 어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96.0	4.3	• 사업 실적 달성이 우수하며, 만족도 조사 및 정책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함.	삶의 질 우수과제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7.3	4.7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률이 우수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함.	삶의 질 우수과제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6.7	5.0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사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인력 수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함.	삶의 질 우수과제

〈 부여 새일센터 창업 지원 우수 사례 〉

❍ 원예 조성 사업 창업
-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 이후, 신중년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및 부여군 양성평등기금 연계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예교육 및 실습 이후 정림사지 일대 원예를 조성하였고, 문화재 야행 참여 등 활발히 활동 중임.

❍ 관광문화학교 협동조합 창업
- 새일센터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창업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지역통합캠퍼스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립생태원 관광 개발 교육 및 관광 분야별 전문가 매칭으로 조합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

4.2.2.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 2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4-3-1-3)'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따른 농촌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운영에 따른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업의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 조성과 지역 내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2-2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87.3	5.0	• 추가 성과지표 개발(실습농장 이수 청년 창업농과 일반 청년 창업농과의 영농 성공률 비교 및 전체 청년 창업농 중 실습농장 수료자 비율 등)할 필요가 있음.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90.0	5.0	• 외국인 인력 지원, 고용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드러내도록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4.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 8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4-1-1-2)' 사업은 조성된 거점단지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며,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및 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후속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4-3-3-2)’ 사업은 대부분의 농업경영자가 고령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특정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의 효과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조성까지 이어지기 위해,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 교육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23〉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78.0	3.7	• 입주기업 투자지원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 및 거점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만족도조사를 통한 정책 점검·개선 추진 및 우수사례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삶의 질 개선 필요과제
4-1-1-3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86.7	3.3	• 임산물 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 고용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①	81.3	3.3	•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정책 우수사례 도출 및 홍보실적 보고 등 정책 성과 환류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센터의 활용도 및 수행자의 역량 개선 정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4-2-1-5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85.3	2.7	• 지역주민, 농업인 참여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함.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84.0	2.7	• 농업법인 차원에서 채용인력 유형에 따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으로 경영 체계화 및 활력 추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90.0	3.3	• 사업효과가 특정 농가에 집중되지 않고, 농어촌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함.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82.7	3.7	• 지역 특산품 개발·생산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센터와의 연계 전략 및 지원책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를 지역별 추진현황 및 완공 이후 사업주체의 경영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함.	
4-3-3-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86.7	2.7	• 직접적 사업성과 파악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수 확보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사업 예측을 토대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2.4.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는 3개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 ‘농식품 벤처 지원(4-3-3-5)’ 사업은 농식품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 방식의 추진모델로서 유의미하며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사업 효과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과 무관한 원료 조달 체계를 구축할 경우 등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2-2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95.3	4.0	• 민간의 정책 참여·협조를 유도하여 사업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지구 모니터링과 기초 단위의 정책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함.	삶의 질 우수과제
4-3-3-5	농식품 벤처 지원	92.0	3.0	• 지역 농업과 무관한 원료 조달 체계를 구축할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91.3	3.0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및 세부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지역 농특산 자원 활용 사업 주체의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경제활동·일자리전략 부문에서는 12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②(4-1-2-5)’ 사업은 로컬 직매장과 온라인 입점 판매를 통한 일정 매출 발생으로 수산물 생산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성과지표를 수산물 유통 경로 개선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약 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 ‘어촌관광 활성화(4-2-1-2)’ 사업은 사무장 지원기준 완화 및 마을 특화소재를 고려한

특화마을을 육성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관광산업의 빠른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조직과의 협력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방문객 기준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 중 노후 마을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변경

❍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4-3-3-3)' 사업은 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어업관련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성과지표를 양식장 설치 추진현황 및 운영 결과(매출, 고용 등)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워크숍 개최,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등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4-4-1-2)' 사업은 교육평가 워크숍,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 결혼이민여성의 참여 및 수혜 확대를 위해, 다문화센터 차원의 면밀한 수요조사 및 기획,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표 2-25〉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	85.3	4.0	• 온라인 거래 지표 등 수산물 유통경로 개선 효과 파악이 가능한 항목을 추가 성과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4-2-1-1	농촌관광 활성화	94.0	4.3	• 지역 상황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 방식 마련할 필요가 있음.	
4-2-1-2	어촌관광 활성화	90.7	4.7	•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 마을 조성 수, 농어촌 관광 등급제 추진 마을 수, 방문객 만족도 등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4-2-1-3	해양관광 활성화	86.7	3.7	• 변경된 성과지표가 사업성과를 반영하기에 적절치 않아 재검토해야 함.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90.7	3.7	•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수요 및 시장환경 변화 대응, 현장의 수요 등을 반영한 농촌관광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주요 평가 의견	비고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93.3	4.0	• 지역 내 양조 원료 조달, 연계 관광 프로그램 구성, 귀농·귀촌자 및 청년과의 협업 등 사업성과의 지역 사회확산이 추진되어야 함.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93.3	4.3	• 청년 대상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함.	
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92.7	4.7	•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교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 거점으로 활용, 개방적 시설 운용이 필요함.	
4-3-3-3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92.0	4.0	• 사업 종료 이후 운영계획 마련 및 사후 효과 평가를 위한 점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4-3-3-10	말산업육성지원	88.7	3.7	• 구체적인 사업성과 파악을 위해, 성과지표인 정기승마 인구수의 연도별 증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93.3	4.0	• 결혼이민여성 참여 및 수혜 확대를 위해, 다문화센터 차원의 면밀한 수요조사 및 기획,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6.0	4.0	• 주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함.	

4.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4.3.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제4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본 방향에 맞게 설정되었으며, 농어촌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기반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로 평가되었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로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평가되었다.

  * 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4-1-1-2)' 사업은 단지 조성에 집중된 사업으로 향후 이를 활용하여 수산식품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토록 할 후속 사업이나 연계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책 사업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예산 집행 시기도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4-1-1-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4-1-2-5)'는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능한 수요조사와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사업실행이 잘 이루어졌으나 특정 사업들은 보조금 집행 시기 등 예산 집행 시기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4-1-1-3)'에는 보조금 집행이 9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장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으나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지표들이므로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4-1-2-5)'는 직거래나 온라인거래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케 할 필요가 있다.
  * '푸드플랜 내실화 ②(농산물 직거래 활성화)(4-1-2-2)'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결과(매출액, 참여농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케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거점단지 조성과 유통체계 개선, 관련 6차산업 육성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4-1-1-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4-1-2-4)',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4-1-1-3)'에는 단지 조성이나 클러스터 조성, 센터 건축 공정율 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가지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들이 있었다.

-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4-1-1-1)' 사업은 연 4회에 걸친 내외부 관계자 회의를 통한 신규심사기준 일원화 및 심사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4.3.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세부사업들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 기술 확산(4-2-1-4)'사업에서 성과로 나온 농촌관광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고 기술과 '음식관광 활성화(음식관광 상품개발 보급)(4-2-1-5)' 사업에서 성과로 나온 결과들이 농어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연계조치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에서 정책사업 시행 이후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를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 수혜 지역이나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 등 관광객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 '어촌관광 활성화(4-2-1-2)' 사업으로 육성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조정된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는 양호하나 정책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영향의 지속적 감소를 고려한 사업 목표 설정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일부 정책사업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 기술 확산(4-2-1-4)' 사업에서 성과로 나온 농촌관광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고 기술이 계획 대비 200%를 달성하였다.

- 일부 성과지표는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농촌관광 활성화(4-2-1-1)' 사업의 현 성과지표는 농촌관광객 수인데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농촌관광 경험자의 부문별 만족도나 농촌관광 종사자들의 정책 관련 지표 등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관광객, 사업참여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이 중요하다.

-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해양관광 활성화(4-2-1-3)' 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는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4.3.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및 취업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려는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어촌 취업·창업을 촉진 사업들은 농어촌경제의 활력과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 및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4-3-1-2)'과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4-3-1-3)' 사업 모두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대체 사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귀농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실습농장에서의 훈련이 필요한데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농어촌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4-3-1-7)'사업은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신규 선정지구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행하는 등의 유효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과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가 연결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4-3-3-4)'사업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 사후 성과평가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4-3-3-6)'사업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농관련 기업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및 컨설팅 단계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사업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부분 사업의 목표 달성도가 우수하였고 일부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4-3-1-2)' 사업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지원 100명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113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졌지만 2023년을 끝으로 일몰하게 되었다.
  *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4-3-2-1)' 사업은 귀농·귀촌교육자의 정착률을 교육이수자대비 30%로 책정하였는데 실제 성과는 42.1%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사업은 농촌살아보기를 통한 귀농·귀촌탐색과 실행 준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농정원, 지자체의 교육과 도시민 유치지원을 통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 활력,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일부 성과지표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아 대안적인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4-3-3-3)'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본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기는 어렵기에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양식장 설치 추진현황이나 스마트양식장 생산량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4-3-3-5)' 사업은 성과지표로 참가자수, 지원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창업인턴제 참가 및 기업지원에 따른 결과물(창업자수, 매출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더 적절하다.

❍ 전반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일부 사업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 '산림 휴양지유공간 조성(4-3-3-8)' 사업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4.3.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해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경력단절 및 다문화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은 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4-4-1-1)’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형 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책수행도 평가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농촌 고용인력 지원(4-4-2-1)’ 사업은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 지원과 같이 농어촌 지역의 인력 여건을 반영한 사업으로 정책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높게 평가되었다.

❍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추진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아직 부족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의 인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인력중개 역량과 정부의 예산 확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 ‘농촌 고용인력 지원(4-4-2-1)’ 사업과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4-4-2-2)’사업은 농어촌 인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과 수협 등 민간 협력기관의 인력중개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가 우수하였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야 할 사업들도 있었다.

- 대부분의 사업들의 목표 달성도가 우수하였고,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있었다.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4-4-1-1)’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건수인데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다.
  *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4-4-1-2)’ 사업은 다문화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로 교육참가자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다.
- 일부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4-4-1-2)’ 사업의 취지를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다문화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인 교육참가자수는 단기간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에게는 적절하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좀 더 개선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농어촌 인력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시행되었다.

- 농어촌 취창업 여건 및 인력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4-4-1-1)’ 사업에서 취업 지원 효과 중에 농어촌 취창업 비중이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에 대한 요인분석이나 후속 조사 등이 필요하다.

4.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코로나 지속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 사업들도 있었다.

-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계 작업이나 추가조치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다.

❍ '농어촌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의 일부 과제들은 성과지표가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기에 지표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정책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사업은 보조금 집생 시기 등 예산 집행시기가 적정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의 사업들에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문객 등 관광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사업별로 잘 점검해야 한다.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사업들 중에 농어촌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하는 사업들은 농어촌 경제의 활력과 지역의 삶의 개선에 영향이 크므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 사업들은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나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사업 규모가 부족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의 인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예산를 확대하고 민간의 인력 중개 역량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표 2-26〉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89.3	4.0
농어촌 관광 활성화	90.1	3.8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92.2	4.1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92.7	4.5

3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1. 정책사례 모니터링 개요

1.1.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목적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매년 상반기에 수행한 서면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정책 수행도가 부진하거나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에 대한 정책 성과가 불분명한 과제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현장에서의 정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 따라서 정책사례 모니터링 절차는 서면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원회 안건 보고 및 심의, 국회 제출을 완료한 이후인 매년 하반기에 수행된다.

1.2.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과제 선정

❍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과제는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 수행도가 미흡하여 '개선 필요 과제'로 평가된 7개 과제 중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3개이다.

-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개선 필요 과제' 7개 중 정책 시의성, 점검 수행 및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3개 과제를 최종 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개선 필요 과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1-2-3), 찾아가는박물관 운영(2-3-2-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3-3-3-3),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3-1-1-4),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4-2-1-1),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4-3-3-4), 수산물 유통체계개선 ①(4-1-2-4)

〈표 3-1〉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사업

번호	부문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 부처
1	교육·문화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교육부
2	교육·문화	2-3-2-3	찾아가는박물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3	정주생활기반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국토교통부

1.3. 정책사례 모니터링 내용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개요를 점검하고, 앞서 이루어진 점검·평가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이슈를 도출한다.
- 중점 이슈는 사업의 목적 및 세부 목표의 정합성, 사업 추진 절차, 예산 집행 방식 등을 포함한다.
- 도출한 중점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면담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2. 결과①: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2)]

2.1. 사업 개요 및 중점 이슈

2.1.1. 사업 개요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본 사업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강점을 반영한 특색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지역 기관과 농어촌 단체, 마을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2017년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이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 ① 농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특색화하고, ②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본 사업은 단위학교형과 교육지원청형 2가지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한다.

- 2021년도에는 단위학교형 54개교, 교육지원청형 9곳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총 64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사업 전체 소요 예산은 790백만 원).
- 특히 기존의 단위학교 중심 특색사업이 학교별 성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의 한계를 발견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형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의 장점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는 '참좋은 작은학교 공모전'을 운영하였다.

---

2)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함.

- 2020년도에 도입하여 2회차인 2021년도에는 총 113개 학교가 지원하여 16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2.1.2.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한 중점 이슈 도출

❍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79.3점으로 평가되어 '개선 필요 과제'로 분류되었다.

〈표 3-2〉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 평가 점수

구분			점수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7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9.3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5)		5.0

❍ 계획·집행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 교육 분야의 핵심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며, 각 지역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 체계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집행된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 감축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나 균특회계, 일반회계 없이 기타회계만으로 운영되는 회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책 성과 및 정책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만족도 조사라는 현재의 성과지표에 보강이 필요하며, 전체 농촌 주민 중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주민의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이들의 만족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활력을 유발한 효과(타 주민에 대한 영향력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우수사례나 활성화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게 제시되었다.
- 시·도 담당자 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있었으나, 의견수렴의 결과 정책 개선 노력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본 사업에 대한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 모니터링에서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검토해야 할 중점 이슈는 아래와 같다.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의 중점 이슈
1) 예산 감소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
2) 사업의 현 평가지표(만족도)의 적절성 및 보조지표 필요성 검토
3)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정책 반영 여부 확인

❍ 이상의 중점 이슈를 검토하고자 2021년 본 사업이 이루어진 지자체의 담당자와 농어촌 학교의 담당 교직원 및 교장을 각각 면담하였다.

-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형, 단위학교형의 2가지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 형태에 따른 사업 추진 방식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교육지원청형 사업에서 예산 투입 및 사업 추진 방식, 사업에 관한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및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단위학교형 사업에서 각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 및 사용 방식, 현장에서의 의견수렴 및 사업 효과의 확인 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2.2. 정책 개요

2.2.1. 사업의 목적 및 세부 목표

❍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농어촌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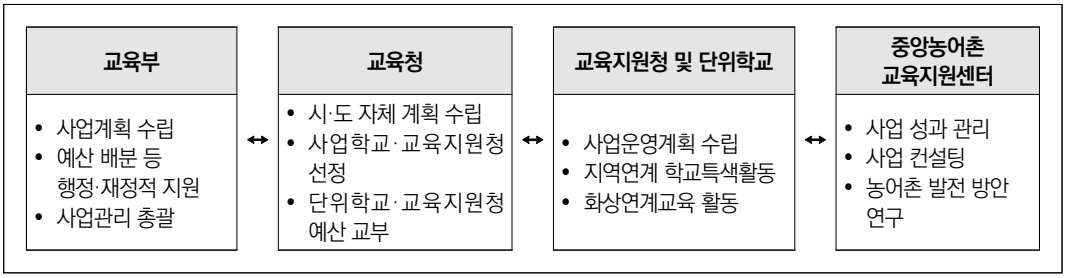
-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특색프로그램이 학교별 역량에 따라 성과 편차가 고르지 못하다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형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2.2.2.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 기관 선정

❍ 교육지원청형 사업은 시·군 교육지원청 주도로 지역사회 내 농어촌 작은학교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단위학교형 사업은 시·도 교육청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이때 중간지원조직인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학교 간 교류 및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자료: 교육부(2022).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 2021년 교육지원청형 사업 9곳과 단위학교형 54교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 (교육지원청형)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농어촌 학교의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 (단위학교형)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의 지역연계 역량에 따라 대상 학교를 선정 및 운영하였다.

2.2.3. 사업 진행 방식 및 내용

❍ 단위학교형 사업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된 단위학교가 농어촌 특색이 반영된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인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설명회를 통한 컨설팅 및 학교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 2021년도 사업에서는 54개교 학교에 총 1.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학교별로 상이하다(학교당 10백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학교 선정 시 단일 연도 예산 지원보다 3년 또는 4년 계획의 계속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학교에서는 농어촌 특색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1년 회계 예산 중 일부로 활용하여 교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 교육지원청형 사업은 지역사회 내 학교 간 교육공동체를 강화를 목표로 하여 사업대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①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 체계 확립, ② 학교와 지역 간 교육협력체계 구축, ③ 소규모학교 지원 체제 확립 등 3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 2021년도 사업에서 9개 교육지원청에 각 50백만 원씩 총 450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 교육지원청 주도로 학교 간 협력교육활동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 지도안, 교재 개발이 추진되었다.
- 각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

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건수'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공통필수 지표로 포함하였다.

- 그 외 별도의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기본 방향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교육지원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 교육청지원형 사업 추진 사례(전남 해남군) 〉

❍ 학생신문 발간 활동 및 학교 간 협력 활동 지원

-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진로 체험의 기회 제공
- 지역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해남지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
- 신문, 영상, 뉴스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경험하고, 해남지역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
- 해남신문 기자단(12명) 기자 교육 연수 및 신문 출판(6회) 및 배부, 뉴스 제작 및 송출(6회) 등으로 해남지역 홍보를 통해 해남교육공동체의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
- 35개교 2,431명 학생이 참여하여 청소년 시각에서 학교 및 지역의 청소년 현안을 제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 조성

자료: 교육부(2022).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2.3. 정책 추진 사례 모니터링

2.3.1. 해남교육지원청 사례

❍ **(개요)** 해남교육지원청은 2021년 교육지원청형 사업이 추진된 9개 기관 중 하나이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1로 4개년 사업이 추진되었다.

- 교육지원청형 사업이 추진된 지역 대부분 초등학생 수 3,000명 이하, 중학생 1,800명 이하, 고등학생 2,300명 이하로, 대부분 소규모학교이다.

〈표 3-3〉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현황 (2021년)

구분	학교 수(교)	학급 수(학급)	학생 수(명)
초등학교	21	190	2,547
중학교	11	71	1,398
고등학교	4	69	1,182

자료: 교육부(2022).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 **(예산)** 2021년도 사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 추가로 군에서 4,300만 원, 도 교육청에서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 202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온 4개년 간 각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는 본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 연도별 지원받은 예산은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 7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 2022년 2,750만 원이며, 2020년 이후 예산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특색사업①: 지역연계 프로그램)** 교육지원청별 사업은 각 지역에 따른 특성을 살려 추진하였는데, 해남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언론사와 협력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 해남 지역사회에서는 침체되어있는 지역 언론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 해남신문 기자단이 참여한 기자 교육 연수 및 신문 출판·배부, 뉴스 제작 및 송출 체험 등 프로그램에 35개교 2,431명 학생이 참여하였다.

❍ **(특색사업②: 학생 교통 지원)** 4천만 원 예산을 배정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해남교육 타고가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 학교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 읍내에 소재한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소재지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차량 지원도 제공하여 호응하였다.

〈표 3-4〉 해남교육지원청 세부 프로그램 추진 사항

영역	세부 프로그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계 확립	• 학생동아리 운영,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해남학생 기자 및 해남 학생신문 발간, 작은학교 교육활동 홍보리플릿 및 책자 제작 홍보, 마을교사 발굴 및 교육과정 연계체험 자료개발 보급
학교와 지역 간의 교육 협력 체계 구축	•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 운영, 마을학교 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연계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체제 확립	• 해남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 및 교육분야 지원, 읍·면별 경청올레 운영, 해남교육 타고가요 교통 지원, 소규모 학교 교사 네트워크 동아리 운영, 해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자료: 교육부(2022).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 **(성과지표)** 해남교육지원청에서는 2개 필수 지표를 포함한 8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 중 6개 목표를 달성하였다.

- 학생신문 기자단 발간 횟수 등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교통비 지원 학생 수는 미달되었다.

〈표 3-5〉 해남교육지원청 사업 성과지표 이행 실적

성과목표 내용	목표(A)	실적(B)	이행률(B/A)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건수(필수)	2	2	100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건수(필수)	25	25	100
학생신문 기자단 신문 발간 횟수	6	6	100
학생 교육활동 교통비 지원 혜택 학생 수	15,000	12,000	80
해남마을교육공동체 지역민-지자체-유관기관 참여 팀(인원)	40팀(100명)	45팀(380명)	113
학생동아리학교(동아리 활동) 참가 팀 수	15	12	80
해남 학생과 세상 사람의 만남 횟수	3	6	200
학생자치연합회 운영	2	2	100

자료: 교육부(2022). 『202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및 기관 간 교류, 정책환류를 지원하였고, 실제 해남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2021년 한 해 동안 3차례 교육협의회(1박 2일)가 개최되어 본사업에 참여하는 타 교육지원청과의 교류,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또한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개선 필요 사항)**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초·중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에서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

- 해남교육지원청에서는 본사업 외에도 2019년부터 '전남해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과 상호보완을 하며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하지만 본 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해남처럼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교육 예산을 편성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업 대상 학교의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설정되어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학급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 응답이 섞여 엄밀성이 떨어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교육부 지침 아래 성과지표가 측정되지 못하였다.

2.3.2. 강진군 옴천초등학교 사례[3)]

○ **(개요)** 2019년부터 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은 지원을 받은 4년차에 해당한다.

- 2022년을 기준으로 학생은 22명, 교장·교감 및 행정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수는 22명이다.
- 학생 22명 중에는 옴천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타지역 출신 학생 5명이 포함되어 있다.

○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 도교육청으로부터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예산 8백만 원을 지원받아, 학교에서 운영하는 4개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인 '반딧불이마을학교'에 4백만 원, 여름·겨울 방학 캠프에 2.4백

3) 옴천초등학교 사례의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시 2022년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기에, 본문의 내용은 2022년도 추진 사항임을 알림.

만 원, 창체 동아리 활동에 1백만 원, 김장 만들기 봉사활동에 60만 원을 집행하였다.

- 단일 학교 입장에서 본예산을 지원받아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창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과 중앙부처, 지자체 지원 등 1년간 학교 운영 예산의 일부로서 활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예산의 기준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전년도인 2021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의 예산으로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창체 동아리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작은학교 캠프 등)되었다.
-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감액되었으며, 학교는 본사업이 2022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후속 지원 사업을 탐색 중이다.

○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를 올리는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주도하여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 각 학교의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운영에 어려운 점이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컨설팅단이 사업계획서 및 프로그램 추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견을 제공하였다.
- 옴천초등학교는 전교생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활동으로 프로그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학교만의 장점을 부각하는 특색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매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전교생과 학부모에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 및 개선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 **(개선 필요 사항)** 개별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하다가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농어촌 학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데 학교 단위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본사업과 같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 본 사업은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특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학교 입장에서 한 해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사업만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농어촌 학교, 특히 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진 특색을 살려 도시 또는 읍내 학교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과 같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2.4.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과제

2.4.1. 중점 이슈 점검 결과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사업(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3가지 중점 이슈에 대하여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점 이슈 ① 예산 감소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 점검 결과**

- 실제로 3개년간 추진되어온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교육지원청형 사업과 단위학교형 사업 모두 최근 3년간 단일 대상에 투입된 예산 지원 금액이 감소하였고 2020년을 전후로 감액 폭이 큰 것을 볼 때,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예산 감소의 이유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루어보고 있다.
- 교육지원청형 사업에서는 교육부 특교예산을 각 대상 교육지원청에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러지 않은 지역도 있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역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받아 교육부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이 그다지 확보되지 못한 지자체는 해마다 교육부 예산이 감소한 탓에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농어촌 소규모학교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대상의 담당자들은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22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본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앞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중점 이슈 ② 사업의 현 평가지표(만족도)의 적절성 및 보조지표 필요성 검토] 점검 결과

- 제시된 성과지표는 측정 방식의 엄밀성과 지표 자체의 적절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21년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 상에 본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사업대상 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이나,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마저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사업이 교육지원청형과 단위학교형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제시된 단일 지표는 사업 성과를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근거로 삼을 만하다. 특히 교육지원청형 사업에서는 각 사업대상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건수'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본사업의 방향과 부합하는 보조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단위학교형 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시된 지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중점 이슈 ③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정책 반영 여부 확인] 점검 결과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센터 간 대면-비대면 업무협의를 6차례 진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의 비대면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도 6차례, 사업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와의 협의도 비대면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대한 의견 방문 컨설팅 및 대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업 당사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연구진이 수행한 면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다만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제출한 2021년 추진실적 자료에 충분히 기술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내용이 점검·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2.4.2. 사업 개선 과제

❍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을 끝으로 종료가 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 개선 과제가 반영될지 여부가 미지수이다.

❍ 다만 시행계획 점검·평가 시 전문가 평가의견 및 사업 담당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본 사업에 대한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유사 사업에 대한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지원청형 사업과 단위학교형 사업의 현장에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학교 간 협력,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3. 결과②: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3.1. 사업 개요 및 중점 이슈

3.1.1. 사업 개요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1988년부터 운영되어왔으며, 본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2009년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
-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박물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향유의 음영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역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매년 7~9개의 지역 박물관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 선정된 지역 박물관에 찾아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021년엔 총 7개의 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사업 운영을 위해 총 9,400만 원(전액 국고)을 소요하였다.

3.1.2.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한 중점 이슈 도출

❍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78.7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 필요 과제’로 분류되었다.

〈표 3-6〉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평가 점수

구분			점수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5.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78.7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5)		3.3

❍ 계획·집행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화향유의 음영을 해소한다는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 어린이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도시와 농어촌의 사업 비중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농어촌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행방식이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농어촌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농어촌의 문화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 정책 성과 및 정책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지표는 '교육 참여 인원수'로, 계획은 1,600명이었으나, 1,354명이 참여하여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수혜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체 사업 수도 7개 기관에 불과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매년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농어촌 지역의 체감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인형만들기에 치중되어 있어, 박물관 서비스로서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참여하는 지역박물관과 협업하여 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사례 모니터링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및 개선과제를 도출할 5개의 중점 이슈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의 중점 이슈
1) 사업량이 저조하여 소외지역의 문화 음영 해소 한계
2) 일회성 사업으로 농어촌 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효과 미미
3) 도농 구분 없이 전국 대상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혜택 한계
4)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도농 구분이 없어, 농어촌 지역 체감효과 판단 불가
5) 교육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 농어촌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노력 저조

❍ 위의 5개 중점 이슈를 조사 및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① 사업의 수행자인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사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② 2021년 사업이 진행된 2개 지역 박물관의 사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소요, 사업량,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사업을 진행한 3개 지역 박물관의 사례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업의 진행방식, 진행된 교육 콘텐츠, 참여 학생 중 농어촌 어린이 비율, 사업의 효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2. 정책 개요[4)]

3.2.1. 사업의 목적 및 세부 목표

❍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여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이 박물관이라는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 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① 박물관이 없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② 지역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활성화 도모 등 두 가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첫 번째 세부 목표인 박물관이 없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는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2019년부터 중단되어 2021년 사업 내용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 사업부터 다시 소외 지역에 있는 18개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두 번째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획 능력이 부족한 지역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함으로써 해당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협업으로 기획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당 박물관이 새로운 교육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2.2.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 기관 선정

❍ 본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지역 박물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7개의 지역 박물관을 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사업 대상 박물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당 일정

4)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의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과 사업 관련 문건(사업 담당자 제출)을 활용하여 작성함.

에 맞추어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업 담당팀이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림 3-2〉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추진 절차

박물관 및 지역 선정 (전년 12월)	→	운영계획 보고 2월	→	사업 추진 3월 ~ 11월	→	사업 결과 보고 12월

❍ 공모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총 7개의 지역 박물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 박물관을 우선 선정토록 하였고, 〈표 3-7〉과 같이 2021년도 사업에선 군지역 3개, 도·농복합시 3개, 광역시 1개의 지역 박물관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 지역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전시 버스의 주제와의 연관성도 사업 대상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표 3-7〉 2021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진행 기관

방문기관	소재지	일정	세부 교육 주제명		
			주제학습	전시 관람	체험학습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군 금산읍	9.29.-10.1. 10.6.-9	지켜줘서 고마워		
			세계인형, 가신	특별전시실	걱정 인형 만들기
고려청자박물관	강진군 대구면	10.13.-15.	굽네 자기!		
			청자	상설전시실	키링 만들기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낙안면	5.12.-14. 9.8.-10.	한창 기억 속의 인형		
			한창기, 인형	한창기관	걱정 인형 만들기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 교동	11.10.~12. 11.17-19.	아랑과 3대 신비		
			아랑전설과 3대 신비	상설전시실	걱정 인형 만들기
대구섬유박물관	대구광역시 동구	5.26.-28. 10.20.-22.	나는 꼬마 양장사		
			인형과 패션	패션전시실	봉제 인형 만들기
하회세계탈박물관	안동시 풍천면	5.19.-21. 6.2.-4.	인형무락(人形舞樂)		
			세계인형	세계탈	하회탈 인형 만들기
한독의약박물관	음성군 대소면	10.27.-29. 11.3.-5.	걱정마, 친구야!		
			신비의 약	상설전시실	걱정 인형 만들기

3.2.3. 사업 진행 방식 및 내용

❍ 사업 대상 지역박물관과 협의하여 3~5일 동안 매일 2회씩 한 박물관 총 5회~11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4살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 사업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해당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시간 반~2시간 코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은 자체 제작한 전시 버스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전시 버스를 통해서 소외 지역 어린이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박물관의 인력 및 예산의 문제로 진행하지 않았던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였다.

- 3년에 한 번씩 주제를 바꾸어 전시물을 개편하고 있으며, 2021년엔 '신비한 마법의 방'이라는 주제로 세계인형을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하였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시도 포함되어 있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배부하여 전시관람을 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관람 소요시간은 20분 내외로 주제를 바꾸어 개편 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버스 개편 시엔 사업 예산 외의 별도 비용의 편성이 이루어진다.

〈그림 3-3〉 2021년 운행된 전시 버스 전경과 내부

자료: 고려청자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제공

-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박물관과의 협의를 통해 박물관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해당 박물관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업팀에서 재료 준비 등 모든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였고 3명의 강사를 지원하였다.

❍ 사업을 진행하는 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미리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 진행 시 해당 박물관의 전시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 진행 전에 미리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가족 단위나 개별 신청보다는 기관별 단체 참여자로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강사 수와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 회당 참여인원은 최대 25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 해당 박물관의 전시물을 가지고 도슨트(전시물 해설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021년 사업에 총 9,400만 원(전액 국고)의 예산이 활용되었고, 지역 박물관에 직접적인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비, 버스 관리 및 운영비, 운전사 비용, 사업팀 체류비용 등에 예산이 사용되었다.
- 소규모 예산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박물관의 개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 사업팀에서 직접 현장 진행하였다.

-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참여 어린이와 교사 70~80명 정도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거주자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진 않다.

3.3. 정책 추진 사례 모니터링

3.3.1. 고려청자박물관(강진군 대구면) 사례

❍ **(개요)** 고려청자박물관은 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지역 박물관으로, 2021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총 5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실제로는 총 4회 진행하였다.

❍ **(신청 이유)** 고려청자박물관에서도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 서비스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며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이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고려청자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꾸려오는 전시 버스를 강진군 지역 학생들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 한 회차당 고려청자박물관의 전시 관람,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관람, 전통 그릇 자기에 대한 강의, 자기 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4개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프로그램은 한 회차당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 고려청자박물관 전시 관람과 전통 그릇 자기에 대한 강의는 고려청자박물관의 인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관람과 자기 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은 국립민속박물관 내부 인력 3인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원하는 강사 3인이 진행하였다.

〈표 3-8〉 2021년 고려청자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굽네! 자기!		
활동	슈링클스 도안을 활용한 자기 키링 만들기		
대상 및 인원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	교육시간	100분 내외
학습 주제	우리 고장의 자기를 알아보고, 나만의 자기 만들어보기.		
학습 목표	• 자기의 굽는 과정을 이해해 볼 수 있다. • 전통 자기의 다양한 문양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고장의 유물을 살펴보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장소
도입		◎ 인사하기 ◎ 학습 문제 제시 ◎ 활동 내용 소개하기 ◎ 약속하기	10분	교육실
전개	전시 관람	◎ 강진청자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관찰하기 ▸ 우리 고장에는 어떤 도자들이 있을까요?	20분	전시실
		◎ '신비한 마법의 방' 전시 관람하기	20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활동1	◎ 흙에서 자기로 변신! ▸ 다양한 모양의 자기 이해해보기 ▸ 문양의 종류 및 의미 알아보기	15분	교육실
	활동2	◎ 자기 도안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 나만의 자기 자랑하기 ▸ 이야기 나누기	30분	교육실
마무리		◎ 교육내용 점검 ▸ 설문지 작성하기	5분	교육실

자료: 고려청자박물관 제공.

○ **(기획 프로그램)** 고려청자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협업하여 '자기 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을 기획하였다.

- 기획하는 과정에서 민속박물관 측에서 전통 자기 만드는 방식과 흡사하게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만드는 슈링클지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를 제안하여 추진하였다.
- 고려청자박물관 측에서도 처음 접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차후에도 교육 콘텐츠로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3-4〉 자기 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 사진

자료: 고려청자박물관 제공.

○ **(참여자 모집)**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는데, 13일과 14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씩 진행하였고, 15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침으로 오전만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 회차는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4회만 진행하였다.

- 오전은 초등학교 단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오후엔 홍보를 통해 가족 단위의 단체 관람객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 지역 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위주로 모집하였고, 작천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 계산초등학교에서 각 20명 내외씩 참여하였다. 3개 학교 모두 면지역의 작은 학교에 해당하며, 작천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가 24명으로 전교생 모두 참여하였다.
- 그러나 오후 시간대 참여자에 해당하는 가족 단위는 8명이 참여하였고, 1회만 진행되었다. 미리 참여자 예약을 받지 않고 당일에 찾아오는 관람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후에는 학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단위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사업의 효과)** 참여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판단되며, 고려청자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농촌 지역 학생들에겐 일회성 관람일지라도, 지역 특성상 문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도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전시에 포함된 증강현실이나 뉴미디어 활용 등이 농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 지역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협업·기획하였던 슈링클지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을 교육재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개선 필요 사항)** 참여자 폭을 넓혀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려청자박물관은 총 5회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오후 시간대 가족 단위 모집이 어려워 프로그램 1회는 무산되었고, 1회는 8명의 인원으로만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4학년으로 모집 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만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이에 더해, 프로그램 1회당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전 시간대에 운영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농촌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3.3.2. 한독의약박물관(음성군 대소면) 사례

❍ **(개요)** 한독의약박물관은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지역 박물관으로, 2021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사업을 진행하였다. 10월27일~29일, 11월3일~5일 6일간 총 11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실제 총 8회 진행되었다.

❍ **(신청 이유)** 음성군 어린이에게 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중심 거점 박물관이 부재하여, 한독의약박물관을 통해 농촌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음성군에 지역 중심 거점 박물관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독의약박물관이 음성군에게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이지만, 의약 전문 박물관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 한독의약박물관은 어린이 눈높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특히, 음성군 어린이보다 경기도권인 진천군 어린이들이 더 박물관을 많이 찾는 상황이어서, 관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또한 어린이들이 서울까지 가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시 버스 관람의 기회가 농촌 어린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 한 회차당 한독의약박물관의 전시 관람,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관람, 걱정 인형 만들기 등 3개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한 회차당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한독의약박물관 전시 관람은 박물관의 인력으로 진행되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관람과 걱정 인형 만들기 활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운영 요원 3인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원하는 강사 4인이 진행하였다.

〈그림 3-5〉 한독의약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 활동 사진

자료: 한독의약박물관 제공.

○ **(기획 프로그램)** 국립민속박물관의 제안으로, 건강과 관련된 한독의약박물관의 컨셉에 맞추어 아이들의 무서움과 걱정을 쫓아내는 걱정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아이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걱정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의 주제인 인형과 한독의약박물관의 건강 주제를 고려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획을 제안하였다. 사업이 끝난 후엔 활용하고 있지 않다.

○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은 6일간 총 8회 진행하였고, 회차당 20~30명 내외의 학생들을 기관별로 모집하여 총 10개 기관에서 총 19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11회 중 3회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 음성군 내 모든 초등학교에 먼저 연락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부족한 인원은 인근 지역인 진천군의 초등학교와 음성군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모집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 회차당 한 학급이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30명 이하로 참여 제한을 두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어린이를 모집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농촌 지역 초등학교가 대부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년에 30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한 학년이 모두 참여하거나 3학년, 4학년 학생이 모두 참여하기도 하였다. 몇몇 작은 학교들은 전교생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30명이 넘어 참여하지 못하였다.
- 또한 농촌 지역 내의 학교 수 자체가 적어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로 인원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 당초 기획된 11회 차 중 3회 차는 운영하지 못하였다.

〈표 3-9〉 한독의약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일지

교육일	교육시간	학교명(학년)	참여 학생 수
10월 27일	- 오전 1회 운영하지 못함		
	15:00-17:00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새미실아동센터	30
10월 28일	10:00-12:00	삼성초등학교(3학년)	24
	13:30-15:30	몬테소리유치원	27
10월 29일	- 오전, 오후 2회 운영하지 못함		
11월 3일	10:00-12:00	삼성초등학교(4학년)	23
	15:00-17:00	영재아동센터, 오미들아동센터	30
11월 4일	10:00-12:00	소이초등학교(3,4,5학년)	30
	15:00-17:00	삼성지역아동센터	15
11월 5일	10:00-12:00	구정초등학교(3,4학년)	20

자료: 한독의약박물관 제공.

○ **(사업의 효과)** 소외 지역 어린이가 접하기 힘든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박물관의 입장에선 홍보 효과와 더불어 어린이 교육 서비스 구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 농촌 어린이들은 전시 버스처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전시를 관람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일회성의 경험일지라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상현실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시품은 어린이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독의약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의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친근

한 박물관은 아니었지만, 본 사업을 통해 음성군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어린이가 재방문하거나 소개들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박물관에선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지원 강사들의 교육 방식과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

❍ **(개선 필요 사항)** 농촌 지역의 환경에 맞게 참여자 모집 기준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말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농촌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농촌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작은 학교들이고 초등학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회차당 한 학급을 받거나 초등학교 3학년~4학년 학생으로만 제한을 두는 식으로 진행하면 참여자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작은 학교의 경우 30명이 조금 넘더라도 전교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유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농촌 지역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박물관은 주말에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본 사업이 주말에도 진행될 수 있다면 가족 단위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다.

3.4.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과제

3.4.1. 중점 이슈 점검 결과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의 5가지 중점 이슈에 대해, 정책 사례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점 이슈 ① 사업량이 저조하여 소외지역의 문화 음영 해소 한계] 점검 결과**

- 1년 총 예산이 약 1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지역 박물관 7개를 선정하여 1개 박물관 당 3~6일 동안 진행되는 것에서 사업량을 더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 양적으로 보았을 때 소외지역의 문화 음영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순 없으나, 사업이 진행된 현장에선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엔 특히 어린이를 위한 문화 거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사업일지라도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가 한 번이라도 접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사업이 진행된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 횟수(하루에 1시간 반씩, 오전과 오후 2회 운영, 평일에만 사업 진행)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박물관에서 3~6일 동안 사업이 진행될 때 운영 회차 수를 더 늘리거나 주말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민속박물관 측에선 지역 박물관 사업은 줄이고 직접 소외 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다.

❍ **[중점 이슈 ② 일회성 사업으로 농어촌 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효과 미미] 점검 결과**

- 일회성 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촌의 열악한 문화 여건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 한번의 경험도 농어촌 어린이에게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의 콘텐츠는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면서 증강현실 등의 뉴 미디어를 접목하여 농어촌 어린이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농어촌 문화 서비스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어촌 어린이에게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사업이다.
- 그러나 참여자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한 회차당 3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참여자 제한 요건으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역 박물관 2개 사례 모두 참여자 제한 문제로 인해 당초 기획한 운영 회차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고려청자박물관 당초 5회 기획하였으나 4회차 운영, 한독의약박물관 당초 11회 기획하였으나 8회차 운영).
- 일회성 사업인 만큼 참여자 모집을 유연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중점 이슈 ③ 도농 구분 없이 전국 대상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혜택 한계] 점검 결과**

- 전국의 지역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2021년엔 군지역 3개, 도농복합시 3개, 광역시 1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군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의 경우 관내 어린이가 참여하여 농어촌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농복합시의 경우, 박물관이 면지역에 위치해 있더라고 실제 농어촌 거주 어린이가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공모 선정 시, 소외 지역에 있는 지역 박물관을 우대하고 있지만, 군지역 사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군지역 박물관 2개소의 담당자도 언급했듯이, 본 사업이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 관람의 기회가 없는 농어촌 어린이에게 특히 더 의미와 효과가 있는 사업일 것이다.

○ **[중점이슈 ④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도농 구분이 없어, 농어촌 지역 체감효과 판단 불가] 점검 결과**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표본 추출을 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자가 70명 내외로 그 중 농어촌 지역 주민의 수는 극히 일부이다.
-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어린이에게 효과가 큰 만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때 농어촌 지역 구분을 하고, 군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중점 이슈 ⑤ 교육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 농어촌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노력 저조] 점검 결과**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준비한 전시 버스는 어린이 눈높이 맞춘 양질의 전시 콘텐츠라는 점에서 교육 콘텐츠로서 차별성과 효과가 크다.
- 지역 박물관과 협업하여 기획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고,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어린이들을 집중시키고 교감할 수 있는 강사들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지역 박물관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그러나 협업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 이후에도 활용되거나, 지역 박물관이 다른 사업이나 예산을 끌어오는 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4.2. 사업 개선 과제

❍ 중점 이슈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의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국립민속박물관은 2022년부터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을 지역 박물관과 협업하여 진행하기보다, 직접 소외지역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 박물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사업은 일회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박물관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지역 박물관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거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박물관이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이 컨설팅 및 지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역 박물관과의 협업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개별 학교에 찾아가는 방식보다 지역 박물관이 관내 학교와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어 박물관으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지역의 더 많은 어린이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지역 박물관의 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대한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횟수, 한 회당 참여자 수, 참여자 연령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사업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산 내에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보다 군지역 소재 박물관의 사업 비중을 높여, 소외 지역의 문화 음영을 해소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또한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의 여건과,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유연하게 모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차 당 정원이 30명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50명 이내의 작은 학교 전교생이 한 회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거나, 참여자가 원활히 모집되지 않을 때는 유치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많을 때는 박물관과 협의하여 하루 당 회차를 늘리는 등의 유연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협업하여 기획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역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거나,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현재,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기획할 때 민속박물관 전시 버스의 주제와 지역 박물관 주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이 기획이 장기적으로 지역 박물관에서 활용되고 지역 박물관의 어린이 문화 서비스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해당 교육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개선 사항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면, 지역 박물관이 어린이를 위한 문화 서비스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농어촌 어린이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제로 농어촌 어린이 몇 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자 인원 중 농어촌 어린이 또는 농어촌 소재 기관의 참여 비율을 확인하고 이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본 사업이 농어촌 어린이의 문화 교육에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과③: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공공형버스)

4.1. 사업 개요 및 중점 이슈

4.1.1. 사업 개요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는 현재 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과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로 사업이 나뉘어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 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제2항에 의거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에 사업시행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에 사업시행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인 시지역의 도시형 교통모델(대중교통과 버스, 택시산업팀 택시)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인 군지역의 농촌형 교통모델로 양분되며, 이를 통합하여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지칭한다.

- 현재 사업지침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시)·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다.

4.1.2.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한 중점 이슈 도출

❍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사업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78.7점으로 평가되어 ‘개선 필요 과제’로 분류되었다.

〈표 3-10〉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사업 평가 점수

구분			점수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78.7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5)		4.0

❍ 계획·집행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감소, 수익성 저하, 노선 감축, 이용객 저하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에서,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 자칫 지자체의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 성과 및 정책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성과지표는 공공형 버스 서비스 도입 지자체 수인데, 특정 시·군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매우 많더라도 도입 지자체는 1개소로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보여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사업 시행 이후 시·도에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장관의 발표문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언론 및 방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다.

4.2. 정책 개요

4.2.1. 사업의 목적 및 세부 목표

❍ **(목적)** 전국 시·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 등 투입을 지원하는 데 있다.

❍ **(운영주체)**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크게 5가지 유형(택시형(100원 택시), 마을 자조형, 지역농협 활용형, 비영리법인형, 기타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 운수업체형(유형1) : 기존 교통모델 및 지자체 자체사업의 주요 유형으로 주민 편리성은 높으나 사업의 지속성·효과성은 약하다.
- 자조조직형(유형2~3) : 다수 주민의 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효과성은 높으나 초기·운영 비용(차량 구입비·기사임금·차량 유지관리비 등)이 소요된다.
- 비영리법인형(유형4) : 비영리법인(지자체)의 주민 복지사업 차원에서 장애인·노인 등 특수 목적 무상 운영에 적합하다.

〈표 3-11〉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주체별 유형

구분	(유형1) 운수업체형 (지방공기업)	(유형2) 마을 자조형(지방공기업)	(유형3) 농협 활용형(지방공기업)	(유형4) 비영리법인형(지방공기업)
운송 수단	• 택시·버스	• 버스(셔틀/중형)	• 버스(셔틀/중형)	• 버스(셔틀/중형)
대상 지역	• 일반 지역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역 • 주민자치가 활발한 지역	• 일반노선버스 운행 부족 지역 • 지역 농협 조직 활성화 지역	•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 • 특정수요·계층(노인·장애인 등) 존재지역
운영 주체	• 택시·버스 등 운수업체	• 협동조합·사회적 경제조직 등 • 주민 자조조직	• 지역농협 또는 신협 등	• 비영리법인
운임 체계	• 유상운송(1회/ 1인 요금 100원~버스요금)	• 유상운송(버스요금)	• 유상운송(버스요금)	• 무상운송(발전기금 또는 지자체 지원)
운영 형태	• 배후마을에서 면소재지 이동, 마을에서 인근마을 이동 • 영업용택시 및 기존 영업용 버스 투입 운영	• 마을주민이 차량 현물 출자 또는 사업비로 차량 구입 • 마을순환 운행 • 운영비(기사임금, 차량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 마을, 읍면소재지 간 운행 • 지역농협 경제사업 및 조합원 환원사업과 결합 가능 • 지역농협 일부 비용 부담	• 비영리법인 소속버스 활용 • 마을을 순회하며 운행
선도 사례	• 아산시 마중택시, 순천군 버스 등	• 경기도 성남시 시민버스	• 전북완주군 로컬푸드	• 충북 옥천군 배바우 도서관 버스

○ **(사업 재원 용도)** 지원자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농어촌 및 교통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공공형버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시 현 버스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노선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별도의 운행체계 개선 없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송업체의 적자를 그대로 메우는 형태의 지원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따라 불가능하다.

○ **(사업 지원 형태)** 사업의 재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속해 있으며, 국고 50%와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재원이 지원된다.

-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기금 등 기타 기금은 추가가 가능하며, 사업시행 시·군은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의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원기준은 시·군별 3.5억 원(공공형버스 3억 원, 공공형택시 50백만 원)이 책정되고, 해당 사업이 시·도 편성사업으로 광역지지체(시·도)가 관할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간 예산 조정 등 자율 배분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2.2. 사업 진행 방식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교통서비스 제공자, 마을공동체, 이해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요금 결정, 수익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버스형 운영 운수업체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수업체의 운영비 집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 시장·군수는 교통서비스제공자와 사업차량의 운행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교통서비스제공자가 면허 등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운행상황 등을 운행일지 및 일일 안전점검표에 작성하게 하고 교통서비스제공자가 안전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사고 대처방안에 관한 일상점검', '주행 중 이상 별 조치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이 포함된 교통안전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구입 차량은 시장·군수 또는 교통서비스 제공자 명의로 등록하되, 교통서비스 제공자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시장·군수는 구입차량에 대하여 판매,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목적 외 사용 등의 처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5년 이상의 기간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버스·택시 등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발급을 필요로 한다.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정책 추진 사례 모니터링

○ 2개 도시(전북 남원시, 충남 공주시)를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배경, 주요 사업내용, 사업 추진방식을 중점 검토하였다.

4.3.1. 전북 남원시

○ **(운영 배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 감소 및 감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이 요구되었다.

- 시내버스 이용수요는 감소하지만 버스회사 지원액은 증가하여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주요 사업 내용)**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외 60개 행정리의 벽오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를 위해 7개의 소형버스를 투입하여 지역 내 마을을 순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요금은 500원으로, 240명의 일 이용객의 확보가 예상된다.

〈표 3-12〉 남원시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table>
<tr><th rowspan="2">교통서비스 제공방식</th><th>차종</th><th>운행횟수</th><th>이용요금 (현금기준)</th><th>차량대수</th><th>노선형태 및 주요 경유지</th><th>면허</th></tr>
<tr><td>소형버스</td><td>46회</td><td>500원</td><td>7대</td><td>순환운행 (지역내마을)</td><td>한정면허</td></tr>
<tr><th rowspan="2">이용대상</th><th colspan="2">주이용계층</th><th colspan="2">마을수(행정리)</th><th colspan="2">가구및인원수</th><th colspan="2">이용객수(예상)</th></tr>
<tr><td colspan="2">벽오지주민,고령자</td><td colspan="2">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외 60개 행정리</td><td colspan="2">6,625가구 12,971명</td><td colspan="2">240명/일 (7,200명/월)</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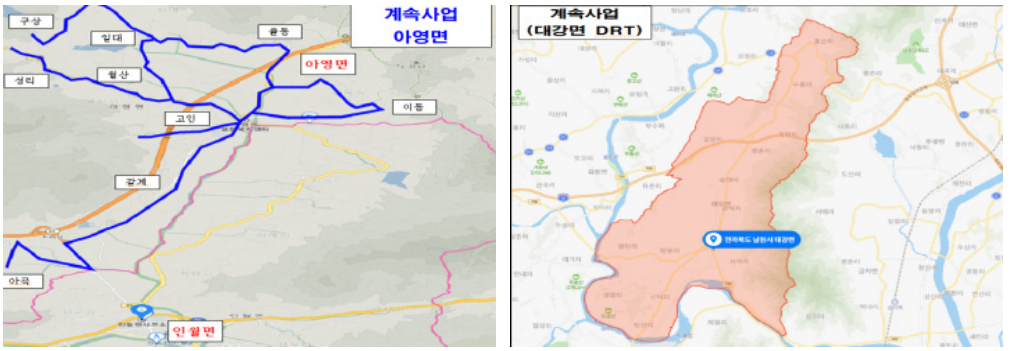
○ **(노선 및 운행 계획)** 고정형 노선 운행 및 수요응답형(콜택시 방식) 운행을 병행한다.

- **(운행 유형)** 수요응답형 운행은 대강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형 노선 운행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정령치(지리산권 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하며, 시내 순환(고정)은 출·퇴

근 시간대, 아파트 밀집지역, 시내권 중·고등학교 통학시간대를 중심으로 운행한다.

- **(운행 횟수 및 운행 시간)** 수요응답형 운행은 대강면 전 지역(07:30~19:30, 주5일 운행)으로, 고정형 노선 운행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지역에 1대씩 배치하여 11회 운행하며, 특히 정령치(지리산권 지역)(07:30~18:00)는 주 6일에 매일 6회를 운행한다.
- **(노선)** 시간표와 정류장이 고정된 (고정형) 운행 서비스 노선 계획과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대강면)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6〉 남원시 공공형버스 운행 노선(안) 사례



고정형 노선 운행 지역　　수요응답형 운행 지역(대강면)

○ **(사업 추진 방식)**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 마을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 여론 등의 반영을 위한 읍·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 운행 홍보를 위해, 해당 읍면 지역 이장회의 시 홍보(마을 엠프방송 실시) 및 현수막 게첨 및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마을을 홍보하였고, 운행 홍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 **(사업추진 주체의 협업 방식)**

- **(교통서비스 운영 및 관리)** 남원시 시내버스 운수사업(남원여객)에서 운전기사 배차, 차량관리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며,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수행하였다.

-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월별 이용실적 확인 및 이용주민 대상 설문조사지를 수시로 작성하였고, 사업시행 이후 이장회의 등 마을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사업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였다.

4.3.2. 충남 공주시

❍ **(운영 배경)** 2019년 5월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대응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첫차, 막차 시간 변경 및 운행횟수 감회가 이루어져 공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는 악화되어 이인, 탄천, 사곡, 우성 방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버스 증차를 요청하고 있다.

- KTX공주역을 이용하여 중앙소방학교 등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은 목적지까지 원활한 통행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유구(공주)~아산 지역 간 연계버스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직통버스 개설을 요청하였다.

❍ **(주요 사업 내용)** '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노선'에는 1개의 24인승 중형버스를 투입하여 KTX공주역을 이용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의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 이용요금은 1,600원으로, 78명의 일 이용객 확보를 계획하였다.

〈표 3-13〉 공주시 공공형버스(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운행계획

교통서비스 제공방식	차종	운행횟수	이용요금 (현금기준)	차량대수	면허
	중형버스(24인승)	1일 7회(편도)	1,600	1대	한정면허
이용대상	주이용계층		마을수(행정리)	가구및인원수	이용객수(예상)
	벽오지주민, 고령자, KTX공주역 이용객, 소방학교 입교자 등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외 4개 행정리	518가구 899명	78명/일 (2,400명/월)

- '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노선'1개의 24인승 중형버스를 투입하여 1일9회 운행으로 문금리 외 6개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였다.
- 이용요금은 1,600원으로, 50명의 일 이용객 확보를 계획하였다.

〈표 3-14〉 공주시 공공형버스(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운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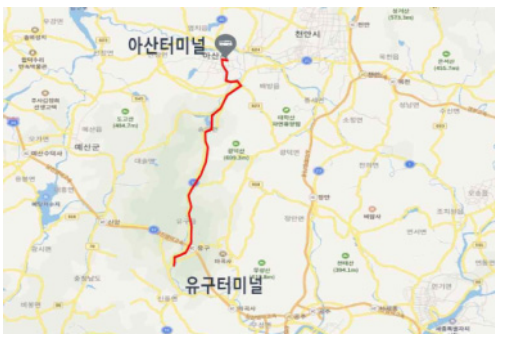
교통서비스 제공방식	차종	운행횟수	이용요금 (현금기준)	차량대수	면허
	중형버스(24인승)	1일 9회(편도)	1,600	1대	한정면허
이용대상	주이용계층	마을수(행정리)		가구및인원수	이용객수(예상)
	공주, 아산 생활권 벽지주민 등	공주시 문금리 외 6개 마을 (덕곡, 문금1, 신달1,2, 신영1,2, 입석)		490세대 948명	50명/일 (1,500명/월)

○ **(노선 및 운행 계획)** 운행 차량은 '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노선에 중형 24인승 버스 1대(2020년 구입)를 투입하였으며, '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노선은 기존 노선사 운영 중인 기존 버스(중형24인승 1대)를 투입하였다.

- (운행시간 및 시간 등 운행계통 설정) '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노선 : 공주역-오곡동-종합터미널-우성-사곡계실 소방교육단지(35km, 49개 승강장 경유, 소요시간 약 60분), '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노선 : 유구터미널-신영-신달-문금-아산터미널 (32km, 22개 승강장 경유, 소요시간 약 55분)
- (노선(안)) 시간표와 정류장이 고정된 기존 버스와 같은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7〉 공주시 공공형버스 운행 노선(안) 사례

'KTX공주역~사곡계실지구' 노선



'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노선

○ **(사업 추진 방식)** 2022년 1월, 'KTX공주역~사곡 계실지구' 노선과 '공주 유구(터미널)~아산(터미널)' 노선 운행을 동시에 개시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운행 홍보를 위해, 해당 면(마을) 차량 노선 및 운행시간 홍보 (이장회의, 홍보 전단물, 마을방송 등), 유구터미널 홍보물 게재 및 아산시에 해당노선 운행 홍보를 요청하였다.

4.4.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과제

4.4.1. 중점 이슈 점검 결과

❑ **성과**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용자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통서비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 및 이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였다.

❍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 마을버스 7대를 투입하는 남원시 공공형버스의 경우 일자리 10개(운수종사자 9명, 콜직원1명)를 창출하였다.

❑ **한계**

■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반영 미흡 (지역주민 참여 확대 필요)**

❍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은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가 대다수이다. 버스 이용의 불편요인은 도로가 좁아 대형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 못해 버스정류장까지 장시간 걸어 나가는 데 있고, 이용가능한 버스 운행 편수가 매우 부족한 데 있다.

❍ 공공형버스는 수요응답형서비스(도어투도어)를 제공하는 데 특화된 교통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노선과 정류장을 고정한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정류장만을 경유하는 기존 버스의 운행 방식을 고수하여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용자(고령주민)의 불편 해소가 불가하다.
-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이동권 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제 기존 노선버스 운행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제 지역주민의 고통받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이 미흡하다.

❍ 공공형택시는 수요응답서비스(도어투도어)에 최적화된 교통모델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유사한 공공형버스도 수요응답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 이용주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친화형 방식으로 운행체계 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소외지역 분석 미흡

❍ '도시형 교통모델(시)·농촌형교통모델(군) 운영지침'은 공공형버스를 계획함에 있어 별도의 운행체계 개선 없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송업체의 적자를 그대로 메우는 형태의 지원은 불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 상기 '운영지침'이 제시하는 공공형버스의 서비스 제공범위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노선버스와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현재 운행중인 버스를 대체 운행하는 계획수립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바람직한 공공형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기존에 운행중인 버스와의 서비스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사례지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 버스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공공형버스 노선계획을 수립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수립 시 기존 노선버스와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수요확보가 어려워 노선별 횟수가 감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양상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전략적인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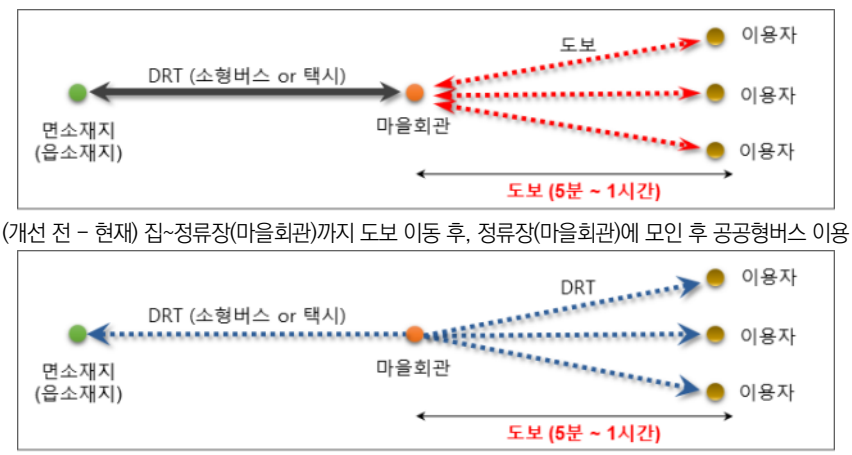
4.4.2. 사업 개선 과제

■ 수요응답 기능을 고려한 노선 운행계획 수립

○ 기본적으로 수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택시의 경우 이용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보행이 불편한 고령이용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 공공형버스 또한 공공형택시와 같이 수요응답서비스(도어투도어) 제공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노선을 고정한 기존 버스운행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형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3-8〉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개선 전/후 예시



(개선 전 – 현재) 집~정류장(마을회관)까지 도보 이동 후, 정류장(마을회관)에 모인 후 공공형버스 이용

(개선 후) 이용수요가 발생된 집에서 목적지까지 수요응답서비스(도어투도어)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관리모델 도입 (새로운 성과지표)

❍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관리모델은 특정 시군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고 공공형버스 투입을 통해 광역도가 관할하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사각지역이 균형있게 해소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 광역도는 관할 지자체의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과거사업의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개선 필요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채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공공형버스 사업을 추진·관리할 수 있다.

❍ 또한, 공공형버스가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새로운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 충남도는 시군의 대중교통 사각지역을 일괄 분석한 후,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서천군은 2019년 말 사각지역 해소율 약 41.1%을 기초로 충남도의 '사각지역 제로화' 계획과 연동된 연차별 목표 관리 및 공공형버스 투입 및 운행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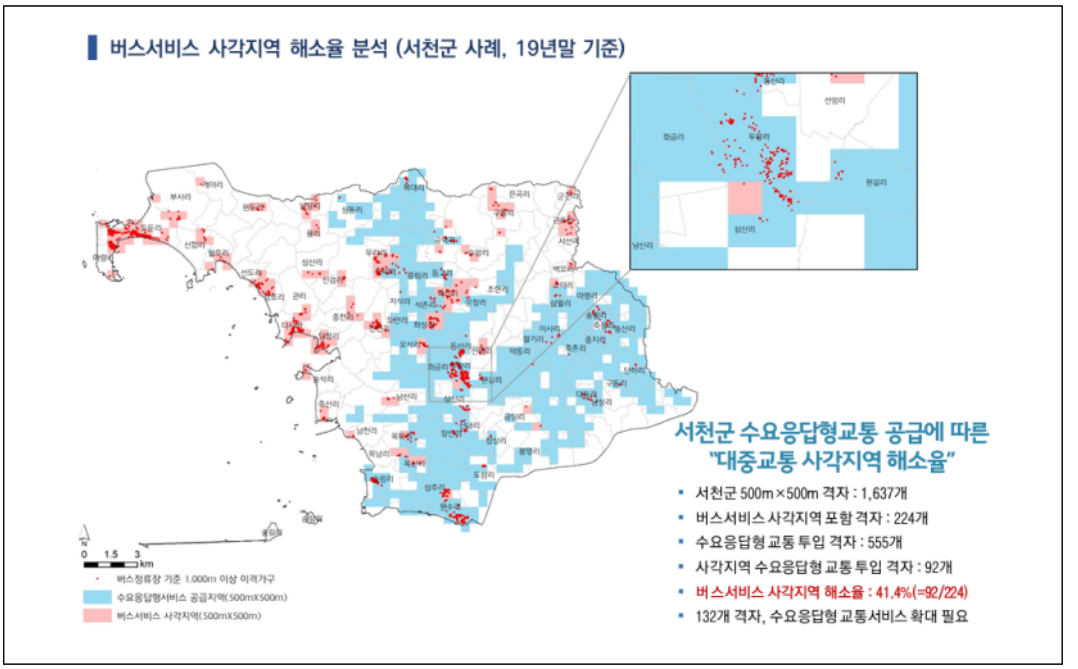
〈그림 3-9〉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관리모델 개념(충남 사례)

충남도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매년 갱신)

- 대중교통(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정책목표 달성도, 사업비, 이용자 만족도 등 주요 정책지표 관리

구분	2020(기준)	2025	2030	2035	2040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격자)	224	250	270	290	300
농촌형 · 도시형 교통모델 공급지역 (격자)	92	***	***	***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정책목표 (%)	40.0	70.0	100.0	100.0	100.0
정책목표 달성도 (%)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비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만족도 (점)	80	–	–	–	–

〈그림 3-10〉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분석(충남 사례)



4 결론

1. 점검·평가 결과 요약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대 전략 부문 및 해당 부문의 세부 정책군으로 분류된 178개 과제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6개와 지방으로 이양된 1개 과제를 제외하고 1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전체적인 점검·평가의 틀 및 세부 평가지표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지만, 기존 점검·평가를 수행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세부 평가기준 일부는 변경하였다.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서면평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가 대상으로 설정된 171개 정책 과제에 대해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집행, 사업 목표 달성과 일정 준수 수준 등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정책 수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는 90.0점으로, 전년인 2021년도 점수(89.3점) 대비 0.7점 상승하였다.

  * 정책 수행도 점수는 2020년 점검·평가 결과 90.3점에서 2021년 89.3점으로 1.0점 하락하였으나, 2022년 90.0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 점검·평가 대상 전체의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은 평균 4.1등급으로 전년인 2021년에 비해 0.1등급 상승하였다. 4등급 이상인 과제는 118개(69.0%)로, 시행계획 대상 과제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은 2020년 점검·평가 결과 4.3등급에서 2021년 4.0등급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2년 4.1로 소폭 상향하였다.

2. 삶의 질 4대 전략별 평가 종합 및 개선 방향

2.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 평가 종합

❍ 보건·복지 전략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4등급이다.

- 총 39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 과제는 12개로, 30.8%를 차지했으며, 장기 개선형, 중점 개선형의 과제는 각각 8개이며, 지속 유지형 과제는 없었다.

❍ 반면, 연차별 달성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일부 과제에서 성과지표와 연차별 달성 목표가 정책 추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 특히, 작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성과지표와 연차별 달성 목표가 애초 설정된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과제가 일부 있었다.

❑ 정책 개선 방향

❍ 보건 분야(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군)의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여건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향후 농어촌 인구규모 축소, 전문보건의료인력 감소 등의 상황 변화에 맞게 정책 운영의 취지와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필수의료 서비스 기능 유지 및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 운영 등을 위한 정책 지원방식의 변화, 농어촌 지역의 전문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이송체계의 유연화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 복지 분야(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 과제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돌봄 복지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확대, 다부문 정책 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지원 노력을 보다 충실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보육·육아 분야(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정책군)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보육·육아 수요 및 절실성에 맞게 사업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농어촌 사회안전망 분야(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책군)의 과제들은 잠재적 수요층에 비해 연차별 달성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적극적 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부합하도록 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향후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 평가 종합

❍ 교육·문화 전략 과제들은 대체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나, 단순 예산 집행 정도, 수혜자 만족도 수준을 벗어나 사업 성과를 제고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2등급이다.
- 총 31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 과제는 6개로, 부문 내에서 19.4%를 차지하였으며,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없었으며, 장기 개선형 과제는 3개, 지속 유지형 과제는 2개였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주민 주도의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등 도·농 간 문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 반면, 문화·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공동체 차원의 문화·교육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책 개선 방향

❍ 교육 분야(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 과제들은 농어촌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수업 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향후 농어촌 주민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목적 및 취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지역 교육 당국뿐 아니라 지역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직하고, 교육(지)청 외에 지자체 참여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실행 방식·추진 체계의 근본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정책군 과제들은 성과지표를 정책 공급자 중심의 단순한 정량적 측정 방식에서 정책 당사자 및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 정책 효과 측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발·개설 수, 참여 학생 수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성과지표를 단순 만족도조사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별도의 지표를 핵심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 분야(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과제들은 제4차 기본계획에 새로 포함되어 농어촌 노인을 포함한 교육 소외계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에 영향력이 큰 사업들로 구성된다. 해당 정책군 사업들은 농어촌 노인들의 교육 접근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도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문화 분야(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의 과제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등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반면, 도시 지역에 적절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특성 및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제4차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 향유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추가적으로 지방 이전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 전국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향후 사업 성과지표를 양보다 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 평가 종합

❍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들은 대체로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8.8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으로 타 전략 부문 대비 정책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 총 64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12.5%인 8개였다. 중점 개선형 과제가 3개, 장기 개선형 과제는 17개, 지속 유지형 과제가 4개이며,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32개였다.
- 해당 전략 부문 중에서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경관 보전 사업’ 정책군 사업들이 정책 성과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전략 부문 차원에서 정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이행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의 실행가능한 목표치 설정 및 적절한 정책성과관리체계 도입·운영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교통 분야(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의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제4차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력이 높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농어촌의 불리한 교통 접근성 및 인프라에 적합한 정책추진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부 과제들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 미제시 등으로 농어촌 여건에 맞추어 실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단순히 정책 담당자의 정책추진방식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과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등의 새로운 기술적 변화 상황을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단기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거나, 단순 인프라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책 과제들은 과감히 시행계획 상 삶의 질 대상 과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구 유입 촉진 분야(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의 과제들은 대체로 각각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들에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사업은 중심 거점마을과 배후 마을 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산림보호 지원' 과제의 경우 실질적인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변경 등의 개선 사항이 지적되었다.
- 대부분 과제들의 경우,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환경·경관 보전 분야(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정책군)의 과제들은 대부분 농어촌 어메니티 및 환경·경관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농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및 자율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추진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성과지표가 정책 실적의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차원에서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2.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 평가 종합

❍ 경제·일자리 전략 과제들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성과 목표가 일부 조정된 사업들도 있었지만 목표치는 보통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대체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총 37개 과제 중 32.4%를 차지하는 12개 과제가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었다. 장기 개선형 과제는 8개, 중점 개선형 과제는 2개였으며, 지속 유지형 과제는 3개 과제가 해당했다.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중에서도 특히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과제들이 우수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산업 거점 조성 관련한 사업은 정책 성과 및 환류에 대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소득 기반 다각화(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정책군)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농어촌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기반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들로 평가되었으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성과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소득 기반 다각화 정책군 과제들의 경우,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책 사업 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예산 집행 시기도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경우,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에서 정책사업 시행 이후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를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취업·창업 촉진(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농어촌 경제의 활력과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농어촌 취업·창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은 특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사업들 중에 농어촌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하는 사업들은 농어촌 경제의 활력과 지역의 삶의 개선에 영향이 크므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농어촌 여성 지원(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 분야의 과제들은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추진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아직 부족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향후, 농어촌 지역의 인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인력중개 역량과 정부의 예산 확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사업 규모가 부족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여성, 특히 다문화 여성 등의 취창업 여건 및 인력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부 록

[부록1] 2022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목록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3.3	4.0	복지부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92.7	4.3	복지부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79.3	5.0	복지부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88.0	5.0	소방청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90.7	4.7	복지부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6.7	5.0	복지부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86.0	4.0	농식품부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4.0	4.7	해수부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0.0	5.0	농식품부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78.7	4.7	해수부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0.0	5.0	복지부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96.0	5.0	복지부 / 농식품부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1.3	4.7	농식품부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2.0	5.0	농식품부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6.0	5.0	복지부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95.3	4.7	농식품부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6.7	4.7	농식품부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87.3	4.3	복지부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3.3	4.0	복지부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95.3	4.7	농식품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7.3	5.0	농식품부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4.7	5.0	농식품부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2.0	5.0	해수부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96.7	4.7	해수부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5.3	4.7	농식품부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8.0	5.0	해수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88.7	3.0	농진청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87.3	3.3	농진청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0.7	2.7	해수부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91.3	4.0	해수부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1.3	2.3	해양경찰청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92.7	3.7	해양경찰청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9.3	3.0	해양경찰청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8.0	4.7	농식품부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3.3	4.3	농식품부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93.3	4.3	해수부
		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86.0	3.7	농식품부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4.0	4.7	농식품부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86.7	3.3	농진청
교육·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6.0	4.3	교육부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89.3	4.0	교육부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5.3	3.3	교육부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90.0	4.3	농식품부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93.3	4.3	농식품부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6.0	4.3	해수부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91.3	3.3	교육부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종료	종료	교육부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종료	종료	교육부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94.0	5.0	교육부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92.0	4.3	교육부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3.3	5.0	교육부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92.7	4.0	교육부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0.7	4.7	교육부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종료	종료	교육부
		2-1-2-9	농촌유학 지원	92.0	4.3	농식품부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	93.3	4.3	교육부
		2-2-1-2	농어촌 노인문해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86.7	4.3	농식품부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92.0	4.3	교육부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1.3	4.3	문체부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92.7	5.0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교육·문화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90.0	4.7	문체부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86.0	4.3	문체부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89.3	4.3	문체부
		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92.0	4.3	문체부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3.3	4.3	문체부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85.3	3.7	문체부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3.3	3.7	문체부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4.7	4.3	문체부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8.0	4.3	문체부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6.7	4.3	문체부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종료	종료	문체부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4.0	3.0	문체부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5.3	4.0	농진청
		2-4-2-3	농촌축제 지원	93.3	4.3	농식품부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3.3	5.0	농식품부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92.7	4.3	농식품부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공공형 택시)	90.7	3.7	국토부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86.0	4.0	국토부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87.3	4.3	국토부
		3-1-1-6	내항 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종료	종료	해수부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84.7	4.3	해수부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88.7	3.7	행안부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79.3	3.0	국토부
		3-1-2-3	교통안전 활동	86.7	3.7	경찰청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78.0	3.7	해수부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84.7	3.7	해수부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91.3	4.0	해수부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85.3	3.0	해양경찰청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3-2-1-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82.0	4.0	농식품부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4.7	4.3	농식품부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88.7	3.7	농식품부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93.3	4.0	환경부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88.0	4.3	국토부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5.3	5.0	국토부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83.3	4.7	환경부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88.7	4.0	산업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3-2-2-4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3.3	4.3	산업부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90.0	4.0	해수부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96.7	4.3	농식품부
	인구유입 촉진을 휘한 정주기반 마련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90.7	4.7	농식품부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9.3	4.3	농식품부
		3-3-1-3	어촌뉴딜300	86.7	3.3	해수부
		3-3-1-4	정주환경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86.0	2.7	농진청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①	90.0	4.0	농식품부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②	93.3	4.0	농식품부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90.7	3.0	농식품부
		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 (어항시설 보강)	89.3	4.3	해수부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3.3	4.3	산림청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88.7	3.7	산림청
		3-3-2-7	산림보호 지원	87.3	3.7	산림청
		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92.7	4.7	경찰청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92.7	4.0	농식품부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82.0	4.0	국토부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73.3	2.7	국토부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6.7	4.7	과기정통부
		3-3-4-2	스마트 타운 조성	89.3	4.7	행안부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6.0	3.7	환경부
		3-4-1-2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77.3	3.7	농식품부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 (해양폐기물 정화)	90.0	3.3	해수부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6.0	3.7	해수부
		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80.7	2.3	해양경찰청
		3-4-1-6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 (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	84.7	3.0	해양경찰청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7.3	4.3	농식품부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96.0	4.7	농식품부
		3-4-3-2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90.7	3.3	해수부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91.3	3.7	해수부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① (환경부)	92.0	4.7	환경부
		3-4-3-5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② (농식품부)	96.0	4.3	농식품부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지방이양	지방이양	농식품부
		3-4-3-7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92.0	3.7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8.7	4.0	해수부
		3-4-3-9	목재팰릿 사용 확대	92.7	3.7	산림청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8.7	3.7	산림청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84.7	3.7	해양경찰청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3.3	4.7	농식품부
		3-4-4-2	경관보전 직불제	84.7	4.0	농식품부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6.7	4.7	해수부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①	86.0	4.0	농식품부
		3-4-4-5	농어업 유산 지정 및 관리②	86.7	4.0	해수부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88.7	3.3	농진청
경제 활동 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4.7	5.0	농식품부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78.0	3.7	해수부
		4-1-1-3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86.7	3.3	산림청
		4-1-2-1	푸드플랜 내실화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95.3	4.0	농식품부
		4-1-2-2	푸드플랜 내실화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5.3	4.7	농식품부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8.0	4.3	농진청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①	81.3	3.3	해수부
		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②	85.3	4.0	해수부
	농어촌 관광 활성화	4-2-1-1	농촌관광 활성화	94.0	4.3	농식품부
		4-2-1-2	어촌관광활성화	90.7	4.7	해수부
		4-2-1-3	해양관광활성화	86.7	3.7	해수부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개발	90.7	3.7	농진청
		4-2-1-5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85.3	2.7	농식품부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93.3	4.0	농식품부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4-3-1-1	농업법인 취업 지원	종료	종료	농식품부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84.0	2.7	농식품부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87.3	5.0	농식품부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8.7	5.0	농진청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9.3	5.0	농식품부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93.3	4.3	해수부
		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92.7	4.7	농식품부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8.7	5.0	농식품부
		4-3-2-2	귀어귀촌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육성)	92.0	5.0	해수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경제 활동 일자리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96.7	4.3	농식품부
		4-3-3-2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	90.0	3.3	농진청
		4-3-3-3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92.0	4.0	해수부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82.7	3.7	산림청
		4-3-3-5	농식품 벤처 지원	92.0	3.0	농식품부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91.3	3.0	농식품부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8.0	5.0	해수부
		4-3-3-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86.7	2.7	산림청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96.0	4.3	산림청
		4-3-3-10	말산업육성지원	88.7	3.7	농식품부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7.3	4.7	여가부
		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93.3	4.0	농식품부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6.7	5.0	농식품부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6.0	4.0	해수부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90.0	5.0	고용부

[부록2] 세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

[내용] 1. 사업명: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교부하고 각 지자체와 민간(대한적십자사) 보조금을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의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 등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료원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행) 50% → (개선) 60% 적용 ('22~'24)
•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현행 예타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 역할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편</td></tr>
<tr><td></td><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3">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 점수(점)</td><td>77.1</td><td>77.4</td><td>100.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노력을 함.
• 공공성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대화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여전히 의료원 신축시 지방비 부담이 40%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취약지역 의료공공성 강화를 이유해 지방의료원 신축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로 제시되어 있어 정책내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 자본 보조로 시·군·구 보건소의 신청에 따라 시·도에서 집행하는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술지원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기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신증축, 개보수)을 통한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서비스 품질을 제고
•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小 생활권 중심의 인프라 지속 확충
• 지역보건의료기관 건축 공사단가 현실화를 통한 안정정 인프라 공급 추진
- 신·증축 단가 인상 : 1㎡당 ('21년) 1,870천 원 → ('22년) 2,000천 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LH 협력사업 추진</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종합 이용자 만족도(점)</td><td>70.0</td><td>87.8</td><td>125.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2.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성과지표를 '이용자 만족도'에서 '종합 이용자 만족도'로 잘 개선하였음.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와 연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유휴시간 공간정보 활용 등의 다양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함.
• 더욱 현실적이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연차별 사업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장현실에 맞는 건축단가 조정을 통해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도서, 산간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질 제고

[내용] 1. 사업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 소재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해 지자체 보조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각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117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에 운영비 222억 원 지원금 교부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간호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영상판독 서비스 지원</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응급의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td><td>93.7</td><td>73.5</td><td>78.4</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2.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3.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7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 지속에 따른 경험이 축적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취약지 4대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매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성과지표 측정 등 부분에 있어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th><th>담당부처</th><th>소방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 지역 심장정지환자 등 응급환자 소생률 강화를 위해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강화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구조: 소방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119상황요원 구급역량 강화
- 구급 전문자격자(1급·간호사) 30% 이상 확보 및 구급교육 정례화
• 구급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 지역대 확대 지정·운영
- 확대 지역: 2개 시·도 (대구 1, 전북 1)
• 펌뷸런스 대원 유자격자 배치 확대
•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119지역대에 구급차 보강</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어촌 지역대 구급차 배치(대)</td><td>23</td><td>23</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8.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어촌 내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지속적 예산 확대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구급 전문자격자 확보율과 배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취약지역의 전문자격자 배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구급차 확충 수는 양적 확대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이지만, 서비스 수혜자 측면에서 접근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벽오지 중심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체감도를 측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목적]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및 의료 이용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내용] 1. 사업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 '22년 분만취약지 지원 신규 2개소 확대
  - 사업수행 의료기관 : '21년(49개소) → '22년(52개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분만취약 가임 인구율(%, 하향지표)	1.33	1.3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분만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현재의 지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대상자의 만족도나 체감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그에 따른 정책 환류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개선 필요 사항

- 가장 핵심 문제가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이므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분만 취약지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응급 이송 연계 사업 및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현황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기하고, 우수사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책개선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과제명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목적]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소아청소년과)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선정·지원 및 의료이용 지원하여 의료형평성 제고

[내용] 1. 사업명: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예산 증액 및 소아청소년과 신규 지원대상 발굴
  -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실적 ('21) 9개소 → ('22) 10개소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지침개정
  - (인력기준 조정) 간호사 50%를 간호조무사로 근무가능하게 조건 완화
  - (시설운영기준 조정) 입원병실 1인실 3실, 놀이실, 1개실에서 다인실 1개 이상(총 3병상 이상), 놀이실 권장사항으로 조건 완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소아청소년과 의료 이용 취약인구비율 (%, 하향지표)	1.41	1.4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한 점은 주요한 실적으로 보이며, 현장 방문, 전문가 회의 등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이 적정함.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핵심부서로 중앙모자의료원, 선정위원회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소아청소년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현재의 지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대상자의 만족도나 체감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많아진다면 주민의 체감도, 의료인들의 인식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의료보건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내용] 1. 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농작업 질환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병원 등을 지정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국비 100% 민간보조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작업 관련 질환 연구조사('22년 15건)를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정의하고 해당 질환의 유병율 감소를 위해 농작업 질환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
• 농작업성 질환 조사연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실시하고 마을 단위 건강 전문가 양성 추진
- 이장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농업인 건강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 전파(135명)
• 여성농정책·편이장비 사용법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영농여건 개선교육과 연계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교육 실시(2,143명)</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농작업성 질병 조사연구 실적(건)</td><td>15</td><td>15</td><td>100.0</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6.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1</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예방교육 실시가 농어촌에서 현실성 있는 접근이었으며, 이장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건서비스 전문가양성사업을 진행한 점도 근거리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행 방법이었음.
• 타 사업 연계를 통한 고령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증진 등의 혁신 노력이 이루어짐.</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각 센터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의 지역별 파급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임.
• 사업 수혜자가 체감한 사업 효과를 반영할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촌지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의료진이 방문하여 고령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어업인의 건강관리 지원강화

[내용] 1. 사업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가 각 지역 어촌계, 지자체 및 보건소, 수협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의료지원 환경이 취약한 어촌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을 통해 수혜자 1,021명 달성
  - 예산감소('21:9억 원 → '22:3.6억 60% 감소)에 불구 전년 대비 120% 수혜 증가
-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전문 교육(어업인 주요질환 예방운동 등)을 받은 '마을형 건강관리지도자'를 양성하여 고령어업인 대상 지속적 질환 예방운동 실시
-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정밀진단,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내·외과적 이상 질환자 발견 후 조치(24명)
  - 심혈관 중재술(스텐트시술), 호흡기 진단검사 후 폐암 진단, 무릎 사진 이상 소견 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자 수(명)	500	1,021	204.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고령어업인 대상 신체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 운동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어업인이 정책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됨.
-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형 건강관리지도자'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관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지원만으로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과제명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일반 여성 대비 질병 유병률 및 의료비용이 높은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통한 유병률 및 의료비용 부담 개선

[내용] 1. 사업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 9:1의 비율로 민간보조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검진 현장 상시 모니터링에 따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검진절차 효율화 추진(9월)
  - (당초) 현장 문진표, 예방교육 최대 6명 → (개선) 사전 전화·문자 문진표, 10명 확대
- 여성농업인 등의 이동 편의를 의해 이동식 검진 버스 유형 추가
  - (현행) 수검대상자가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 (개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검진 버스가 마을을 직접 방문(병원 방문형 병행 운영)
- 만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신설협의 대응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수(명)	9,000	7,500	8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5.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준비기를 거쳐서 실제로 1년 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었고, 초기답게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음.
- 검진현장 모니터링, 정책수혜자 및 실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진절차를 효율화하고,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검진 버스 사업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 사업 안내 및 언론 보도 등 적극적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개선 필요 사항

- 시범사업에서의 정책 효과 및 개선 과제 등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도 개선 및 실행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농업인 건강검진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유병률의 감소 등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여성어업인의 주요 직업성 질환 중 검진 시 예방 효과가 높은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여성어업인 삶의 질 제고

[내용] 1. 사업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 9:1의 비율로 민간보조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수검 대상 연령을 확대 조정(만50세~ 69세→만45세 이상)하고, 검진 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하여 약 600명 상당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을 완료
- 여성어업인들의 고충(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에 따른 부담 등)과 건의 사항(연령제한) 등을 논의하여 사업지침 개정('22.11.)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건강검진 수혜율(%)	70.0	36.3	51.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0.7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7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여성어업인의 건강검진대상을 당초 만50세~69세에서 만 45세로 조정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조치를 이행한 점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연령 상한을 없애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짐.

개선 필요 사항

- 예방과 조기치료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 어업인안전보험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화건강검진의 지원대상을 만45세로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대상과 예산규모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개선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상담, 치료·재활 서비스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인력 확충 지원

[내용] 1. 사업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 보조로 시·군·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한 보조금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정신건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300명 확충
•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추가 배치
- 전국 총 45대 배치('22년 18대 신규 배치)</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시·도 수</td><td>17</td><td>17</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0.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마음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민 건강증진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시·군·구 보건소를 사업시행주체로 포함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결과 중심으로 사업 내용과 측정 지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마음안심버스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본 사업 수행인력(지자체, 현장실무자 등) 및 수혜자 모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2-1-1] 농촌형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이를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모형을 개발, 향후 다른 지자체 확산

[내용] 1. 사업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돌봄창구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적 돌봄 노인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 미실시 지역(홍성 등) 전체 노인 대비 장기요양 진입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선도사업 시행 지역(청양, 천안 등)은 2.52배 감소
• 농식품부, 행안부 등 5개 부처 업무협약에 따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으로 협업 유공부서 선정 및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
• 통합돌봄 모델 핵심 요소를 실증하고, 의료기관이 적고 먼 농촌형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추진
- 충남 청양(농촌형) : 진료 버스 및 '찾아가는 보건의료원(방문진료센터)'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3">통합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td><td>60.0</td><td>70.7</td><td>117.8</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촌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복지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동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판단됨.
• 진천, 청양 등 농어촌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지자체 확산을 용이하게 함.
• 농촌 통합돌봄의 지역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 농업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사업연계를 강조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완료 예정 과제이나, 다른 지자체로의 모형 확산에 지원이 필요함.
•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의 퇴원이나 퇴소자만으로 한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유지 도모

[내용] 1. 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파견하고, 이에 대해 70% 비율을 민간보조로 임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가구 확대
  - 지원실적 : ('21) 35,368가구 → ('22) 36,084
- 농촌 고령·취약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인상
  - '22년 최저임금(9,160원/시간) 수준을 반영하여 행복나눔이 1일 2시간 활동비를 4천 원('21년 15천 원 → '22년 19천 원) 인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 만족도(점)	91.3	91.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취약농가의 인력수급에 일부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다양한 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됨.
- 행복나눔이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행복나눔이의 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함.

개선 필요 사항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의 경우, 영농도우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농도우미의 경우 영농에 도움이 될만한 농업기술인력을 지원사업 하에 조달할 수 있는지, 그런 인력을 지원할 만큼 지원단가가 적정한지, 지원 기간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의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백을 농업 활동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구조: 각 지자체를 통해 사회적 농업 사업자를 심사·선정하여 지자체보조 형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14개 시·도의 사회적 농장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약 2,400명)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귀촌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등 실시
-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현장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는 거점농장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력모델 발굴·적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 사회적 농장 시설 등 환경개선, 기관연계 확대 등을 위해 사업비 제한 완화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22.9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회적농업 지원개소 수(개소)	80	83	103.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9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제천과 완주, 영광 등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은 농촌 특화 돌봄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에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장간담회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 노력을 보였음.
- 거점 농장 지정으로 신규 진입 사회적 농장의 사업 수행이 용이해짐.

개선 필요 사항

-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농업의 활용 분야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본 사업에서 사례로 제시된 사업영역 이외에도 농촌사회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델화가 필요함.

과제명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내용] 1. 사업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 사업구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각 50% 비율로 보조
3. 주요 사업 내용

- 공공보육이용률 확대를 통한 농어촌 영유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증진
  - 연도별 공공보육 이용률 : ('21) 35.3% → ('22) 37.8%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고시)'를 개정(8.17.)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탁기준을 고도화
  - 위탁체 선정기준 내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독려하고, 상생형 경제의 선순환 기반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30	54	18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본 사업 목표에 충실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함.
- 국공립 위탁체 선정기준에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지역 상생을 지향하는 개선으로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본 보고에 입각하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보육시설이 어떤 방식으로(신축, 매입, 리모델링, 임차 등) 확충되고, 시설 이용 아동의 수,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보육 서비스의 질)를 알 수 없음.

과제명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부담 경감 및 농촌 보육 여건 개선

[내용] 1. 사업명: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공동아이돌봄센터)
2. 사업구조: 각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대해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지역 어린이집 폐원을 막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
  - 98개소 읍면의 소규모(3~20인) 어린이집 폐원 방지를 통해 농촌 보육 사각지대 해소
- 사업지원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요건 명확화
  - (기존) 영유아 현원이 20명이 초과 : 운영비 중단 → (개선) 전년도 기준으로 현원이 3~20명일 경우 연중 지원
- 보육 교직원 교통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3인만 지급하던 교통비를 3인 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개소 수	98	98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5.2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적절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기존보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해짐으로써 농촌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사례는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어촌 영유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목표를 확대하는 등 필수서비스로서 보육의 공공성 원칙을 실현하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시설 수 성과지표로는 농어촌의 실질적인 보육 수요 충족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농어촌의 보육시설 수요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농번기 아이돌봄방)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내용] 1. 사업명: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농번기 아이돌봄방)
2. 사업구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취합한 사업 신청 내역을 농식품부에서 심사·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비,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영농특성(노지작물, 시설작물, 작물 종류 및 재배시기 등)에 따라 돌봄방 운영기간 확대하여 돌봄방 운영('21년 4~6개월 → '22년 4~8개월)
- 주말농번기 아이돌봄방 대상연령을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단가 증액을 통한 돌봄기능 강화
  - 지원 단가: (기존) 급간식비 1인당 4천 원/교재교구비 50만 원 → (확대) 5천 원/70만 원
- 주말 농번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방 대상 연령 범위 및 운영 기간 확대
  - 돌봄대상 : (기존) 만2세~만5세 → (확대) 만2세~초등학교 2학년
  - 돌봄기간 : (기존) 4월~6월 → (확대) 4월~8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번기 아이돌봄방 만족도(점)	95.0	98.4	103.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정책 수요자 대상 정기적인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화되어 있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지원단가 증액, 학부모 참여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성과지표의 잦은 변경으로 평가 의의를 살리기 어려우나, 농업인 특수한 보육수요 대응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미충족 수요 대응을 염두한 성과지표(이용 아동 수 혹은 시설 수)보다 수혜자의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참여 자격의 상대적 완화는 농촌의 보육 인프라 및 인적 자원 부족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보육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필요함.

과제명	[1-3-2-1]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목적]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시설 접근성 제고

[내용] 1. 사업명: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 사업구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영비 부담 완화로 서비스 지속 제공 유도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영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통학차량 서비스 지속 제공
- 보호자 및 영유아의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통학차량 운영으로 대중교통 및 보호자의 보육여건(자차 유무, 보호자 통학가능 여부 등), 어린이집과의 물리적 통학거리 등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편의성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국비 집행률(%)	100.0	10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기관차량 이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나므로, 객관적 근거에 따라 효과가 체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전 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이용률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결과로 보기는 미흡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정책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해 어린이집 총연합회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함.

개선 필요 사항

- 성과지표를 국비 집행률에서 수혜 어린이집 수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1대당 운행 지원 규모는 여러 해 동안 동일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만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1-3-2-2]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6">[목적] 농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내용] 1. 사업명: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2. 사업구조: 지자체별로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11만 원/월) 지원
- 농어촌 등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평균 35,527명 수당지원</td></tr>
<tr><td colspan="4">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4">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비 지원 실적</td><td>100</td><td>100</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4">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3">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 colspan="3">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3">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 colspan="3">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1.3</td></tr>
<tr><td colspan="4">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4">총점 (100)</td><td colspan="2">8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4">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국비와 지방비의 유연한 매칭을 통해 농어촌 교사에게 추가적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농촌 지원사업으로 적절함.
• 농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보육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보육교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6">• 농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에 대해 만족도, 수요, 의견 등을 간담회 등을 통해 들어보는 것이 필요함.
• 특별근무수당 지급을 통한 급여개선의 효과가 실제 농촌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3-2-3]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도서 및 놀이감을 대여하고, 보육 지원 프로그램 제공

[내용] 1. 사업명: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2. 사업구조: 이동식 어린이집 운영기관에 대해 각 지자체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농촌 보육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이 없는 외딴 마을로 차량이 방문하여 놀잇감 대여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확대 운영
• 과거 시군 중심의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으로 사업 범위가 협소하였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 단위의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개선 하여 시·도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예산 재배정도 가능토록 함</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원 수(개소)</td><td>13</td><td>13</td><td>100.0</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19.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95.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물놀이와 부모교육 등을 방문형으로 제공한 포항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전파 등의 노력이 이루어짐.
• 놀이 버스가 찾아가는 범위를 기존에 비해 확장한 실적이 있고 현장점검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 점은 적당한 접근으로 보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찾아가는 방문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총 13개소에 불과해 농촌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지원대상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놀이교실 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지역별 운영 현황과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비 지원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 ('20) 316천세대 → ('21) 328 → ('22) 337
• 농업인 지원 자격요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 추진</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농업인 월평균 지원 세대(천명)</td><td>329</td><td>337</td><td>102.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30.0</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7.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업인구 감소추세이지만 청년농 유입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확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년간 수행해온 사업으로 관계 부처 협력, 예산 확대 노력 등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춤.</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인지층이 21.7% 정도로 낮은 통계치('18.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인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비 지원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21년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여 월 최대 지원금액 1,350원 인상 등으로 농업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
  - 농업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 : ('20) 478천명 → ('21) 495 → ('22) 514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 : ('20) 305천원 → ('21) 322 → ('22.10월) 346
- 농업인 지원 자격요건의 변경여부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천명)	510	515	101.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단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업인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등 적극 행정을 펴고 있다고 평가됨.
- 그동안 대상자 확대, 소득금액 인상, 지원료 인상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도 이루어짐.

개선 필요 사항

- 향후 더 많은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비농업인을 포함한 청·장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어업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내용] 1. 사업명: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및 국민연금공단(연금)에 자금을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최대 28% 지원
-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약 5,8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21) 10,259세대 → ('22) 16,071세대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원('23년부터 46,350원)을 지원(기준소득금액 100만원)
- 물가 인상 및 어업인 평균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어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백 명)	145	159	109.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1.9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기존 정책의 개선을 도모했음.
-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어촌 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이유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 의견 반영, 언론 보도 노력 등은 미흡함.

과제명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한 안전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내용] 1. 사업명: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
2. 사업구조: 수협중앙회를 통한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국비를 통해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재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761건 / 1,538백만 원)으로 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계절근로자,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최대 150일 이내를 기간으로 가입 가능한 단기형 상품 출시('22.5월)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30일 이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 입원(휴업) 급여금 보장금액 및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확대 등 어업인 재해보장 확대
  - 입원급여금(2만 원→2, 4, 6만 원)/상해·질병치료급여금(200만 원→5,000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수(명)	20,991	23,349	111.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어업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 계획 대비 달성률이 111.2%를 보이는 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 약관을 개정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을 통폐합한 점이 높이 평가됨.

개선 필요 사항

- 수혜자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또는 보험비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비가입 이유를 조사해 사업 개선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사회보장 지원

[내용] 1. 사업명: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2. 사업구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시행기관인 NH농협생명보험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업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가입 인원이 912천 명(전년 대비 +12천 명)에 달하고, 53천 명의 농업인에게 79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보험으로써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주요 보험금 : 상해·질병치료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및 재활급여금 등 지급
• 보장확대: 보험 보장기한 확대 및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
• 지원확대: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겸업농)도 안전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22.10월)
• 수급권보호: 보험금 수급 방식 다양화 등으로 생활 안정 강화</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td><td>67.0</td><td>64.0</td><td>95.5</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6.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7</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5.4</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성과지표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로 사업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적절함. 뿐만아니라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 보험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확대(강화)한 것,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도 안전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가입률 산정시 모수의 변동이 있으므로, 신규농업인에 대한 차별화된 가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 안전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성별로 여성, 20대와 70대 이상의 가입필요성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선 노력과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보호 및 어업 경영 안정 도모

[내용] 1. 사업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2. 사업구조: 수협중앙회를 통한 법정 민간 대행사업으로, 국비를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납부단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어업인 부담금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 해경 등 어업현장 유관기관과 어선 및 어선원 정보를 쌍방향으로 공유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가입 사업장(어선) 최소화
  - 어선원보험 가입 인원수 1% 증가 : (21) 54,149명 → (22) 54,649명
- 어선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 보험기간 중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잠수 비용 보상 특약 신설
  - 최근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어선보험 가입·수리시 비용을 평가하는 어선평가표 단가를 개정하여, 재해보장 강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선원보험 가입률(3톤 미만, %)	10.4	10.8	103.8
어선보험 가입률(10톤 미만, %)	33.2	33.7	101.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함.
- 영세한 선주 및 어선원의 작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선주날인제도 등을 폐지하고, 어선원 질병 급여에서도 특례 요율 반영을 제외하는 등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어선원보험 3톤 이상 미가입 어선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베트남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노력이 우수함

개선 필요 사항

- 임의가입 대상인 어선원보험(3톤 미만)의 보험 가입률(2022년 10.8%)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내용] 1. 사업명: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2. 사업구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재해 현황 조사, 예방, 재활 관리 등 관련 부문의 연구를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12,000가구) 및 농업인 건강안전 DB 구축
- 농업인의 직업적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및 인과성 평가 기준 도출
- 농작업 사망사고 DB구축 및 사망 사고 발생 분석(1,278건)
- 빅데이터 기반 농업인·비농업인 건강 현황 비교분석 및 관련 정책지원
- 농작업 안전관리 지침 및 환경개선기술/안전장비 개발
-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분석 및 농업노동환경조사 조사항목 도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결과 활용 건수(건)	5	13	26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거나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농업인 안전365 홈페이지,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등 우수사례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연구과제 추진이 주요 사업이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계획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천 현장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

[내용] 1. 사업명: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
2. 사업구조: 각 마을의 사업 신청을 지자체에서 심사·선정하고,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천 사업, 교육홍보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해 발생 감소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증가율 : 57.8%(사업전 550.6점 → 개선후 868.8)
  - 농작업 위험성 감소율 : 71.6%(사업전 3.53점 → 사업후 1.0)
  -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증가 : 67.5%(사업전 157건 → 사업후 5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조항 신설 및 예방사업 실시 권한을 농진청장에 위임하여 안전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구체화('22.12.11시행)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57.5	57.8	100.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접근성 좋음.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국지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5] 어업작업 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업작업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 재해의 조사 및 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내용] 1. 사업명: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계획 수립, 재해예방 홍보·교육·실태조사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응급처치키트 제작
  - 위험업종 3종(형망, 연안통발, 잠수기)에 대한 예방지침 영상 콘텐츠 제작, 안전재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키트 제작
- 어업작업용 스마트 안전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 어업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어업작업용 스마트 안전모 개발('21.3~10)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안전재해 예방교육실적	42	44	104.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4.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0.8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어업인의 작업활동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사업 추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것과 교육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것 등은 정책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개선 필요 사항

-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안전모 개발은 어업 관련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의 의미가 있으나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고령어업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립수산과학원이 시행 주체로서 어업인의 현장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장기적으로 수협 등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2-6]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어선 안전 장비를 보급·지원하고,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을 통한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내용] 1. 사업명: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2. 사업구조: 어선 안전 장비 보급에 대한 교부금(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및 안전 조업 교육 실시에 대한 보조금(국비 100)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기상특보 시 조업을 제한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10.18.시행)
• 조업 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끼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연근해어선 1,180척(13억원) 대상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무상 보급
• 원거리(100km↑) 해상에서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한 장거리 위치 발신장치(D-MF/HF)를 근해어선(근해자망 등 7개업종)에 보급
• 사고 위험빈도가 높은 봄·겨울철 대비하여 전국 조업 및 낚시어선 2,764척 대상 전기·소방·통신 시설 등 집중 안전 점검 실시
• 중대형 어선사고(3명 이상 인명피해)에 대한 긴급대응반 가동 및 기관별 신속한 구조·수색 등 총괄 지원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노력</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연근해어선 안전점검 이행율(%)</td><td>3,000</td><td>4,514</td><td>150.5</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1.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어선사고를 8.8% 저감을 하고,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무상 보급, 선원 맞춤형 4개 국어 온라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였음.
• 사업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하여 어선안전장비지원사업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정책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다수 배포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연근해어선 안전점검 이행율〉 이외에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관련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어선의 안전을 위한 기구(소화기 등)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기구(구명조끼 등) 등을 분류하여 기본적으로 어선별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 기구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th><th>담당부처</th><th>해양경찰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연안안전 위험도 평가 표준화 체계 수립 및 통합시스템 구축

[내용] 1. 사업명: 연안활동장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체계 개발 사업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사업 기관을 선정·협약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 연구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국민이 해양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의 안전도를 공개하여 사고 예방력 강화
• 연안활동장소에 대한 위험도 예측체계개발 리빙랩 회의개최
- (1차) 지능형 모니터링 영상 수집 및 평가 기술 개발
- (2차) 실시간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SAR) 예측개발
- (3차) 연안안전통합시스템 개발 내용 소개 및 시연
- (4차) 실시간 동적 평가요소 수집 및 평가 기술</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연안활동장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달성도(건)</td><td>14</td><td>13</td><td>92.9</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4.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5.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1.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2.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리빙랩 자문단회의,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3차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정책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잘 수렴하였으나 일반 농어촌주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나 연구용역 없음.</td></tr>
</table>

과제명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 안전망 구축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목적] 해양경찰과 민간구조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수난구호 및 해양사고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선진 바다 안전망 구축

[내용] 1. 사업명: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고도화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이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국가 구조역량의 한 축인 민간구조의 양적 성장에 맞춰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예·내실화를 위한 민관협력 고도화 추진(10,592명, 5,986척)
- 기능별로 분리된 해양경찰 지원 민간단체를 통합, 단일 조직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법 제정 추진
- 전문강사(10명)를 활용하여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 교육대상 확대·특화교육(드론·수상구조사·수중수색·전복사고 대응 등) 추진
- 민간의 안전한 구조활동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수당 지급기준 인상 등 보상 강화, 사기진작(피복·보험) 개선
- 사회적 기업·공익단체와 협력으로 서프구조대 확대(속초·부산·포항), 구조협회 지원, 바다의인상 등 해양 구조 안전 문화 확산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전체 해양사고 대비 민간해양구조 비율(%)	12.0	20.4	17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과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관련 자체 간담회와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 해상 사고시 어업인과 어선이 해양경찰과 공동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해상 접근이 제한적인 어업 현장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실행방식임.

개선 필요 사항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및 출동수당은 순경 3호봉 기준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동수당을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목적]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소형어선 대상, 해양사고 심각성의 적극 홍보, 치안 활동 강화에 따른 사전 예방 활동과 경미범죄 심사제를 활용하여 영세어업인을 보호

[내용] 1. 사업명: 소형어선 생계형 경미범죄 계도 활성화 사업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이 사업 주체로서 직접 계도 활동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선박검사기관(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한 미수검 선박자료 공유
  - 분기별 총 4회 3,798척의 미수검(선박 안전 검사, 해양오염 검사) 선박 자료를 제공받아 안전계도 및 예방에 활용
- 어족자원 관리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으로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선 사고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국민생명 직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상·하반기)
  - (상반기) 2.14~5.20, 14주간, (하반기) 10.7~11.25, 7주간, 1,238건, 1,320명 검거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미범죄 심사제 이행 건수(건)	98	135	137.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9.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국민소통간담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관련 부처의 협업, 예방활동,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노력이 상당함.

개선 필요 사항

- 현행 평가지표 측정산식에서 어업인 대상 모든 경미범죄를 포함하지 말고, 소형어선의 생계에 직접 관련된 경미범죄만으로 한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음.
- 소형어선 대상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경미범제 심사제를 활용하여 영세어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직업활동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판단되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기반으로 확산할 필요 있음

과제명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및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1. 사업명: 농지연금사업
2. 사업구조: 농어촌공사를 농지연금운영자, 농지관리기금을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 농업인 가입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말 까지 누적 가입 건수 21천 건에 대해 1조 903억 원 지급하였으며, 가입 건당 월평균 99만 원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22년도는 당초 예산(2,106억 원) 대비 14.3% 증액하여 2,408억 원 지급
- 농지연금 가입 가능 최소연령 인하('22.2월)와 담보농지 요건 완화('22.8월)로 가입 대상 확대
- 장기영농인, 저소득층 우대상품 출시('22.1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지연금 가입건수(건)	21,596	51,708	10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담당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실행기관에서는 제도 개선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누적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을 반영한 기금예산 확보로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

개선 필요 사항

- 노후(소득)대책이 미흡한 고령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과제명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내용] 1. 사업명: 농업재해보험 사업
2. 사업구조: 농작물, 가축 등 품목에 따라 피해 농가와 보험계약을 맺은 각 민간 보험 사업시행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료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태풍, 폭설 등 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7,276억 원 지급(손해율 65.2%), '01년 도입 이후부터 '22년까지 총 보험금 6조 7,198억 원 지급
  - 연도별 보험금: ('01년) 14억 원 → ('19) 9,090 → ('20) 10,192 → ('21) 6,608 → ('22) 7,276
- 집중호우로 시설이 침수되고 재배 중인 작물이 고사·손상되는 등 시설·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대상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추석 전(9.9)까지 보험금 지급 완료
  -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 신속한 추진으로 1개월 소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9.6	50.0	100.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특정 지역의 손해율로 인한 시군 전체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산정 단위를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 수용과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됨.
- 보험가입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노력이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고령 농가의 경우 기상재해 대응이 더욱 힘든 여건이므로 가입 독려와 지원비 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예산의 확보와 집행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2. 사업구조: 사업 시행 주체인 수협중앙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해수부가 검토·승인하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보조금 집행
3. 주요 사업 내용

- 재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보험금 지급(377어가/143억원/평균지급액 3,793만원)으로 어가 경영 안정 도모
- 보험요율을 작년대비 0.4p% 인하하고 계속가입자 중 전년도 무사고자에 추가할인으로 양식어가 부담 완화
  - (현행) 직전년 무사고 5% → (개선) 8%(직전년 무사고 5% + 계속계약 3% 신설), 10%(직전 2년 연속 무사고 7% + 계속계약 3%)
- 보급형 상품을 2개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입대상 확대 및 자기부담금 하향(가입금액 20%→10%)으로 보장 강화
  - ('21) 전복, 조피볼락 → ('22) 참돔, 감성돔, 다시마 추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비율(%)	31.4	37.0	117.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수협중앙회를 통한 보험사업 수행으로 현장 접근성이 좋으며, 추진체계가 안정적임.
- 고수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수온 특약 국고 지원을 10% 확대해 어가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음.

개선 필요 사항

-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에 관한 성과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상품개선, 홍보 활동 등 노력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

[내용] 1. 사업명: 경영이양직불사업
2. 사업구조: 농어촌공사가 연중 사업을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고령 농업인 8,018명(8,570ha)에 대해 21,816백만원 지급(1인당 2,721천 원)함으로써 소득 안정에 기여
- ’97년~’22년까지 고령 농업인 108천 명에게 7,80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지 81.0ha를 전업농 등 76.4천 명에게 이양하여 1인당 1.06ha 영농규모 확대</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경영이양직불 수혜자 만족도(점)</td><td>87.5</td><td>87.5</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직불금 수혜자 측면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만족도 87.5점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정확하게 달성하였음. 특히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93%로, 해당 사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 설명 혹은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현 성과지표인 보조금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외에, 사업의 성과(고령농업인 노후 소득 보전율 등)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병용할 필요 있음.</td></tr>
</table>

과제명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여성경영주 등록 확대)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및 출산급여 지원대상 확대

[내용] 1. 사업명: 공동경영주 제도
2. 사업구조: (공동경영주 등록) 지자체를 통해 여성농업인 경영체 등록 현황을 파악 및 공유, (출산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출산급여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유도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여성 농어업인도 출산급여 수급(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 '19.7~)되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록 필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중 여성농업인 비율(%)	32.1	32.4	100.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1.3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비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매년 1.2% 증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적절함.

개선 필요 사항

- 출산 급여 지급이 여성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불분명함.
- 본 사업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경영주 혹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와 출산급여 지원대상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지표를 두 개로 상정하거나, 출산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주(혹은 공동경영주) 등록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여성들의 출산급여 수급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함.

과제명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도농 복지 격차 해소 및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

[내용] 1. 사업명: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2.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수요조사, 과제 공모, 진도관리 및 평가 후 아젠다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 평가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생활개선사업 참여가 여성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분석(311명)
  -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표준화 및 모델 개발을 위해 참여 현황, 기여도, 가족·마을·지역사회 내 영향력 평가
- 청년농업인 유입 유형별 농촌 생활여건 인식 분석
  - 이차데이터 활용 청년층 도·농간 생활여건 비교(11영역 51지표)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1~'25) 세부 추진 과제 성과 달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역 리더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 추진 과제 정책 제안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기술 개발(건)	2	6	3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을 위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시범 적용에서 참여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효과를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교육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만들어갈 주체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목적에 맞는 세부사업 추진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복지지수 지표'는 단순한 근거자료만으로는 측정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복지지수'산정 방식이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측정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2-1-1-1]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4">과제 개요</td><td colspan="6">[목적]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등·하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 보장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사업
2. 사업구조: 시도교육청이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버스 관리 운영 계획 수립. 각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 및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통학 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등·하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통학버스 차량 수를 확대하고 노후 버스 교체 추진
• 시도교육청별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확대, 통학버스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언론 홍보</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td><td>54</td><td>54</td><td>100.0</td></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td><td>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td><td>18.7</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td><td>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td><td>29.3</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td><td>18.7</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td><td>9.3</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td><td>9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td><td>4.3</td></tr>
<tr><td colspan="6"></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농어촌 현실 개선을 위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갖추어져 있음.
• 과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 노력이 돋보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6">• 전국 단위 만족도 조사 실시가 필요함.
• 일반적 농어촌 학교보다는 통학 소외지역을 구별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2-1-1-2] 농어촌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다문화학생 조기 적응을 위한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2. 사업구조: 교육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시도교육청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지정 후 각 학교는 다문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 운영
- 다문화 학생(멘티)과 멘토 대학생의 1:1멘토링 학습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한국어학급 운영 수	65	72	110.0
농어촌 지역 대학생 멘토링 비율(%)	24	26	108.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 내 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수적임.
- 본 사업 목적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와 부합함.

개선 필요 사항

-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특히, 한국어 학급수 증설과 대학생 멘토 비율 증가만이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의 필수 요소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문화 가정의 거주지 분포 및 상황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1-3] 농어촌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 거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거주기간, 대상 지역 설정 등 농어촌 특별전형 내실화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2. 사업구조: 4년제 및 전문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농어촌 특별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한 지원자격 및 운영방식을 포함
3. 주요 사업 내용
• ‘고등교육법’ 개정(’21.9.)을 통해 농어촌학생 등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2.)으로 의무선발비율 10% 규정(’24학년도 대입~)
• ‘지방대육성법’ 개정(’21.3)을 통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 도입(2023학년도 대입~)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21.9)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어촌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td><td>7.6</td><td>8.8</td><td>115.8</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3.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5.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기본계획 과제와도 적절히 부합됨.
• 예산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학생 수가 급감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지역학생의 선발 비율이 적절한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내용] 1. 사업명: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사업
2. 사업구조: 한국장학재단이 국비 출연금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학자금 융자 13,111명, 32,670백만 원 시행
- 실직 및 폐업자 상환유예(3년간)와 미취업자 상환유예(1년간) 신설, 출산 시 상환유예 중복 신청 허용, 유사한 상환유예 유형 통합(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제도 개선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혜자 만족도(점)	95.0	94.5	99.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 거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단순 교육비 지원을 넘어 사업 수혜 대학생들이 농어업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제고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수혜자 만족도 외에 농촌 출신 대학생 대비 수혜자 비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후계인력 육성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2. 사업구조: 사업 시행 주체는 농어촌희망재단이며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됨
3. 주요 사업 내용
• 학업에 전념하여 농식품산업 분야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학업장려금 증액(200만 원 → 250, 22.2학기), 장학금 신청시 영농활동실적, 농식품 분야 자격증 제출 의무 폐지
•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대학 범위 확대, 장학금 증액(최대 250만원 → 350), 기초·차상위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업장려금(100만 원) 추가지원 (‘22.2학기)</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백 명)</td><td>56</td><td>55</td><td>98.2</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4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26.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18.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9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균형발전, 특히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임.
• 영농후계자의 육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다양한 장학사업 대상별 사업 추진 계획, 실적, 효과 평가 및 개선 노력이 차별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 개선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1-6] 농수산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후계 인력 육성 도모

[내용] 1. 사업명: 수산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선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21~'25년 사업규모 : 고등학생 114명 대상 50만원, 대학생 28명 대상 250만원 지원
• 수산계고교생 114명, 수산계대학생 28명 총 142명 장학금 지급</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장학금 수혜자(명)</td><td>142</td><td>142</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수산계 청년 인력 신규 유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농업계와 비교한 사업개선 노력이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장학금 수혜 대상자(수산계열 고교생 및 대학생)가 사회 진출 시, 수산계열 종사자로 약정하고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차등적으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1-7] 학교 시설 안전 강화</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시설의 정밀 안전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위험요소 사전 발견·제거

[내용] 1. 사업명: 학교 시설 안전 강화
2. 사업구조: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교육시설법’ 및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취약시기 점검: 연 3회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내용 지속 모니터링 관리 실시
- 수시점검·긴급점검: 정기점검 이외에도 긴급·수시점검 체계를 통한 상시 점검체계를 활용하여 중대 결함 발생 전 조치 실시</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정밀점검 건물 수</td><td>858</td><td>1,739</td><td>202.7</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6</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1.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 진단, 위험 요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에 매우 부합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학생)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또는 연구용역 등 객관적인 정책관리 체계 필요</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도시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사업구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며, 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등 지원 사업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통합 운영학교 지원 등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교육 모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사업대상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점)</td><td>4.5</td><td>4.61</td><td>102.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4.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10.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청년 및 중년 세대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홍보는 좋으나, 이를 각 지역의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의 참여를 격려하고, 광역단위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의회나 행정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2-1-2-4] 미래교육지구 운영(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모델 개발

[내용] 1. 사업명: 미래교육지구
2. 사업구조: 부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매칭 투자하여 선정된 지구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특화 프로그램 추진
  - 미래교육지구를 지역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연계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역 수	33	3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4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와 부합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위해 지구별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교육지구를 설정하여 작은학교 적정규모 정책 및 공공복지 공간 통합 설치 운영 등 통합적 기획을 통한 개선이 가능함.

과제명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내용] 1. 사업명: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사업
2.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시·도 교육청을 거쳐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교부금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학교급별 특성, 사회변화, 학생 관심도를 반영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방과후 질제고를 위해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 확대 및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모델을 발굴·확산
  - ('20.~) 2지구 → ('21.) 3지구 → ('22.) 5지구(세종, 경기 시흥·오산, 충북 옥천, 충남 당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만족도(%)	84.3	86.5	102.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전반적으로 적극적 개선을 위한 학부모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의견수렴을 수행하였음.
- 예산을 확대하였고, 방과후 지역연계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농어촌특화모델로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운영함으로 강사확보와 소규모 학교의 숫자 조정을 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현장의 불만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 학교 등 소외 지역 소재 학급(학생) 대상 온라인 진로멘토링 제공

[내용] 1. 사업명: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2. 사업구조: 시·도교육청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 위탁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도서지역 등 진로체험 소외 지역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을 통한 소외 지역 소재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 학교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주문형 수업 확대
- ('21) 1,302회 → ('22) 1,805회</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횟수</td><td>800</td><td>2,300</td><td>287.5</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이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의 다양함,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업이라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수업 시간에 만난 멘토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온라인), 진로의식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 주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함.
• 사업비의 감축은 있을 수 있으나,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들의 효과 추정과 운영주체의 개선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개선 지원 및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

[내용] 1. 사업명: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2.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 선정·관리. 시·도교육청은 각 세부과제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도·농 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교육 소외지역 학교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보통교과 일반·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편성
  - 지역 간 공동교육 협력모델 개발, 대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
- 교원의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 교원이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지도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지역 내 학교에 온라인 수업 교실 설치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기반 조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원 교육청 수	9	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계획 대비 집행 수준이 준수하며 일정에 맞춰 진행됨.
-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언론 홍보, 워크숍 개최, 현장 방문 등을 적절히 실시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공모에 응하는 교육청의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2-9] 농촌유학 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내용] 1. 사업명: 농촌유학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 추천 공모로 사업대상자(농촌유학센터)를 선정,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생활·학교체험 지원을 통해 농어촌 내 도시 학생 유입수 증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농촌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지역 교육서비스 향상
- 생활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유학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기자재비 등 지원
- 농촌유학센터가 마을·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유학센터 지원 개소 수(개소)</td><td>27</td><td>29</td><td>107.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연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성과의 질적·양적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학생 수나 유학생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2-2-1-1]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내용] 1. 사업명: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연도말로 종료되는 사업 기간을 차년도 2월까지 연장
  -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의 주요 특성(농산어촌 거주,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고려할 때, 농한기(매년 1월~2월)가 문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여건이 양호
- 문해 학습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야학, 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선정·지원
  - '22년 전국 170개 지자체 내 456개 문해교육 기관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1,788	2,044	114.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 성인 학습자 수 확대와 예산 확대, 지자체와 참여기관을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지표임.
- 성인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대상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은 효과적임.

개선 필요 사항

- 농촌 성인 학습자의 규모 추정을 기초로 성과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2-1-2] 농어촌 노인문해교육(문해교육공동체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 지침에 따라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수행하는데 국고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 지역 주민공동체 중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또는 면 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생활권인 읍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혼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동체 운영 및 평가 연계성이 낮은 '수요조사·분석'에 대한 선정기준(배점 하향) 조정, 공동체 자체 사업운영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수행 확대 도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동체 지원 개소 수	135	13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쉬운 면 지역과 일부 읍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성과지표로 수혜자 측면의 만족도나 문해력 향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

과제명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내용] 1. 사업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2.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과 관리 및 자료개발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확대
  - ('20) 274개 운영 → ('21) 309개 운영 → ('22) 430개 운영
- 농어촌 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사업 물량 할당 및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로, 농어촌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위기 상황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프로그램 이수율(%)	89.0	87.7	98.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인구소멸지역이나 평생학습도시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정기적인 농어촌 지역의 수혜자 대상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혜자 맞춤형 정책 사업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목적] 고령사회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확대

[내용] 1. 사업명: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 사업구조: 문체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협회가 사업 공모·심사하여 문화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사업수행단체, 지방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206여개 기관·시설 통한 비대면 문화예술체험 꾸러미(4,500개) 배포, 대국민 대상 비대면 문화예술체험 영상(21개) 제공
-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지역기반 통합 프로그램" 단위사업을 추가로 신설, 운영('22.2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8.6	91.6	103.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임

개선 필요 사항

- 도시 지역 사업은 농번기에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농한기를 특화하여 추진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필요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업·농촌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내용] 1. 사업명: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농정원에서 교육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은 성별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 일·생활의 균형 실현과 평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전문강사 육성,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컨텐츠 개발 등 양질의 성평등 강의 운영·지원
• 농촌 맞춤형 성평등 전문강사 정보를 공개하여 강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전문 강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인원(명)</td><td>15</td><td>14</td><td>93.3</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어촌의 부족한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통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정책 사업임.
• 전년도 삶의 질 점검평가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촌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나 통계 자료를 통한 사업 점검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2. 사업구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해 문체부에서 지원금을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해 도서관 조성 비용 및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지원 실적: '22년 47개관 지원</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수</td><td>25</td><td>47</td><td>188.0</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0.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련 서비스 과정과 서비스 전달방식 등에서 전년보다 개선됨.
• 또한 성과목표가 초과 달성되어 사업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주민의 실생활 관련 다목적 기능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공공체육서비스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공간 확충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2. 사업구조: 지자체가 신청하는 시·도 포괄 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체육 공간 조성
3. 주요 사업 내용
•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여건 및 각종 경기대회 개최 기반 마련 지원
• ’22년 국비 지원액은 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59.9%) 증가</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체육시설 지원 개소 수</td><td>110</td><td>110</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3.4</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전국 생활체육공간의 균형적 배치라는 목적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와 내용 적합성이 높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체육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체육 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사업추진 과정의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6">[목적]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2. 사업구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각 시·도, 시·군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센터 조성
3.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 활용하여 생활문화공간 조성
- 조성지원(’22년): 139개소, 47,365백만원(개소당 약 341백만 원)
• 코로나19에 대응,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관계자 대상 온라인 교육 지원</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 colspan="2">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수</td><td colspan="2">477</td><td>383</td><td>80.3</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4">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4.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시설 조성에 끝나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6">• 사업 추진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의 우수사례 창출과 그에 부합하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청년 문화 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내용] 1. 사업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2. 사업구조: 문체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경상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다양한 진로 모색 기회 마련 및 활동 범위 확장 위한 예비·초기 창업자 희망자 대상 창업 특화교육 운영
• 입문 과정 운영 시,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활용 통한 전국 범위 참여자 편의성 및 효율성 도모</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달성</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 colspan="3">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참여자 수</td><td colspan="3">330</td><td colspan="3">392</td><td colspan="3">118.8</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여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이 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이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전문인력의 활동영역, 활동실태, 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내용] 1.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2. 사업구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총괄, 기금 교부를 하고 지역 주관처와 협력하여 가맹점 모니터링을 하며,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3. 주요 사업 내용

- 코로나19 상황 및 고물가로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32만 명으로 지원 인원확대
  - 수혜 인원 : ('21년) 197만 명 → ('22년) 232만 명(전년 대비 18%p↑)
-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상 최초 연도 중 지원금 상향(연 10만 원 → 11만 원, '22년 9월~)
  - 지원금액 : ('20) 9만 원 → ('21) 10만 원 → ('22 당초) 10만 원 → ('22 수정) 11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	263	232	88.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사업은 농어촌에서도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기회를 수월하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임.
- 사업추진 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에서 우수사례 창출됨.

개선 필요 사항

- 정책 대상의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 확대를 위한 통합적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시행이 필요함.

과제명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목적]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 사업구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시행 주체가 되어 지역별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 14,091권을 직접 제공하여 책을 직접 소유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 서점을 활용하여 책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서점 살리기에 동참
- 운영기관에서 사업 금액의 일부(10%)를 자체 부담하는 사업비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 향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운영 도서관 수(개소)	110	11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국립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지역에서 섭외하기 어려운 인지도 있는 그림책 작가를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개선 필요 사항

- 농어촌 지역 주민 및 어린이, 사업수행기관 등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과 사업의 성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운영 등 개선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①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운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② 지역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상호 간 박물관 교육의 발전과 상생 도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내용] 1. 사업명: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2. 사업구조: 국고 지원사업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역박물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사업내용
• 지역별 어린이 대상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문화 향유 음영 해소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참여 지역 거점기관의 박물관 특성을 감안한 교육 교구재 협의 개발 및 활용</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교육 참여 인원수(명)</td><td>1,207</td><td>1,347</td><td>111.6</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4</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전체 사업예산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실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 등 수혜자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농촌-도시 지역별, 지원기관별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 무료·할인 제공 및 다양한 기획프로그램(공연·체험 등)을 통해 지역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내용] 1. 사업명: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2. 사업구조: 지자체 보조 예산을 편성, 각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 등 지원
3. 주요 사업내용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 지원 : 303개소 2,850백만 원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원 등 전국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대국민 특별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 140개소 1,500백만 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직장 근로자, 어린이 대상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개수</td><td>23,400</td><td>23,402</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4.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적합하게 설정되었음.
• 예산계획 대비 실적 집행 수준이 달성되었으며 사업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에서 우수사례 창출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th><th>담당부처</th><th>문화체육관광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 확산을 통해 지역관계망 형성, 지역주민의 문화·사회적 격차 해소

[내용] 1. 사업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 사업구조: 문체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생활문화공동체 선정 마을 개소 수 확대
- ’22년 60개소 지원으로 사업 대상 확대
• 사업 특성화 모델 구축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목표 및 내용에 따른 공동체 유형 구분
- 공동체 활동의 단계별(형성→성장→지속→지역연계) 구분
• 공동체 생활권 범위 확대
- 기존 마을·골목 중심 → 읍·면·동 단위로 확대</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달성</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 colspan="3">85.6</td><td colspan="3">87.3</td><td colspan="3">102</td></tr>
</table>
</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19.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td><td>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24.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19.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8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단순히 양적인 문화 향유 성과가 아니라 참여한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성 회복 등의 성과가 나타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시행 주체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하여금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td></tr>
</table>

과제명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목적]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주체성 증대 및 생활문화 활동 영역 확장

[내용] 1. 사업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2. 사업구조: 지역문화진흥원이 시행 주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공모 및 심사, 지역문화진흥원은 전문가와 함께 선정단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진행
3. 주요 사업 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유형 개선 및 지원단체 확대
  - 지원 방향: 참여 동호회 눈높이에 맞춘 활동 목적 및 사회적 공공성을 띤 일상 영역의 활동 지원 확대
  - 지원 건수: 51개 단체(196% 증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참여 동호회 수	1,500	2,674	178.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술기능 위주의 동호회 지원에서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시행 주체인 지역문화진흥원 및 광역시·도로 하여금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

과제명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목적] 지방문화원 소장자료의 자원화 및 활용 모델 개발로 지방문화원 자료의 가치 제고 및 국민적 향유 기회 확대

[내용] 1. 사업명: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2. 사업구조: 문체부가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예산을 교부하여 지방문화원의 콘텐츠 발굴을 지원·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의 인물, 설화 등 지역 고유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제공
  - '한국의 농업' 주제 이야기 콘텐츠 250개('18년), '한국의 어업' 주제 이야기 콘텐츠 250개('22년)를 개발하여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서비스
-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DB화 및 지역N문화 포털을 통한 지역 향토자료 제공
  - 총 81,481건 구축(전체 약 48만 건 자료 중 약 17% 구축 완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역문화 콘텐츠 이용자 수(명)	2,164,269	3,091,501	142.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DB구축하고 자료화하여 국민에게 제공, 2-3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개선 필요 사항

- 지역문화포털 이용자 수와 이용자 특성 분석, 이용자료 특성, 활용 정도 등 DB화된 자료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 구축 필요

과제명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①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②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 체험 교육 콘텐츠 지원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

[내용] 1. 사업명: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구조: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관리·교육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점검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수행, 농진청에서는 예산 확보 및 사업대상 시·군 공모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으로 특화된 농촌체험·관광 소득화 기반 조성
  - 농경문화자원 활용 상품개발 : ('21) 35건 → ('22) 48 (137% ↑)
-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 '농뚜레일' 현장 협의(3.12~13, 5.17.)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심사 시 '농장주의 교육 시연' 항목 추가 개선 및 농촌교육농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농장주 인식 확산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지속 확대(누계): ('20) 521개소 → ('21) 604 → ('22) 697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자원개발 건수	4	4.8	12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7.9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5.2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에서 우수 사례를 적극 도출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4-2-3] 농촌축제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내용] 1. 사업명: 농촌축제 지원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의 추천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발굴한 마을 축제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주민 참여를 통해 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 유대 형성, 전통 보존 및 마을 내 갈등 해결, 주민의 역량 강화, 세대 간 화합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
  - (예시) 세진마을 생태문화예술제를 계기로 귀촌인과 원주민으로 구성된 풍물패는 주1회 활동을 통해 주민화합 유도
- 축제 신청 마을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100人 이하 소규모 마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지원금액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축제지원 개소 수	72	7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 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6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축제 지원 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추진과정이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에서 우수사례 창출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체감복지 향상

[내용] 1. 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 시행처별 운수사업체, 마을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국비:지방비 5:5)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 증액을 통해 82개 군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 ('22년) 20,928백만원(군당 510백만원)
- 농촌형교통모델 이용자 수(만명): ('20) 482 → ('21) 577 → ('22) 580</td></tr>
<tr><td colspan="5"><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달성</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 colspan="3">560</td><td colspan="3">580</td><td colspan="3">103.6</td></tr>
<tr><td colspan="9">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 수(만 명)</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4">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6.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조직 등 운영주체를 다양화하고 운행방식도 다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모델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21년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등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여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단순 수요 대비 공급 위주의 대중교통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 모델 구축

[내용] 1. 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식품부가 지자체 현장점검 및 컨설팅,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앞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지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 버스형 사업을 별도의 과제로 관리
  - 운영체계를 수요응답형과 노선 운행의 혼합방식 등 다양화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기여
  - '22년 농촌형 교통모델 만족도 조사: 버스형 사업 83.7점, 택시형 사업 82.6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버스형 교통모델 운행 대수(대)	226	340	150.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운행 방식만을 주요 과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앞선 과제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므로 구체적으로 수요응답형 운행 방식의 촉진을 위한 과제 구성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향후 지속적 추진과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우수사례 도출이 필요하며 정책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인 '버스형 교통모델 운행 대수'는 운행 수단을 측정하는 것으로 운행 방식(고정 노선 운행, 수요응답형 운행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과제명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

[내용] 1. 사업명: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사업
2. 사업구조: 국토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도는 관할 시를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공공형 택시 사업 지속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대중교통 사각 ·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 '17년 36개 시→'18년 49개 시→'19년 57개 시→'20년 60개 시→'21년 61개 시→'22년 61개 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공형 택시 도입 지자체 수(개)	61	6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3.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90.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형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도농복합시 내 농촌 지역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소외지역 해소율 등 구체적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활용이 필요함.
- 사업 대상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점검,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부처의 사업 확대 및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함.

과제명	[3-1-1-4]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 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 버스, 콜버스 등 수요 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내용] 1. 사업명: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사업
2. 사업구조: 국토부의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도는 관할 시를 대상으로 공공형 버스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기존 농어촌버스의 넓은 배차 간격으로 주요 생활거점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던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개선
  -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여 개인의 주체적인 일정 설계를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 공공형 버스 지원 대상지역 확대('19년: 52개→'22년: 62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공형 버스 도입 지자체 수(개)	59	62	105.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도시의 교외 지역 비효율적인 벽지 노선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요대응형 공공형 버스 사업으로 의미가 있음.
- 대중교통이 취약한 도농복합시 내 농촌 지역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히 작동됨.

개선 필요 사항

-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한 지자체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해 신청한 시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별 쿼터 내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토록 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지역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th><th>담당부처</th><th>국토교통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버스 외에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철도역에 도입하여 철도 연계교통 강화

[내용] 1. 사업명: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2.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사업 해당 지역에서 철도 연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에서 공공형 택시·버스 이용신청이 가능토록 교통수단 간 연계 서비스 확대 제공
- 13개 철도역 확대('21～'25): 현재 52개 역에서 서비스 제공 중</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공공택시 철도 연계서비스 확대</td><td>2</td><td>2</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3.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7.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철도역과 연계한 교통서비스가 농어촌 전역에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농촌형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음.
• 지역 간 통행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로 지역 간 주민들의 이동권, 접근성 등의 개선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민관협력 등에 의한 사업 추진과정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우수사례발굴 노력이 필요함.
• 매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확대(2개 지역)를 성과지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증회 운항, 도서출발 등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육지 접근성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

[내용] 1. 사업명: 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②내항여객선운임보조
2. 사업구조: (준공영제 확대지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공모하여 지원항로 선정 및 항로 고시·운영 후 운항결손금 정산 및 지급,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연안 여객선사가 섬 주민 할인금액을 지자체에 교부신청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심사 후 선사에 보조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을 보장
  - 육지-섬 이동거리가 긴 항로는 섬 출발 여객선을 운항하여 도서민이 육지에서 관공서·병원 등의 업무 후 섬으로 당일 복귀가 가능
  - 코로나19로 적자가 발생한 민간선사에 운항결손액을 지원
-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공익서비스 제공
  - 육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섬 주민은 최대 7천 원까지의 운임만 부담하도록 하여 섬 정주여건 개선
  -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연간 약 6만 명의 아동들이 무상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원항로 수	20	18	90.0
보조금 집행률(%)	100	99.5	99.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섬 여행 활성화까지 목적을 확대하여 도서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요금 절감 효과가 커 도서 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동시에 필수적 사업으로 볼 수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최종 수혜자인 섬 거주 농어업인 및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항로에 대한 지원 및 운임지원 또한 매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객 수송량이 지속 감소하여 운항결손금 지원액도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 정책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과제 개요

[목적] 지방도로 급커브, 급경사 등 교통사고 다발 구간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내용] 1. 사업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 사업구조: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검토 후 승인, 지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지원(국비:지방비 5:5)
3. 주요 사업 내용

-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구간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주행 여건 개선에 기여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구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조사·분석 실시
-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3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지방이양되고 4년간 전환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전환사업 운영기준 수립·통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65.0	69.2	106.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대상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총 사업 물량이 부족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임.
-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향후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사업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교통사고 발생정도, 지역낙후 정도, 민원 및 주민 요구사항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함.

과제명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보행자 및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고령자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예방

[내용] 1. 사업명: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사업
2. 사업구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금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용품 보급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용품 보급
  -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어촌 지역 및 농기계 대상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 지속·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12.8	13.9	92.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서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사고 예방 교육은 삶의 질 향상 계획 비전에 부합하고 필요한 과제임.
- 해마다 동일한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특성별 고령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과 안전용품의 종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개선 필요 사항

- 평가 지표가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평가 시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의 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움.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개선, 만족도 측정, 홍보 등에 대한 담당부처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총액이 적어 성과 확산의 한계가 명확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1-2-3] 교통안전 활동</th><th>담당부처</th><th>경찰청</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군)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보행자 사고 위험을 감소

[내용] 1. 사업명: 교통안전활동
2.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경찰청 주도로 지자체별 지역 경찰청·경찰서와 협의하여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점검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군)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요소 집중점검 및 연중 정비
- 농어촌의 노인정과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보호구역을 3,192개소로 확대(전년 대비 519개소(19.4%) 증가)
-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22. 12월) 및 시행('23. 7월)</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노인 인구 1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td><td>0.65</td><td>0.62</td><td>104.8</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마을 진입 시 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 강화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노인 보행자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노인보호구역 지정 자체보다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정비가 핵심으로, 이에 대한 추진체계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체감도, 만족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개발 및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 등 현대화를 지원하여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연안해운 안전 강화, 이용객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내용] 1. 사업명: ①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② 국고여객선 건조사업
2. 사업구조: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수부에서 현대화펀드 사업대상 선사를 공모·선정하고 출자금 교부, (국고여객선 건조사업) 해수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여객선 건조에 따른 비용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연안 선박 현대화를 통해 연안해운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강화
  -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선(선령 18년)을 신조 선박으로 교체(9.8)하여 여객정원 23.8% 증가, 운항 시간 13.6% 단축 등 교통여건 개선
- 노후 국고 여객선 섬사랑5호(완도~덕우도, 선령 20년)의 대체 건조 착수를 통해 국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 도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객선 대체 실적(척)	3	3	100.0
국고 여객선 건조 공정률(%)	40	39.4	95.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5.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이용객 안전 강화, 여객정원 증가, 운항 시간 단축 등 해상 교통여건 개선으로 섬 거주 농어촌 주민의 거주환경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도출함.
- 최종 수혜자인 농어민보다는 중간 수혜자인 연안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주 이용객인 농어업인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함.

개선 필요 사항

- 여객선 현대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노후 여객선 비율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의 효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내용] 1. 사업명: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2. 사업구조: 해수부와 보조사업자인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사업 계획 수립·점검하며, 위탁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육상교통 대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연안여객선의 시설설치를 지원하여 전체 여객선 대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 '22년도까지 전체 여객선의 48% 설치 완료 → '23년도까지 75% 설치 완료 예정
- 코로나19, 유가 상승 등으로 민간선사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참여도 저조에 따라 설치기준 개선 및 보조율 상향(50%→70%) 등 조치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시설 설치실적	23	49	213.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교통약자의 서비스 향상에 관련성이 높음
-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를 전체 여객선의 시설설치 비율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 필요 사항

- 최종 수혜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방안 검토 필요

과제명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운영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바다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으로 육·해상 간 정보격차 해소

[내용] 1. 사업명: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운영
2. 사업구조: 해수부가 지정한 민간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국내 연안에서 운항·조업하는 선박에 단말기 보급 및 서비스 지원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바다내비 이용 선박 해양사고 감소 및 인명구조 활용
  - 주요 해양사고(충돌·좌초) 발생율 약 56% 감소 및 긴급구조에 기여
- 연안 50km 내 이용이 가능한 소형 송·수신기 개발('22.4) 및 단말기 설치 용이성을 위해 송·수신기~표시 장치 간 Wi-Fi 사용승인 획득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바다 내비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	40,000	60,732	151.8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척수(누계)	5,000	5,374	107.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어민들의 해양사고 감소 및 인명 구조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 2023년 사업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개선 필요 사항

- 성과지표를 선박 단말기 보급 척수(누계)보다는 전체 대상 어선의 설치 비율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임.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th><th>담당부처</th><th>해양경찰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항만 및 연안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용] 1. 사업명: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사업
2. 사업구조: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에 VTS 등 장비 구매와 설치에 관한 발주 및 계약 체결,
3. 주요 사업 내용
• 서해·제주·동해권 광역관제센터 구축 등 사업추진 및 운영방안 마련으로, 해양사고 발생 건수 감소
• 선박 교통 관제법 시행('20.6.4.) 후속 조치로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최초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21～'25년) 및 시행계획('21년) 수립
- 전국 관제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는 클라우드VTS 플랫폼과 VTS·유관 기관·대국민에 정보 공유 가능한 표준 통신방식 개발 지속 추진</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VTS 고객만족도(점)</td><td>88.2</td><td>89.8</td><td>101.8</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5.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 사업 추진으로 해양사고 건수는 지속 감소하였고, 닻 끌림 자동탐지 시스템 개발 등 정책 우수사례가 도출되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제도 개선, 예산 증액 확보, 어업인 대상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내용] 1. 사업명: 농촌주택개량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와 시·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따라 시·군·구별로 선정한 대상 주택 개량비에 대해 농협 자금 융자 대출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저리·장기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마련을 지원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1세대 평균 9,700만 원 융자 대출, 주택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농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농촌지역에 주택 신축 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범위 확대</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불량주택 정비율(%)</td><td>66.6</td><td>53.8</td><td>80.8</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4.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3.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명시, 사업 실적 인정 범위 확대, 사업 기간 추가연장, 농어업재해 대책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 운영 중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지자체, 농협 등과 협의하여 주택개량사업 홍보 리플렛 등 시각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성과지표 달성률이 저조하며, 연도별 불량주택 정비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그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후·불량 주택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 시행자(다솜둥지복지재단)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로 실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의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
  - 대학봉사단 및 지역사회 일반봉사단체 참여 확대
  - 농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 업무협약 사업 지속 추진 (한국해비타트, 국립공원공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집 고쳐주기 가구 수(호)	750	766	102.1
수혜자 삶의질 향상 만족도(점)	80	81.7	102.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대학봉사단 및 지역사회 일반봉사단체 참여 확대, 관련 기관 업무협약 사업 지속 추진 등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
- 취약계층의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실행방식의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크게 봉사단체(대학생, 일반)와 기관(한국해비타트, 국립공원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자체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체계를 이원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2-1-3]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목적] 70~80년대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내용] 1. 사업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사업구조: 환경부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업 물량을 확정, 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상보조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석면 비산을 차단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직접 수혜자) 뿐만아니라 주변 거주민(간접 수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
  - (주택 철거처리) 1동당 최대 176만 원
  - (창고축사 철거처리)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지붕개량) 1동당 314만 원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한센인 폐축사 지원기준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누계, %)	21.5	34.8	161.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예산액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수요에 근거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실적, 사업 범위·규모 확대 노력, 정책홍보 노력 등은 있었으나, 정책효과 검증, 정책 우수사례 도출,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참여 수준 등은 미흡함.

개선 필요 사항

- 전문기관을 통해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기존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주택 개량 등 추진

[내용] 1. 사업명: 주거급여 지원
2. 사업구조: 지자체에서 수행한 소득 조사 및 수요 신청 결과와 LH에서 수행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개량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창출
  - '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
- 주거급여 시행 관련 언론 다수 보도 및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속 홍보 시행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연간 주택개량 지원호수(만 호)	1.9	1.96	103.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개선 효과, 사업실행방식의 구체성, 다변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사업임.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심층적인 수요조사·분석을 통한 규모 확대 및 사업 내역의 다각화가 필요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여건 관리 모니터링 및 맞춤형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함.

과제명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 사업구조: 국토부에서 교부하는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 개조 지원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거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매년 호당 3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매년 개정하여 지자체 시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율(%)	100	1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 환경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임.
- 지자체의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 등에 대한 보완 노력과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과제명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
2. 사업구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지역 공모를 실시, 시·군·구별 1차 서면 평가, 2차 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비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보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지원하여 농촌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확보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누계) : ('21) 391개소 → ('22) 449(58개소 신규 지원, 14.8%↑)
- '22년 예산은 1,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9.6%) 증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취약지역개조사업 만족도(점)	84.6	84.8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정책 성과지표를 취약지역개조사업 만족도로 설정하여 정책 수혜자 측면의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사업 단가 현실화를 추진함.

개선 필요 사항

- 대상마을의 규모를 20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취약 특성에 맞춰 사업을 유형화하여 추진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제명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 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지원
2. 사업구조: 환경부에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공사 시공 계약 및 유지관리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정주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옹진군 등 420개 지자체 사업추진 지원(국고 280,073백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하수도 보급률(%)	74.0	74.5	100.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2.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로 판단됨.
-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속사업이며, '하수도법'에 근거한 사업이나, 사업방식의 개선,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 등은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짐.

개선 필요 사항

- 과거 정책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 및 사업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부분에 보완이 필요함.

과제명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개요

[목적] ① 농어촌 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②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 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내용] 1. 사업명: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융자)

2. 사업구조: (도시가스배관건설) 도시가스사업자가 융자 신청, 산업부가 선정 후 한국에너지공단, 시중은행에서 융자 및 대출 실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산업부가 계획을 수립, 도시가스 사용자가 융자를 신청하고 지자체가 추천서를 발급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에서 융자 및 대출 실행

3. 주요 사업 내용

- 2022년 도시가스사 3,087억 원(정부 융자 지원 262.7억 원)을 배관 투자를 통해 약 726km 배관을 건설하여 약 43만 가구(잠정)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
  - 정부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지역 내 2.5만 가구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
- 도시가스 신규 사용 163가구에 사용자시설 설치비용 7.3억 원을 융자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도시가스공급 가구 수(백만)	20.07	20.07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에너지 공급이 미흡한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 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21년 300억 원에서 '22년 270억 원으로 축소되었음.

개선 필요 사항

- 추후 정책 효과의 검증과 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추진이 필요함.

과제명	[3-2-2-4]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개요

[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사용시설 등을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및 에너지 복지 향상

[내용] 1. 사업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 단위 지원)
2. 사업구조: 광역 시도에서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 산업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업무위탁기관이 가스 공급자와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급
3. 주요 사업 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농촌 주민 연료비 절감
  - LPG 용기공급 대비 20~30% 공급가격 인하, 안전성과 편리성 대폭 향상
  - '22년 LPG용기 전국 평균 사용금액은 2,480.0(원/㎏)이며, 사업 시행 36개 마을 평균 공급단가는 1,568.6(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개소)	36	36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복지가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시설 위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의 도출 등에 대한 보완 노력과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과제명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 필수 연료 품목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내용] 1. 사업명: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로 운송 선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도서민에 대한 운송 내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하여 생활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시·도, 21개 시·군(221개소)에 거주하는 42,202세대·73,406명의 도서민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실시
  -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연료운반선 미건조 지자체 위주의 운송비 지속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상운송비 지원 만족도(점)	78.5	78.7	100.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도서민의 정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생활연료 필수품뿐 아니라 육지에서 이송하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계획 대비 사업 시행과 목표 대비 실적은 높으나 정책 사업의 개선된 변화가 제시되지 않음.

개선 필요 사항

- 주민 및 운송업자 만족도를 해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과지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 도서민을 고려하여 생활연료를 주택까지 배송해주는 방안을 찾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2-3-1]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빈집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도의 체계적인 빈집정비와 주민·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정비 참여를 유도

[내용] 1. 사업명: 농촌 빈집정비 제도 개선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빈집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의 농촌빈집정비 사업 유도
3. 주요 사업 내용
• 빈집정비 관련 제도 개선 및 빈집 정비(7,551동)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유해한 빈집에 대한 빈집신고 제도를 운용하여 빈집 신고 277건 중 특정빈집 187건 판정 및 행정지도 161건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기여
-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5개소)를 발굴·홍보하여 빈집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농촌빈집정비 실적(%)</td><td>100</td><td>122.2</td><td>122.2</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빈집정비실적을 운용하고 있고,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등을 발굴·홍보하여 빈집활용에 대한 지자체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추진계획 수립, 현황조사 등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 현황에 대한 지속적 DB 구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지역의 중심거점·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이 상호기능적으로 연계되어 농촌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3·6·5 생활권' 구현

[내용] 1. 사업명: 농촌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 지구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을 지원(7:3)하여 지역별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읍·면 소재지에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 (중심거점)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각종 서비스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
-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배후마을에 대해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은거점 조성
• 중심지와 떨어진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 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td></tr>
<tr><td></td><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2">중심거점-기초거점 조성현황(누계)</td><td>900</td><td>900</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0.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농식품부 자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부진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사업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의 중요성, 대표성,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단순한 사업 물량으로 만들어진 성과지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질, 수요자의 체감도 등을 반영한 신규 지표가 필요함.
• 생활SOC 선정지구 수나 거점 지구 수가 아닌 거점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 서비스 향상,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달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내용] 1. 사업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 사업구조: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을 지원(7:3)하여 지역별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지역 선순환 경제 등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획한 사업 계획을 지원하여 사람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
  -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 : 133개 조직('18: 40개, '19: 93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조성 현황 (누계/개소)	100	1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정책 성과, 정책 환류 등 전반적인 정책 수행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됨.
- 현 성과지표가 보수적이고 평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더욱 적극적인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조직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성과와 경험 확산을 위한 광역지자체 또는 전체 사업 단위에서의 성과 보고 및 확산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1-3] 어촌뉴딜300</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구축 및 활력 제고

[내용] 1. 사업명: 어촌뉴딜300 사업
2. 사업구조: 시·군·구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수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 대상지의 사업을 계획·시행·사후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해상교통 이용 편익 증진
- 여객복합시설 ('19) 18개 → ('20) 68개 → ('21) 92개 → ('22) 100개
•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어항과 배후마을 단위로 추진된 어촌뉴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Post-어촌뉴딜(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4개소 추진</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어촌뉴딜300사업 지원 개소 수</td><td>300</td><td>300</td><td>100.0</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어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주 안전성 및 교통 편의성 개선 효과가 있으나 어촌 인구 유입 촉진 성과를 제시할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함.
• 투입된 예산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는지, 사업 시행 방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정책사업의 성과평가에서도 예산투입지표가 아닌 활력 정도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어촌·어항 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와 어촌 활력 지역변화율 등이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3-1-4]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변화 대응 정주환경 서비스 모델 구축 및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따른 공간데이터 구축 및 농촌재생 모델 개발

[내용] 1. 사업명: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2. 사업구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R&D 사업으로 정주 환경 및 농촌 공간 연구 주관 과제에 국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공간계획 수립 현장 컨설팅 및 농촌협약 대상지 평가를 통한 농촌공간정책 추진 지원
  - 농촌협약 대상지역의 데이터 구축 분석을 위한 기술보급서 발간
  - 농촌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간데이터 및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개선
  -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농촌다움포럼 개최: 3회
  - 농촌 공간데이터 구축 및 DB 표준화: 생활·환경 부문 50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정책자료 반영율(%)	70	7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연구 결과를 활용한 횟수가 아닌 활용된 주요 연구 결과, 정책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함.
- R&D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평가 자료에서 연구의 수준이나 효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개선 필요 사항

- 삶의 질 기본계획의 365생활권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구이나 사업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미흡하여 개선하여야 함.

과제명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①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 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내용] 1. 사업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사업구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진단 및 점검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농식품부가 선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시행 및 준공
3. 주요 사업 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적기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공
- 집중호우, 태풍 대비 저수지 홍수 배제 능력 제고를 위해 방류시설 설치 추진
  - 총저수용량 20만㎥ 이상 방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저수지에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등 방류시설을 설치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리시설 개보수율(%)	85.6	85.7	100.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폭우, 폭염 등 재해재난발생 빈도와 규모가 큰 현실에서 노후 파손 또는 제방의 보수·보강 및 기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추진 절차가 정형화되어 개선여지가 제한되어 있으나 시공 방식의 차이에서 재해위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 사업 개선이 필요함.

과제명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②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표지판, 안내판, 난간, 펜스, 가드레일 등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사전 예방 등 체계적 안전관리 실시

[내용] 1. 사업명: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국고 보조금 및 시행계획을 승인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시행주체로 하여 현황조사 결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 지속 감소 효과 창출
  - 안전대책 시설 설치 : ('22년) 안전시설 2,890개, 출입 통제시설 43,472m
  - 인명사고 감소 : ('19년) 13명 → ('20년) 9명 → ('21년) 7명 → ('22년) 9명
- 유지관리 업무에 지역민 8,606명 채용으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안전확보율(%)	60	63	1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 및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 더욱 정교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실행방식을 개선할 경우 시업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개선 필요 사항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단순히 목표 예산 대비 확보 예산의 비중을 측정하고 있어서 적절치 않으며 안전사고 감소율 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표 발굴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내용] 1. 사업명: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조: 시·도, 시·군에서 농식품부에 시행지구 신청 후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군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배수개선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 영농기반 조성
- 상습 침수 농경지 303천ha에 대하여 '22년까지 67% 침수피해 해소
- '22년에는 201지구 23천ha(3,606억 원)를 시행하여 24지구 2,665ha에 대한 침수피해 해소</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침수피해 사전 방지율(%)</td><td>66.4</td><td>66.5</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0.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촌지역의 침수방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 대상 지역이 논에 한정되어 있어서 농촌지역 전반의 안전도 제고와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한적임.
•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과지표 적절히 설정하고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풍수해에 대응하여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국가 어항 내 취약 어항시설에 대해 안전대책 마련하여 어업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내용] 1. 사업명: 국가 어항 개발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어항 어항시설 보강 및 내진 보강 등을 통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22년 어선안전 수용률 산정 결과, 전국 수용 대상어선 6만5천여 척 중 5만6천여 척에 대한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함으로써 어선 피해 예방 기여
• 노후시설 철거, 구역 정비, 기능·편익시설 등 신축,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등 어항 공간을 재정비하여 어업인 및 이용자 편의 증진</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어선안전 수용률(%)</td><td>85.9</td><td>86.0</td><td>100.1</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의 목적에 맞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계, 홍보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 특성으로 어업과 어촌의 열악한 생산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제로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5] 산불 예방·방지 대책</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재난으로부터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내용] 1. 사업명: 산불방지대책
2. 사업구조: 각 지자체가 연중 다양한 산불방지 대책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
3. 주요 사업 내용
• 산불 예방 · 대응 대비태세 확립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역대 최장 울진·삼척 산불(213시간), 최다 대형산불(11건) 등 재난성 산불재난에도 인명피해 없이 국가중요시설 보호
-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농·산촌 자발적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지속 추진
• 산불 초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진화장비 등 확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대국민 산불방지 경각심 제고</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소각산불 발생률(%)</td><td>20.8</td><td>13.6</td><td>135</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산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사업실적 및 효과, 제도개선 노력, 정책 홍보 노력 등은 우수한 반면, 성과지표를 다소 상향할 필요가 있고 정책 수요자 참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체계 보완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및 대피체계 구축

[내용] 1. 사업명: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2. 사업구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관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림청에서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하여 지자체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생활권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재난 피해 최소화
- '22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 내습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산사태 피해면적이 25% 증가하였음에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인명피해 0명 달성
•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확대·운영하여 산사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기초조사 계획량 달성(개소)</td><td>18,000</td><td>18,000</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8.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정책수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삶의 질 영향력이 높으나 사업 효과를 드러내는 노력이 부족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과제에서 제외하고 산사태 위험도 측정, 산사태 예방공사 추진 등을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 설정된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므로 재설정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또는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3-2-7] 산림보호 지원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목적] 산불 진화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산림 보호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통해 농산촌 재해취약계층 보호

[내용] 1. 사업명: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2. 사업구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업인 대상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통한 지역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기여
  - 채용인원 67명 중 취업취약계층 63명 선발
-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따른 근로자 재해유형별 비상조치계획 수립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관리 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비상연락망 재정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산림보호 면적(천 ha)	31	33	106.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5개 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적절한 실행방식을 갖추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추진체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부실하고 우수사례 도출이 미흡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th><th>담당부처</th><th>경찰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시설 등을 확충하여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력·지역안전순찰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범죄예방활동 강화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2.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각 경찰서와 유관기관·지역주민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 및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농어촌지역의 탄력순찰 이행률은 95%를 달성하였고, 전국 평균 96.3%와 큰 격차가 없는 것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활용,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 농·어촌 각 지역별 농산물 보관창소 및 재배지역 등 범죄우려 장소를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를 통해 선제적 치안활동 활용</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농어촌지역 탄력순찰 이행률(%)</td><td>79.0</td><td>95.0</td><td>120.3</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적절하게 설계됨.
• 강원청, 경북청, 충북청, 전남청, 충남청 등 관련 기관별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농어촌지역 범죄예방 진단, CPTED 사업 활성화, 지역안전순찰, 특별방범활동,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각 사업별로 실행방식과 체계가 논리정연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내용] 1. 사업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 시행 시·군을 선정하여 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를 준공 후 임대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4개(괴산군, 서천군, 고흥군, 상주시) 지구 준공 및 입주
  - 괴산군(36세대 입주/87명 입주), 서천군(24/57), 고흥군(30/50), 상주시(28/59)
-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주대상자 완화
  - (기존)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 → (변경)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내에서 만 40세 이상 귀농 · 귀촌자도 포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수(누적, 개소)	4	4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시·군의 신규사업 신청부터 사업시행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한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 규모 확대 필요함.
- 주택 제공만이 아닌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의 접근성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과 추진체계가 필요함.

과제명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추진

[내용] 1. 사업명: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LH 등이 공모·사업승인을 신청하며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승인 후 지자체 및 LH에서 복지관 건설비 보조 등 사업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저소득층의 고령자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에 복도·욕실 등에 안전손잡이, 비상안전유도등 등을 설치
- 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식당, 운동시설, 문화강좌실, 옥상텃밭 등을 설치 및 복지법인이 상주하며 복지서비스 상시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대상지 선정 수(개소)	10	1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2.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지자체 및 LH 등의 공모 신청에서부터 사업승인, 사업 추진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한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입주민의 만족도 및 의견조사 등이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효과의 검증이 어려움.
-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성,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사업 과정과 추진체계는 미흡함.

과제명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목적]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내용] 1. 사업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구조: 국토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지역을 선정, 건설사업비 일부, 간선시설 설치비용 및 각종 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마을계획 수립 비용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하여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주변 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저변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준공 수(호)	2,000	1,200	6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0.7
		2-2. 사업 효과 (20)	10.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시행 주체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농어촌 지역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미입주가 발생하고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나은 주택으로 입주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추후 정책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가 필요함.

과제명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생활 전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내용] 1. 사업명: 스마트빌리지 사업
2. 사업구조: 과기정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할 세부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 안전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
  - 담당 공무원과 화상 연결이 가능한 행정민원 키오스크를 시골 마을에 설치하여 산간오지 고령층 주민의 편의 향상
  - 스마트 CCTV, 비콘 등 AI·IoT 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절도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농어촌 안전 강화
  -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무인 드론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농촌 일손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신안군 내 마을 어장 낙지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21~'22년 지속)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서비스 확산 건 수	3	3	100.0
수혜자 만족도(점)	81.0	89.3	110.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다양한 시범 사업과 실증으로 생활편의 성과를 도출함.
-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약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NIA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추진하여 수행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주민의견 수렴, 사업확대 실적 등 근거자료가 미흡한 분야가 있음.
- 성과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기술접목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과제명	[3-3-4-2] 디지털타운 조성(스마트타운 조성)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과제 개요

[목적] 인공지능, 첨단정보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명: 디지털(스마트)타운 조성사업
2. 사업구조: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공모받아 선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고령층, 취약계층 건강 복지 환경 향상
  - 고독사 예방 및 선행 관리 서비스 제공(500세대. AI스피커· IoT돌봄센서), 정신건강·만성질환 복합돌봄 서비스 제공(800세대, 정신건강 진단기기, 스마트밴드)
  - 독거노인 실시간 위험신호 측정 서비스(독거노인 90세대. IoT 및 AI반려로봇), 우울증·치매, 심신스트레스 측정 서비스 제공(스마트마을회관 40개소)
  - IoT 헬스케어 기기설치, 비대면 건강상담 등 어르신 평상시 건강관리 예방 서비스 제공(법정리 마을 경로당·복지회관 13개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디지털(스마트)타운 조성 건 수	6	6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실시간 위험신호 측정 서비스, 비대면 건강상담 등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음.
- 사업공모, 사업안내(설명회), 공모접수, 서면 및 현지 심사, 발표심사 등 사업 실행방식과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주민, 지역기업의 참여 방식과 추진체계 마련 필요함.
- 더욱 적극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과제명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목적]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내용] 1. 사업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검토하여 국고 편성, 지자체별 사업 시행 후 사후 점검·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에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 환경오염 예방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촌 정주기반 확보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확충(준공)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집행 제고방안 강화 (1월)
  - 사업예산의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예산 감액 기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집행 부진 내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감액 기준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생활폐기물 매립률(%, 하향지표)	19.8	19.0	104.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치로 설정하고 달성률도 우수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목적에서 삶의 질 개선 측면과의 부합성을 더 강조해줄 필요 있음.
- 삶의 질 개선 효과 창출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우수사례 제시가 미흡함.

과제명	[3-4-1-2]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실현

[내용] 1. 사업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 수행(비예산 사업)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8,641개 마을 참여 및 영농폐기물 14,257.35t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배출, 경관작물 식재, 하천정비 등 농촌 마을 경관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농촌 구현, 도농교류 활성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참여마을(개소)	15,500	8,641	55.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 적절한 실행방식을 갖춤.
-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치로 설정하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자율참여의 캠패인 사업으로서 참여도 저하, 형식적 추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
(해양폐기물 정화)</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 조성

[내용] 1. 사업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정산
3. 주요 사업 내용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4%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 포함) 수거를 통해 어업생산 환경 개선
•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22년 2월)
•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민 등을 대상으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22년 7~8월)
• 해양폐기물관리정책 워크숍: 해양폐기물 정화 보조사업 추진 방안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22년 11월)</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량(톤)</td><td>36,900</td><td>43,243</td><td>117.2</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2.7</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0.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간담회(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설명회(어구부표 보증금제), 의견수렴(해양폐기물 관리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수혜자의 구체화와 삶의 질 측면에서 농어촌 현실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서 갖추어야 할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과제명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연근해 주요 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여 산란·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유령 어업을 예방해 어업생산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 제고 기여

[내용] 1. 사업명: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진행
3. 주요 사업 내용

- 조업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유령어업으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 · 침적 폐어구를 수거
- 폐어구 수거 · 처리 실적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1년 3,721톤 수거 · 처리 → '22년 4,248톤 수거 · 처리
- 폐어구 저감을 위해 어업인 참여형 수거 사업 추진
  - 태안근해형망어선 4척을 활용하여 태안 격렬비열도 주면 폐어구 97톤 수거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유실침적어구 수거면적(천ha)	224	241	107.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목표와 추진 절차가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사업 목표 대비 실적과 사업의 효과가 우수함.
-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 계획수립, 결과보고 등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효과 부문의 수혜자 대상 정책효과 검증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함. 평가자료로서 제시한 건의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 사업을 통해 개선된 연안어장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th><th>담당부처</th><th>해양경찰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해양쓰레기 감축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피해 최소화

[내용] 1. 사업명: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 확보
-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 ('22년) 95백만원 → ('23년) 164백만원(증 69백만원, 42.1%)
•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갯벌,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 구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확대 추진
- 총 29회에 걸쳐 블루카본 지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90톤 수거</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수중·연안정화 해양쓰레기 수거량(톤)</td><td>392</td><td>562</td><td>143.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0.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0.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2.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해양쓰레기를 감축하여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은 어촌 지역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여 삶의 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목표임.</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성과지표인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다소 평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만족도 조사 등을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감축을 통하여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직접 수행 방식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전환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4-1-6] 국민방제대(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목적]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해양자율방제대 지원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에서 해양자율방범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방제작업 참여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원거리·도서지역 등 방제취약지역의 자율적인 방제 능력 강화
  - 해양오염사고 대응: '20년 37회 → '21년 39회 → '22년 41회
- 안전 교육·훈련을 통한 방제작업 참여자의 보건·안전사고 예방
  - '22년 해양자율방제대원 교육·훈련 500회, 3,860명
- 해양자율방제대 2개소 12명 확대 및 운영물품 등 지원
  - 해양자율방제대 구성현황 : '21년 310개 3,452명 → '22년 312개 3,464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참여(명)	3,333	4,533	136.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 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함.

개선 필요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된 해양오염 방제 기능 강화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만족도 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명	[3-4-2-1]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내용] 1. 사업명: 축산악취 개선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사업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행·재정 지원: 축산악취 개선이 시급한 33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 통한 정책 성과 도출
- 지역 공동체 구축: 주민 불편 주체(농가·분뇨시설 등)와 수혜자(민원인 등)가 소통·협업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역 협의체" 구축
- 농가 악취관리 강화: 지원 내용에 적합한 악취개선계획을 농가별로 수립하고, 축산·악취·분뇨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점검 추진(연중)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 등시설 운영실태 점검('22.5~9월, 84개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5,500	5,586	101.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예산집행 실적, 실적 달성 수준, 정책효과 검증, 우수사례, 정책개선 제안, 제도 개선 실적, 홍보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민간기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우수사례를 도출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사업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나, 사업추진체계에서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의 기준과 절차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과제명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확산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인의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 참여 유도 및 관리 지원

[내용] 1. 사업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마을 주민이 사업 신청, 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검토·평가하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
3. 주요 사업 내용

- 농업환경보전활동 수행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참여 주민의 농업환경 인식도 제고) 및 분석 실시
  - 생물다양성 증진: 논에서는 4년차 시행 마을에서 전년도에 비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증가, 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수행에 따라 마을별 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330.2tCO2, 전체 감축량 8,255tCO2로 분석
  - 참여주민의 인식도 제고: 사업 전·후 인식도*는 19.7%(사업전, 20.3월)→51.8(1년후, '20.12)→64.1(2년후, '21.12)→80.5(3년후, '22.12)로 증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마을 개소수(누계)	65	6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개별 마을 단위의 상향식 공모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정책 우수사례, 제도 개선 노력, 수요자 의견반영, 신규 보전 활동 발굴 및 추가 등은 긍정적임.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직접적 목표는 명확하나, 사업을 통해 달성할 궁극적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삶의 질 개선 비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목표 설명이 부족함.

과제명	[3-4-3-2]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

[내용] 1. 사업명: 친환경·첨단양식시설 지원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지정한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및 시설지원을 통해 어업인 경영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도모
  - 친환경·스마트화: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화하여 생산성 제고,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마련
  - 일자리 질 개선: 노동 의존도가 높아 어촌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취약한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CT,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양식장 원격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보급으로 어업인 업무환경 개선(매출액 1억당 종사자수 30% 감소)
- 양식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창업, 귀어인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창업지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의 양식 생산 증대를 위해 양식어가(6개소)에 첨단·친환경 양식 시설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만 톤)	222	232	104.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이전 교육 수료자 215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음.
- 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취업 또는 창업 등 어촌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가 돋보임.

개선 필요 사항

- 정책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원을 받은 친환경 양식장의 양식수산물 생산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반드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훼손·방치되어 있는 과거 갯벌지역(폐염전·폐양식장 등)을 자연갯벌로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 사업구조: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대한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갯벌복원(2개소), 식생복원(4개소) 등 신규 갯벌복원사업 지속 확대로 갯벌생태계 기능 회복 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신규사업 현황(개소/억원): ('19) 1/35 → ('20) 1/52 → ('21) 3/111 → ('22) 6/128
- 갯벌유산 2단계 후보지인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12.29)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개수	9	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기아차-해수부 블루카본 MOU체결 등 기업의 ESG경영이 결합된 선도적 사례가 창출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추진 절차와 시행 주체가 나열되어 있고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①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목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정화, 에너지화 등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등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 사업구조: 환경부가 환경청을 경유하여 각 지자체와 농협조합이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국고 보조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5개소 신·증설 및 개선 지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 편성·집행지침 개정(1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표준사업비 단가 현실화 및 항목 세분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또는 기존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 우선 지원하도록 지원 우선순위 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량(㎥/일)	18,644	23,845	127.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시설, 지원 우선순위 등의 고려를 통해 농어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춤.
- 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

개선 필요 사항

- 적절한 사업추진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삶의 질 개선 비전 측면에서 실행방식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과제명	[3-4-3-5]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②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개별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퇴·액비, 바이오가스 등) 촉진 등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내용] 1. 사업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확정하며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정 후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확대 및 초과되는 퇴비를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차 생산·이용기반 구축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기존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장원화시설 설치사업에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시설 지원근거 마련('22.12.)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경상경비 지원 근거 마련('22.12.)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규설치(사업자 선정)	1	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신규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추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본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현재 8개소)에서 연간 12.4천톤CO2eq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원유 25천배럴(약 16억원) 대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현재의 성과지표는 전형적인 산출지표로, 사업 목적인 개별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의 감소 정도, 자원화 촉진 수준 등을 측정하는 결과지표 발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4-3-6] 부산물비료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내용] 1. 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표준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농협과 함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집행 및 사업 시행 ('22년부터 지방이양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2~3%) 유지에 기여
- 토양 유기물은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비료와 수분 보유력을 높여 작물이 필요할 때 생육을 안전하게 하고, 양분의 환경유출을 줄여 토양환경을 보전
• '22년 지방이양에 따른 표준사업 시행지침 마련을 통해 시·도가 익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총괄이 가능하도록 지침 반영</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지방이양으로 중앙부처 성과지표 미측정</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5.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평가 불가</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평가 불가</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1.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평가 불가</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2.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22년도 지방이양에 따른 표준사업지침을 마련했다고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근거 자료로 첨부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표 달성 여부나 효과성 검증, 제도 개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평가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 본 사업의 목적과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달성하도자 하는 목표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4-3-7]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저수지·유휴부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하여 발전 수익금을 수리 시설 유지관리에 재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부담 경감 및 농업인 영농편의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업기반시설활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주도하에 사업을 시행·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발전 수익금 창출
  -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에 재투자하여 국가 재정부담 경감 기여 및 농업인 영농편의 도모
  - 저수지, 담수호 등 유휴 수면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인허가·주민 동의 완료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구를 선정 및 발굴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소 발전 규모 확대
  - (당초) 재생에너지 19지구 17.6㎿ → (변경) 18지구 21.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하여 생산된 전기 판매 수익금(백만 원)	16,250	24,468	150.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공사의 사업 예정지 조사, 기재부 예산요구 및 확정, 사업 시행지구 확정 등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로 판단됨.
-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추진체계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건이나 사업추진 상에서의 주민 갈등해소나 수요조사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사업방식 개선 필요함.

과제명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친환경 어업을 선도, 에너지 절감 비용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내용] 1. 사업명: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및 보조금 교부, 각 지자체와 선정된 민간에서 사업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어업인 경영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을 195개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연간 12,327톤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 당초 기름보일러를 사용한 어가의 경우 히트펌프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평균 53.5%(9,200만 원→4,275만 원) 감소
  - 인버터의 경우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평균 14.7%(9,766만 원→8,333만 원) 감소
- 히트펌프 보급사업 적극 홍보를 통해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여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역 확대
  - 지원 지역: ('21년) 8개 시·도 → ('22년) 9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량(kW)	62,727	69,974	111.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가운데 85.3%가 경영 여건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 우수사례의 도출 등 사업 효과 확산에 노력하고, 미래형 어촌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양식어업인의 조건이나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 보완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9] 목재펠릿 사용 확대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목적] 농·산·어촌, 에너지취약지역 등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유도 및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수요처 마련

[내용] 1. 사업명: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2. 사업구조: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일정 비율로 하여 지자체별 예산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자 콜센터 및 A/S 전담반 운영
  - 목재펠릿 보일러 민원 해소를 위해 콜센터와 A/S 전담반을 운영하고, 폐업한 업체 제품, 보일러 관련 민원, 목재펠릿 판매처 등 농·산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목재펠릿 공급 확대를 위해 원료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2.8.26)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를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목재펠릿 생산량(천톤)	356	732	205.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자 콜센터 및 A/S 전담반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목재펠릿 생산 확대를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를 확대함.

개선 필요 사항

- 성과지표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화석연료 대체율,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농산촌 연료비 절감율 등을 포괄하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혜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과제명	[3-4-3-10]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목적] 에너지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내용] 1. 사업명: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2. 사업구조: 산림청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예정
  - 마을 주민들에 난방비, 전기요금 등의 직접적 절감 효과와 함께 발전소 운용 시 수익 발생으로 조합원 수익 분배 및 재투자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로 산림자원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환경보전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완료 수	1	0	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의 판단이 어렵고, 예산의 지속적 확보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개선 필요 사항

- 추진 과정상의 성과와 R&D를 통해 제시된 모델의 검증과정과 결과 제시 필요함.
- 성과지표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료비 절감액이 담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목적]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 추진과 맞춤형 단속 장비 확충을 통해 해양 조업 질서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 우리 어민의 소득증대

[내용] 1. 사업명: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장비 확충
2. 사업구조: 해양경찰청 주도하에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강력 단속과 공조 강화로 조업 질서 개선, 불법조업 외국 어선 크게 감소 및 서해 대표 어종 대폭 증가로 수산자원 보호와 식량안보 확보
  - '21년 대비 꽃게 50%↑(269억 원 상당), 민어 99%↑, 까나리 17%↑, 갈치 0.5%↑
- 한반도 주변 해역 위성영상을 매일 분석하고, 항공순찰 고도 상승으로 레이더 감시범위 확대(반경 181km→288km)하여 광범위 탐색
  - 불법 외국어선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 선제적 배치하여, 불법 조업 감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9.6	8.0	12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불법 조업 단속으로 어업인의 어획량 증가와 소득향상에 기여함.

개선 필요 사항

- 서해안 어선어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조업 질서 개선과 우리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어촌계 등 주민 조직과의 연계 협력 필요함.

과제명	[3-4-4-1] 농촌공간계획을 이용한 난개발 방지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재구조화를 위해 유해시설(공장 · 축사 등)이 혼재되어있는 농촌 마을 내 난개발을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재생사업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내용] 1. 사업명: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신청한 각 시·군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
3. 주요 사업 내용

- '21년 대비 '22년 예산 및 신규 추진 물량 대폭 확대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소 수(누적) : ('21) 4개소 → ('22) 38
  -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 ('21) : 25억원 → ('22) 320
- 지자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의 불필요한 부분 폐지하여 지침 개정 ('22.12)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지자체(개소, 누적)	45	38	84.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본 과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신규 정책으로 정책효과의 실질적 도출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하여 2022년 사업 내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로 나누어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충돌과 소통에 관한 정책 시행과정과 추진체계가 제시되지 않음.
-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계획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를 운영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및 상세한 제도 운영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과제명	[3-4-4-2] 경관보전직불제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내용] 1. 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사업
2. 사업구조: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선정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면적 21,435㏊의 69.1%인 15,037㏊ 사업면적 배정을 통해 마을경관보전 협약면적 14,025㏊ 대비 파종면적은 12,975㏊로 92.5% 달성
- 경관 작물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을 고려한 직불금의 지급을 통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 개최가 증가하면서 마을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 현황: 경관작물 관련 축제(234개 지구), 지역축제(242), 농촌관광(45), 체험 등 도농교류 행사 연계(12)가 전체지구의 91.6%에 해당
- 초지의 경우 대부분 다년생 목초로서 재배·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준경관 초지의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목초의 범위에 다년생 목초를 포함하되 재배·관리 특성상 매년 파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생육 불량면적에 대해 매년 보파(덧뿌리) 하도록 개선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	92.0	92.5	10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가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로 설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정주생활기반)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삶의 질 개선효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차별 실적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해 줄 필요 있음.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 자료를 통하여 정책 우수사례의 도출 등 사업 효과 확산에 노력한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료 보완이 필요함.

과제명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수산물 생산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접경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율을 제고

[내용] 1. 사업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시행지침 및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어업인·운영위원회가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관리협약을 체결 후 직불금 지급
3. 주요 사업 내용

- 어촌·어업인에 대한 수산공익 집접지불제 보편적 지원 강화를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22.10.18.)을 추진하여 신설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도입* 등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23.4.1. 시행)
  - 기존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개편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과 신설직불제 도입에 따른 보편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67.1% 예산 증액 확보
  -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억 원): ('21) 514.7 → ('22) 558.6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직접지불금 수급어가수(%)	82.5	89	107.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수산공익직불제 발전방향 논의와 세부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개선 필요 사항

-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발굴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접지불금 수급어가 성과지표는 충실히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급대상 어가는 10%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①</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2. 사업구조: 시·군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농식품부에서 심의·지정 후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업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유산지역의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운영실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 등 마련, 제시
- 세계중요농업유산 3개소 모니터링 시행(제주 밭담 농업,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 국가중요농업유산 4개소 모니터링 시행(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시스템,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농업유산 방문객 수(백만 명)</td><td>15</td><td>17.2</td><td>114.7</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대상 조기 선정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등 과거 정책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노력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자원을 발굴하고 세계유산 및 국가 유산 등재에 성과를 나타낸 정책임. 그간 성장시켜온 주민 공동체 활동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정주기반 마련의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객관성 확보 및 농업 유산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에 대표적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관광지로 등록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 등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3-4-4-5]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②</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6">[목적] 어촌의 유·무형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여 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계획을 수립, 해수부의 승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어업유산이 증가하고 있으며('22년 1개소),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적극적
• 어업유산 보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확보 추진
- 어업유산 사후관리 3년간 7억원 → 15억원</td></tr>
<tr><td colspan="4">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4">어촌 관광지 방문객 수(만 명)</td><td>116</td><td>123</td><td>106.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4">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2.7</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지자체가 발굴하는 어업 유산이 증가하고 있고, 등재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지원을 위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는 충실하게 갖춰있다고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6">• 어업 유산은 어촌 관광지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어촌관광지 방문객 수를 성과지표 설정하는 것은 과다 산정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어업유산 지정 지역 주민 등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농업·농촌 공익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증진

[내용] 1. 사업명: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2. 사업구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과제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지원 활동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소멸위험지역 전통수리시설 보전방안 표적집단면접조사(12.1.)
  - 전통수리시설 이용 및 생태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 등
- 농업유산 제도 개선 방안 개발 표적집단면접조사(12.2.)
  - 농업유산 지정 효과 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등 의견 수렴
- '농촌문화자원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활용 체계 구축 연구' 추진
  - ('22-'24) 농촌문화자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류 및 디지털화, 농촌문화자원의 가치평가 및 활용방안 개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자원관리·활용 기술 개발 및 현장활용 건수	2	5	25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두 차례의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것으로 판단됨.
- 전통수리시설 보전방안에 대한 면접조사 및 개선방안 조사가 시행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수혜자의 참여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본사업의 성과가 정책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향후 성과지표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촉진, 사업운영 및 확장,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2. 사업구조: (민간보조)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이 신청한 계획을 농식품부가 승인 후 사업 추진, (지자체 보조) 시·군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시·도가 평가,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하여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증 경영체가 증가하고, 경영안정 및 매출액 증대
- 인증사업자 수: (`20) 1,909개소 → (`22.11) 2,222
- 총 매출액: (`20) 2.73조원 → (`22) 3.62
•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판매관을 운영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해 매출실적 전년대비 69.5% 증가
- 판로지원 매출액(백만원): (`21.9) 20,358 → (`22.9) 34,504</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2">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개소)</td><td>2,164</td><td>2,204</td><td>101.8</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4.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의 목적성, 실행력, 평가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주기적인 정책개선 노력과 홍보의 체계성을 구축고 있어 우수하다고 판단됨.
•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사업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에 대한 매출 및 투자, 고용 증가 등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이 필요함.
• 사업 추진체계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각 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지역단위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내용] 1. 사업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권역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 전국 19개 거점단지 조성 완료(`22년 4개소 조성: 화순, 해남, 통영, 서천)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1.5, 단계적 폐지)에 따라 인프라 구축 종료(`22년)
  - 사업목적 달성에 따라 `23년 단계적 폐지 예정(`22년부터 신규 투자 없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완공시설물 평균 매출액 증가율(%)	25	20.9	83.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일자리 증가율(%)	118	122.9	104.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7
		2-2. 사업 효과 (20)		11.3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이용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됨.
- 제도개선 실적, 정책수혜자 의견 반영 등 정책 환류 노력이 미흡함.

개선 필요 사항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과 조성된 거점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사업이 필요함.
- 수혜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하며, 정책 우수사례 도출 및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1-1-3] 산림분야 6차 산업 육성</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

[내용] 1. 사업명: 산림소득분야 사업
2. 사업구조: 산림청이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자체별 사업 대상지를 공모·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보조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특화 임산물을 활용한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산업 간 융·복합 및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td></tr>
<tr><td colspan="5">
<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임산물 클러스터 조성(개소)</td><td>1</td><td>1</td><td>100.0</td></tr>
</table>
</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2.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충 및 산·학·연 연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 집행의 체계성이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임산물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 고용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반영이 필요하며,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체계, 수혜자 인식조사 기반 정책개선 체계, 정책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확산

[내용] 1. 사업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 선정된 지자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확산
  - 아동복지센터, 노인케어센터 등 먹거리 취약계층 1,370명 대상 로컬푸드 먹거리 나눔, 관련 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 36건
- 지역 여건에 맞는 시민사회 푸드플랜 실천모델 발굴지원으로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수	85	87	102.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의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먹거리 시민사회의 능력향상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시행자들이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 및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이므로,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 필요 사항

- 민간의 정책 참여 및 협조를 유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기초단위의 정책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유사 중복 사업과의 사업 구분을 통해 정책 간 중복을 피하면서 연계사업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하며, 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 있음.

과제명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는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

[내용] 1. 사업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시·도 또는 aT를 경유하여 시·군·구 또는 사업체에 교부금을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사회적 가치 확산: 직매장 확대 및 경영 안정화 지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취약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체) 직매장(778개소) 매출액 8,970억 원(개소당 평균 11.5억 원)
  - 매출액 추이: ('13) 317억 원→('15) 1,659→('17) 3,565→('19) 5,206→('21) 8,970
- 직매장 접근성 강화: 코로나19 등 소비·유통 환경변화 대응에 따른 온라인 연계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취약농가 참여 확대
  - 농협몰·자제 온라인몰 연계 근거리 배송서비스 직매장 5개소 지원
  - 직매장 참여 중소농(0.5ha 미만) : ('20) 46,094명(48.2%) → ('21) 52,587(55.0%)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소)	830	857	10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직거래 농산물의 품질기준 마련, 불량품 처리기준 설정, 공급 가능 품목의 확대, 생산자 조직화, 도농 연계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성과지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결과(매출액, 참여 농가 등)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과제명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
②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 창업 제품 경쟁력 강화

[내용] 1. 사업명: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2.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중심의 단계별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 신규창업 경영체 수 증가: ('21) 122개소 → ('22) 134 (9.8% ↑)
  - 시제품 개발(1,332건), 상품화 지원(583건), 기술이전(222 경영체, 299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시제품 개발(건)	45	77	171.1
매출액 증가율(%)	13.9	15.9	114.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나 접근성에 있어 다소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가공시설 구축의 고비용과 농어촌의 열악한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수함.
-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와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업인 체감효과가 높음.

개선 필요 사항

- 시제품 생산장비 등은 지역 내 구축된 장비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관련된 농산물 가공 특화센터 등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직접적인 창업 효과를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창업 건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운영

[내용] 1. 사업명: 산지 유통시설 지원
2. 사업구조: 지자체에서 수협 등을 통해 어업인, 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신청을 받아 해수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를 연계한 전국 단위의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통해 유통 선진화 도모</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정율(%)</td><td>11.4</td><td>11.4</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1.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1.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지역 농어가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이 시설 건립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고려 및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직 육성 등이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정책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정책 우수사례 도출 및 홍보실적 보고 필요 등 정책 성과에 대한 환류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센터의 활용도, 주체들의 역량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직거래 등을 확대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내용] 1. 사업명: 직거래 활성화 추진
2.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보조사업자인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수산물 소비 활성화: 농·축산물 위주의 로컬푸드 개념을 광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로컬 직매장에 지역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생산자 판로 확보 지원
- 영남·제주권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 공급자 5개사, 직매장 3개사(4개 매장) 선정·지원
- 농축산물 중심의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 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전 품목 원스톱(one-stop) 쇼핑을 유도
• 온라인 유통 활성화: 영세 업체(어업인)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거래 시장(전자상거래, 홈쇼핑) 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어업인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관리·컨설팅(80개소), 홈쇼핑 입점 지원(18개 업체)</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로컬직매장 입점 수(개소)</td><td>6</td><td>6</td><td>100.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5.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로컬 직매장과 온라인 입점 판매를 통해 일정 매출이 발생하는 등 수산물 생산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하였다고 판단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수산물 유통경로 개선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추가 성과지표(온라인 거래 지표)가 필요함.
• 우수사례 도출 및 정책 홍보 노력 등 정책 환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2-1-1] 농촌관광 활성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내용] 1. 사업명: 농촌융복합활성화지원사업(농촌관광 활성화)
2. 사업구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승인·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가족 중심의 관광 트렌드로 변화함에 따라 농촌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량 확대
- 단체 중심을 벗어난 소규모 단위 여행객 대상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5배로 대폭 확대 추진 (‘21년: 20개 → ’22년: 100)</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td><td>805</td><td>928</td><td>115.3</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4.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선정, 농촌 관광시설 안전·방역 점검,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서 긍정적임.
• 농촌관광을 지속하는 사업에 많은 농가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관광 관련 참여 기업이나 단체의 수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을 농촌관광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는 보조적인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2-1-2] 어촌관광 활성화</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일자리 창출 및 어촌 활력 기반 구축

[내용] 1. 사업명: 어촌관광 활성화
2. 사업구조: 민간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해 해수부에서 승인하고 보조금을 배정하여 마을별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온라인 안전·위생교육(2회), 방역 점검(9회) 등을 집중 실시하고, 소규모 가족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조성 계획 수립
-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마을 4개소 조성 지정·추진
• 찾아가는 어촌교실(청소년 3천명),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275명), 국제 워크캠프(4개국 9명 청년) 등 어촌관광 경험 대상 확대
• 어린이 어촌체험 방송, VR체험관, 어촌체험 꾸러미 등 비대면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촌마을 소득 창출</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객 수(만 명)</td><td>116</td><td>129</td><td>111.2</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0.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무장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마을의 특화 소재를 고려해 특화마을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 개선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 관광 비즈니스는 수요 변화가 빠르며, 관광객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짐을 고려해 사업 수행 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주민 조직(청년, 귀촌자 등) 및 민간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 마을 조성 개수, 농어촌 관광 등급제 추진 마을 개수, 방문객 만족도 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4-2-1-3] 해양관광 활성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연안·어촌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축제·스포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연안·어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컨텐츠 개발·발굴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가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선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배정
3. 주요 사업 내용

- 연안·어촌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지역민 대상 레저 체험 기회 제공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지원
- 연안 지역 성장 지원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수중 레저 등 해양관광 新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연안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전국해양 스포츠 제전, 레저 위크 등 해양레저 행사를 개최하여 연안·어촌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기회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 노력도(%)	100	100	100.0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률(%)	50	51.4	100.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계획, 집행 및 성과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됨. 특히 제도 개선,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정책 홍보 노력 등 정책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해수욕장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해수욕장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집중되는 해양관광지 방문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우수하게 평가함.

개선 필요 사항

- 인프라 조성 이후 실질적인 사업 효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
- 변경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에서 더 나아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판매율 등과 같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을 고려할 필요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th><th>담당부처</th><th>농촌진흥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취약한 농촌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 수요 확대

[내용] 1. 사업명: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2. 사업구조: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농식품부의 정책사업가 연계한 업무협의, 각 지자체 관광 담당자 및 현장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직접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 숙박시설의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품질 제고 기반 마련
- 숙박시설별 세부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을 설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숙박시설 조성기술 제시</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3">농촌관광디자인 및 서비스제고 기술(건)</td><td>3</td><td>6</td><td>2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0.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책 계획 및 집행 실적이 우수함.
• 연구 결과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 효과 검증 등의 환류 노력이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수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관광 정책 방향과 공급 주체(농촌주민)들이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함.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체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체계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2-1-5]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지역별·계절별 특색을 살린 음식·관광자원을 결합해 한식 주제 관광상품 개발·보급으로 한식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내용] 1. 사업명: 한식 테마 관광상품 보급·홍보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식진흥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받아 관광상품을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일상 회복, 한류 재확산 등 기회요인 활용, 외국인 국내관광 수요 충족, 한식 이해도 증진 및 체험형 한식 관광상품 보급·홍보
- 명인, 종부, 셰프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지역 명소에서 SNS 인플루언서를 사회자로 초청하여 외국인 원데이 투어를 통한 지역 부가가치 제고(18회, 338명)</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한식 테마 관광상품 프로그램 참여자(%)</td><td>250</td><td>338</td><td>135.2</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5.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2.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현재의 한식 인식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전통 및 향토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들의 전통 음식 경험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맞춰 전체적인 평가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함.
• 지역주민, 농업인들의 관심 증대와 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① 각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체험·관광이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② 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내용] 1. 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 사업구조: 시군 지자체와 aT가 시행 주체가 되어 민간 양조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지자체 경상 보조를 활용하고, 그 외 홍보·컨설팅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활용
3. 주요 사업 내용

- 관광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기획전 추진
  - ('22년) 찾아가는 양조장 10개소 대상, 지역별 트래킹 관광지 연계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 대상 찾아가는 양조장 라이브커머스 추진
  - ('22년) 찾아가는 양조장 3개소 대상, 네이버 전통주 푸드윈도 연계 테마별 라이브커머스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개수)	4	4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소비자 방문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사례를 도출하고, 기존 수도권 중심의 홍보에서 지역별 관광안내센터를 통혼 홍보로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지역 내에서 양조 원료의 조달, 연계 관광 프로그램의 구성, 귀농귀촌자 및 청년 등과의 협업 등)이 필요함.
- 양조장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참여 농가 수나 단체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내용] 1. 사업명: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민간 경상보조를 바탕으로 해당 요건 충족 농업경영체에 인건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향상하고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전문인력 지원(명)	100	113	113.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2.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사업의 단계적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매년 사업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지역 전체의 활성화, 새로운 주체의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농업법인의 통상적인 채용과 함께 전문인력의 유입으로 경영 체계화와 활력을 추진할 필요성 존재함.

과제명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온실) 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농 후 안정적 운영 역량 제고

[내용] 1. 사업명: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청년농업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지원
  - '22년부터 경영실습임대농장 단가 현실화, 국비 지원 비율 확대하여 15개소 선정·지원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 3년간 임대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개소)	15	1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영농역량을 얼마나 강화하였는지, 제시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함.
-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 조성과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전략 제시가 미흡함.

개선 필요 사항

-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실습농장을 이수한 청년 창업농과 일반 청년 창업농과의 영농 성공률 비교 및 전체 청년 창업농 중 실습농장 수료자 비율 등)이 필요함.
- 실습농장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계획이 필요함.

과제명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목적] ①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 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②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신기술, ICT, 가공, 체험관광, 유통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내용] 1. 사업명: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 사업

2. 사업구조: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모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컨설팅 등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청년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초기 사업비 지원
  - 지원 개소 수: (`20) 40개 → (`22) 40 → (`24) 40 (누적 200)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참여 경영체 평균 소득증가율(%)	37.4	39.0	104.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목적과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이 높으며, 사업의 성과지표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 경영체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30대 이하 청년 유입도 증가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임.

개선 필요 사항

- 청년층이 농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정규 직업교육 기관에서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할 필요 있음.
- 비농업 분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농업생산을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행이 필요함.

과제명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청년 농업인 대상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내용] 1. 사업명: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 시·도에서 농업인 선발 및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 청년 창업농 2,000명(`18~`22년 누적 8,600명) 선발
- 영농정착지원금, 자금·농지·기술교육 등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초기 소득안정 및 영농 정착률 제고(`18년 91.4% → `22년 92.1%)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92.1	92.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청년농 선발,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 사후관리, 예산집행 등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등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검증 및 정책수혜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 필요 사항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유형화와 이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방향 마련이 요구됨.
- 보완적인 성과지표로 창업 기업 수 및 소득증가율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내용] 1. 사업명: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의 수협중앙회가 농특회계 예산 활용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에 융자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수협·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 중장기 계획 및 체계적 선발 기준 수립
• 온라인 교육점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분야 사업 참여 시 점수 부과 등 평가 기준 완화 지침 개정</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수산업경영인 이차보전 집행률</td><td>9,300</td><td>9,300</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실적 관련 사업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음, 20~30대 청년세대의 수산 후계자 선정 비율도 40~5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책 목표 성과를 일정 수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 전반의 수행체계가 중앙정부-지자체-수협중앙회에 걸쳐 매우 체계적으로 확보된 점이 우수하다 판단되며, 사업 체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일정의 준수 및 목표 달성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최근 20·30대 어업인 후계자 비율 감소 등에 따라 청년 어업인에 대한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청년층 중심의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혜자 경영실태, 상환 건전성 등 보다 전향적인 성과지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자금 관련 경기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상환 여력 점검, 관련 투자·사업 추진 성과 점검 등 경영지원을 위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내용] 1. 사업명: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2. 사업구조: 시·도에서 시·군·구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안 마련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사업 주체 확대(농협→지자체 포함), 공사비 상향(3억/개소 → 4.5억 원), 청년, 사회적 조직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농협·융복합지원센터·청년벤처 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 컨설팅 지원</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촌 유휴시설 활용 리모델링(개소)</td><td>5</td><td>5</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2.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변경,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23년부터 균특회계로 이관 및 지역 자율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역할 분담을 재구성하고 농촌 유휴시설의 업사이클링과 유효한 활용을 위한 지속 추진에 관심을 가져야 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도농 교류 관점을 강화하여,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교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개방적 운용이 필요함.
• 농촌 유휴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규지구 사업 개소 수는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 예측을 토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상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임시 주거지원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내용] 1. 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구조: (농정원) 농식품부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모·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과정 제공, (지자체) 농식품부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규모(104개 마을→119)를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목적성을 강화하여 사업성과 향상
• ‘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정착률(%)</td><td>30.0</td><td>41.2</td><td>137.3</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30.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8.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귀농·귀촌인의 지역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지역 탐색과 정착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 집행 및 사업 일정을 원활히 준수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도 우수하게 이루어짐.</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 농정원에서 귀농·귀촌인의 다양성 발휘 및 활동의 기회 제공 등 지역통합을 위한 기반 확대를 추진할 필요 있음.
• 대도시 및 중소도시 인근, 원격지 등 농촌의 입지적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귀농·귀촌인 유입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귀농·귀촌인의 정착 후 유지 및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도 고려할 필요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2-2] 귀어귀촌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양성)</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귀어·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내용] 1. 사업명: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2. 사업구조: 해수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와 어촌어항 공단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어촌지역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 대상자 706명으로 확대(`21년 600명) 선정·지원<br>• `22년 동·서·남해 지역별, 어선어업·양식업 등 업종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형 교육(귀어학교) 1개소(충북) 추가 지정하여 확대
• 귀어·귀촌 관련 전문가로 어촌 정착 상담사 76명을 운영하고, 정착 시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희망자)을 연결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 colspan="2">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자 수(명)</td><td>553</td><td>706</td><td>127.7</td></tr>
<tr><td colspan="2">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자 수(명)</td><td>220</td><td>225</td><td>102.3</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지원 대상자 확대 및 귀어학교 추가 지정 사업 확대, 어촌 정착 상담사 운영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확대와 효과 증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효과를 창출하였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귀어·귀촌의 촉진 요소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패키지형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유입된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정착 거주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스마트팜 시설 원예 및 축산 보급을 통해 청년농 창업 인프라 구축

[내용] 1. 사업명: ①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현대화), ②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③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④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⑦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2. 사업구조: ①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 ②(시설보급) 농식품부에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농업인 등에 시설보급 관련 컨설팅 지원, (온실 신축)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공모하고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 ③ 희망 농가에서 컨설팅 후 ICT 장비 도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 및 지원, ④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희망 지자체를 농식품부에서 선정하여 추진, ⑤ (신재생에너지보급) 각 지자체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에너지효율화 지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추진단이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 사업위탁 추진, ⑥ 농식품부의 기본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농정원과 보육센터에서 교육 운영 수행, ⑦ 사업단을 설립하여 주관기관과 과제 협약 및 연구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축)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동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을 입은 경우 별도 지원
  - 지원 시설규모 : ('21.) 0.5.~2.0ha → ('22.) 0.3~2.0ha
  - 재난지원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현대화시설 보급률(%, 누적)	24.5	24.5	100.0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	6.8	6.8	100.0
스마트축사 보급(호)	5,750	6,002	104.0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	31.0	31.0	100.0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점)	3.7	4.1	110.8
연구개발과제 수(개)	49	4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시설 구축을 넘어서 현장 활용, 고도화와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으로 농업 생산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우수하게 수행됨.

개선 필요 사항

-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지원이 연계되어야 함.
- 정책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th><th>담당부처</th><th>농촌진흥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스마트농업 기술소개와 교육, 컨설팅을 목적으로 ICT 시설을 포함하는 하우스·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현장 전문가 양성

[내용] 1. 사업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거쳐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및 교육
3. 주요 사업 내용
•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전문지도사 양성(54명)과 맞춤형 현장 기술교육으로 스마트팜 기술 확산 제고
- (`22년) 교육 776회 11,060명, 컨설팅 703회, 현장 방문 760회, 홍보 221회</td></tr>
<tr><td colspan="5"><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달성</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 colspan="9">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률(%)</td><td colspan="3">22.6</td><td colspan="3">22.7</td><td colspan="3">100.4</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90.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본 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산어촌의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실행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실습 및 현장 중심의 교육·확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정책효과가 특정 소수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비용편익분석과 지역 단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교육의 효과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조성 연계를 독려하는 체계적인 지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생산·가공·유통·인력양성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어촌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내용] 1. 사업명: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 사업구조: 해수부가 지자체에 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2~`26)를 통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 생산단가: (현재) kg 당 10,000원 수준 → (클러스터 활성화) kg당 7,000원 수준
• 현재 전량 수입 중인 대서양연어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대기업 투자와 함께 중소양식 어가와의 상생모델 구축</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국내 양식 수산물생산량(만 톤)</td><td>222</td><td>232</td><td>105.0</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7.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본 사업은 수산 어업 인프라 및 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수산 어업 관련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함.
• 정책 집행의 추진 일정과 사업효과 및 정책환류 등이 준수하게 이루어졌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양식장 설치 추진현황이나 스마트양식 생산량 등,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함.</td></tr>
</table>

과제명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목적] 산림 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계, 임업인(재배 임가) 간 지역 협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내용] 1. 사업명: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2. 사업구조: 산림청이 계획을 총괄, 예산을 확보한 뒤 시·도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3. 주요 사업 내용

- 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와 임가의 안정적 공급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품종개량·재배기술 개발 체계 권역별 거점 조성(`19~`25, 4개소)
  - 원물 수급 연계·연구지원(비즈니스센터)+종자·묘목 개발(기술센터)+종자·묘목 증식(생산단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공정율(%)	47	47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집행 및 일정을 원활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가 공정율로만 되어 있고 거점조성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지역이 각 지역의 가공품 개발 및 생산하는 지역특화센터와 연계 전략 제시가 미흡함.

개선 필요 사항

-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신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공정율을 각 지역별로 분리하여, 구체적 공정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 있음.
- 정책 홍보실적이 특정 지역과 신문사에 집중되었으므로, 추가 홍보 노력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5] 농식품 벤처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액셀러레이터 육성)</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 산업화 도모

[내용] 1. 사업명: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2.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일부 국고보조로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22년 인턴 50명, 농식품 기업 25개사와 협약하여 총 38명이 창업 예정·완료하거나 실습기업 취업 달성<br>- 수료 인턴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인력 4명 및 약 88백만 원 매출 발생(`22.10월 기준)
• 액셀러레이터가 선발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40개사) 교육 및 데모데이, 전문가 컨설팅 등의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총 14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 달성</td></tr>
<tr><td></td><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td><td colspan="2">청년창업 인턴 지원 수(명)</td><td>50</td><td>50</td><td>100.0</td></tr>
<tr><td></td><td colspan="2">벤처·창업 기업 지원 수(개)</td><td>14</td><td>40</td><td>285.7</td></tr>
<tr><td rowspan="9">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신규 창업 희망자 및 도전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공공-민간 협력 방식의 추진모델로서 의미가 있으며,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였음.
• 인턴 파견 및 농식품 기업의 창업이 지역(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추진해 나가야 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의 효과가 특정 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농업과는 무관한 원료 조달 체계를 구축할 경우 등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턴과 액셀러레이터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창업,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연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 대학 및 창조경제센터 등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과 구체적인 연계 전략 제시가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민·관 합작 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농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내용] 1. 사업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2. 사업구조: 농식품부 출자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민간 매칭 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3. 주요 사업 내용
•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민·관 공동 투자 시장을 확대,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육성하여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농식품 펀드 투자를 받은 경영체 중 139개 경영체에서 평균 매출액 23.8% 증가, 129개 업체에서 고용인원이 14.7% 증가</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식품펀드 누적 투자실적(억 원)</td><td>10,068</td><td>10,205</td><td>101.4</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1.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산업의 확대, 신영역의 발굴과 유망 농식품 산업체의 성장을 위한 지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략성과 중요성을 지닌 사업으로 판단함.
• 사업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세부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지원 업체 수 및 일자리 증가를 조사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중견 이상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보다 지역 농특산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주체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투자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지역별 분포도를 제시하고, 지역 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한 전략제시가 필요함.
• 매출 및 일자리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수산 분야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지원 제공 및 수산펀드 운영을 통한 투자생태계 구축

[내용] 1. 사업명: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2. 사업구조: (창업투자지원) 지자체 연계하여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민간위탁을 통한 행사 주최,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 사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수산모태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 수산펀드 결성 및 투자
3. 주요 사업 내용

- 창업콘테스트,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수산모태펀드,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등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여 '발굴- 지원-투자'에 이르는 全주기 창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창업 기업 수(개소)	30	39	130.0
자조합 결성 수(건)	1	2	2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여성 및 청년의 신규 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등 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음.
- 사업의 목표와 삶의 질 개선과의 부합성, 사업 실적 달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업 효과 제시, 정책 우수사례 도출, 제도 개선 실적, 수요자 의견 반영, 홍보실적,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이 매우 잘 제시됨.

개선 필요 사항

- 창업 및 지원 기업들로 인한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민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 연관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8]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잘 가꿔진 숲을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

[내용] 1. 사업명: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2. 사업구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의 조성 계획을 승인 후, 조성 사업에 국고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변화된 여가수요 및 계층별 요구에 맞춰 시설 조성·개선
• 접근성 및 경관 다양성을 고려한 휴양림 등 휴양시설 신규 조성 및 기존시설 공간개선
•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 및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대상 숲체험 교육 확대</td></tr>
<tr><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 row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
<tr><td>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td><td>38.8</td><td>45.4</td><td>117.0</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6.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2.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사업 효과 측면에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의 확대가 필요함.
•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산림휴양·치유시설 관련한 주민 소득 창출액)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도모

[내용] 1. 사업명: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2. 사업구조: 산림청에서 위탁사업자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할 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그루매니저를 선발·운영
- 그루매니저 배치(누적) : ('18) 5 → ('20) 45 → ('22) 45개 지역
• 지역별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3년, 추가 2년 간 성장 지원
- 그루경영체 발굴(누적) : ('18) 25 → ('20) 224 → ('22) 382개</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산림일자리 발전소 운영 사업지역(개소, 누적)</td><td>45</td><td>45</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6.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사업 일정 준수 및 실적 달성이 우수하며, 정책효과가 만족도 조사 및 정책 우수사례 선정 등 객관적으로 검증됨.
• 그루매니저 만족도 조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및 일자리 수 등이 성과지표로 제시될 필요 있음.
• 중장기 사업 예측을 토대로 사업 효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수정이 요구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3-10] 말산업육성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2">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2. 사업구조: 지자체와 한국마사회가 사업신청자와 농식품부 사이에서 사업 관리 역할을 수행
3. 주요 사업 내용
•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말산업 규모(억 원) : ('19) 34,125 → ('20) 33,161 → ('21) 34,000 → ('22) 35,000
• 승마체험 인구 확대에 따른 국민여가 선용에 기여
- 정기승마(명) : ('19) 57,046 → ('20) 42,315 → ('21) 48,970 → ('22) 49,000
- 체험승마(명) : ('19) 862,510 → ('20) 454,915 → ('21) 476,154 → ('22) 480,000</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정기 승마 인구수(명)</td><td>48,000</td><td>58,659</td><td>122.2</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8.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대상 선발, 사후관리, 예산집행 등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가통계조사인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효과를 정기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음.</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별 효과 측정과 사업 방식 및 내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성과목표인 '정기 승마 인구수'의 연도별 증가를 설정할 필요 있음.</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th><th>담당부처</th><th>여성가족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내용] 1. 사업명: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2. 사업구조: 여가부와 고용부가 수립한 사업 지침과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새일센터 운영에 예산 지원하는 한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3. 주요 사업 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159개소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16만명(`22.12월 기준)이 취업에 성공<br>- 농어촌 취창업 인원: (`22년) 2,774명
• 중기부·LH 등 부처·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형태로의 여성 진출 지원
• 농어촌형 새일센터(9개소)에서 `22년 직업교육훈련 총 22개 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농어업·6차 산업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건수</td><td>2,334</td><td>2,774</td><td>115.3</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7.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준수되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여 사업의 우수성이 확보됨.
•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책 대상자들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도출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2020년 이후 9개소로 정체되어있는 농촌형 새일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 대부분이 군지역이므로 미설치 지역 확대 설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농촌 여성 노동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서비스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촌 여성 일자리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현장토론회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취창업의 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가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3">과제 개요</td><td colspan="5">[목적]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내용] 1. 사업명: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2.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거쳐 지역 농협이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사업 추진
3. 주요 사업 내용
• 농촌 내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통해 농촌후계인력 육성 및 일손 부족을 해소
•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에 따라 단계별 농업 교육과정 운영
- 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문화이해 및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기초 농업 교육 실시
-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기초 영농지식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심화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업교육 및 농촌 정착과정 교육(명)</td><td>1,500</td><td>2,225</td><td>148.3</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3.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지역농협과 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은 적절한 실행방식인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교육 운영, 다국어 교재 제작 등 정책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실행방식을 갖추었으며,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사업개선의 노력이 인정됨.</td></tr>
<tr><td>개선 필요 사항</td><td colspan="5">• 교육 설계 및 사후관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교육 욕구조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다년간 수행된 사업임으로 교육컨텐츠 및 성과지표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과제명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목적]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내용] 1. 사업명: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2. 사업구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지급액 확정 통보 및 사업 점검
3. 주요 사업 내용

- 국내인력: 인력중개센터 운영(155개소),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20개소), 도농인력 중개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인력공급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21년: 130개소→ '22: 155)를 운영하여 농업 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중개('22년, 898천명, 전년대비 19.3% ↑)
  - (체류형 영농작업반) 1개월 내외의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 지역별 농번기에 20인 내외 도시인력을 농촌에 공급, 농가에 인력지원('22년: 20개소)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22.12.)
- 해외인력: 올해 사상 최대규모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단기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22,200명 공급('22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인력 중개센터 유상중개실적(천 명)	897	898	100.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인력 수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농촌 인력 중개 및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및 처우 개선이라는 기본계획과 부합하는 정책을 수행함.

개선 필요 사항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장의 노동력 지원뿐 아니라 인권 보호 등 보완적 사업 등도 추진이 필요함.

과제명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목적] 수산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여 수산업·어촌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내용] 1. 사업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 사업구조: 해양수산부가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후 수협은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요청
3. 주요 사업 내용

- 권역별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업경영주의 인력 수급 및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
  - 일자리지원센터 9개소(중앙 1, 지역 8)
- 수산 분야 희망 의지가 확고한 내국인을 연결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매칭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채용 성사 건수	300	270	9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 효과는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사업예산 및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됨.
- 인력 중개를 통한 어업·어촌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매우 높음.

개선 필요 사항

- 정책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기반하여 정책 환류를 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과제 개요

[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인력 부족 완화 및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내용] 1. 사업명: 고용허가제(E-9)
2. 사업구조: 고용노동부가 도입 규모 결정, 선발계획 수립 후 외국인 취업 관리 제도 운영 및 귀국 지원 사업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대행 지원, 지방 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및 각종 신고처리와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3.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업 수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축산업: 소영농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총 고용 허용 인원을 각 2명 상향하고, 신규고용 허용한도 폐지
  - 어업: 일부 연근해어업은 및 양식어업의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 한도 상향, 선주가 동일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어선 간 이동을 허용하여 유연한 인력 운영을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수(개)	4,645	4,469	96.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시기별 계획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신규 인력 배치,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됨.
- 인권 문제 등 외국인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 지원 확대 등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음.

개선 필요 사항

- 외국인 인력 지원, 고용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보완·구성할 필요가 있음.